

제6차(200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남재량 · 김지경 · 성재민  
이상호 · 최효미

## 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기존의 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를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데,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3년에 제6차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이 보고서는 여섯 차례에 걸친 패널조사 가운데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을 마친 제6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1~5차 조사 자료와도 비교하고 있다.

### ◆ 조사개요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5,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들 표본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의 성패는 일차적으로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지난 제5차 조사에서 유효 원표본가구의 76%를 조사하는 데에 성공하여 패널조사로서 생명력을 잘 유지해 왔다. 이번 제6차 조사에서 유효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77.2%로서 오히려 제5차 조사보다 1.2%p 더 높다.

### ◆ 조사가구의 특성

제3장에서는 6차년도 노동패널조사에 성공한 4,592가구와 그 가구의 구성원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5년간의 노동패널 조사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변동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의 교류와 관련된 여러 특성을 다룬다.

#### ◆ 가계 경제

제4장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6차년도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지난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질문하였다. 제1절은 가계소득 부문으로서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2절은 가구의 소비를 생활비와 저축항목으로 구분하여 알아본다. 제3절은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은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다음 부채의 특성을 알아본다.

#### ◆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

제5장은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과 지출비용에 관한 내용을 가구단위와 자녀단위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가구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률을 살펴보고,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특성을 비교한다. 또한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와 이용하지 않는 자녀의 특성을 가구 및 어머니 특성별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자녀연령별 이용여부도 살펴본다. 제2절은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계의 총 지출비용을 가구 및 어머니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녀 연령별 1인당 지출금액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분석한다.

### ◆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제6장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부터 매년 생산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고용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6장은 이러한 조사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03년도 제6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개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제1절은 개인 응답자를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특성별로 비교 분석한다. 제2절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분포, 취업 중 구직활동을,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의 구직의사, 구직활동 여부,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 분석한다.

### ◆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제7장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지난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시작 시기 및 종료 시기, 산업·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수급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수는 6차년도에 4,213 명이 조사되었다. 취업자 대비로 볼 때 1차년도 62.4%에서 꾸준히 늘어 6차년도에는 취업자 중 69.4%가 임금근로자였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998년 61.7%, 2003년 65.1%에 비해 다소 높지만, 1998년 이후 꾸준히 총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늘어온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제8장은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다룬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임금근로자에게도 매년 유형설문과 취업

자용 설문을 통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특성을 들 수 있다. 특히 5차년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 생활·직무만족도 및 건강과 생활

제9장은 15세 이상 개인 응답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부분을 살펴본다. 첫째 직업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둘째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 셋째 개인의 건강 생활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앞의 여러 장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주로 다루어 왔다면, 이 장은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다룬다.

제1절에서는 직업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들로 1차년도 조사부터 포함된 직무 만족도, 직무 불일치도 등을 다루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생활 전반과 관련하여 생활 만족도를 다루고자 한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있다. 제3절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살펴본다. 개인의 건강에 대한 문항들은 지난 4차년도 부가조사에서 자세하게 질문하였으며, 6차년도 조사에서 핵심적인 문항을 중심으로 본 조사(개인용 설문과 신규용 설문)에 추가하여 질문하였다. 6차년도에 추가된 건강관련 문항은 현재의 건강상태, 육체적 장애 여부, 질병에 대한 진단경험 등이다.

### ◆ 중고령자 부가조사

한국노동패널(KLIPS)에서는 당해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조사로서 부가조사를 실시한다. 6차년도(2003년)에는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자의 은퇴생활과 비은퇴자의 은퇴계획 및 노후생활 준비, 그리고 가족관계 및 경제적 부양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에 응답한 만 50세 이상의 개인은 모두 3,530명이고, 이들은 완전은퇴자 1,171명,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기는 했으나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자 65명, 비은퇴자 1,530명, 생애 취업경험이 없는 자 76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0장은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은퇴자와 비은퇴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완전은퇴자와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는 1,023명을 ‘은퇴자’로 설정하고,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은퇴하지 않은 자 1,530명을 ‘비은퇴자’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1절에서는 은퇴자의 은퇴시기 및 은퇴사유를 성별로 나누어 비교하고, 이들의 은퇴 전 생애일자리의 특성과 은퇴 이후의 소득수준을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비은퇴자가 계획하고 있는 은퇴연령과 현재의 경제활동의 내용, 그리고 노후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경제적 준비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제3절에서는 전체 중·고령자의 가족관계와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및 경제적 부양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제4절에서는 중·고령자의 사회활동을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 제6차년도까지의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높은 표본유지율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적인 조사성공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가구소득이나 임금 등의 핵심적인 지표들 또한 국내의 다른 통계조사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가 장기화될수록 조사대상자들이 응답을 기피하는 ‘패널표본 피로증’을 극복하고 이론

성과여서 더욱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처음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시작할 당시 이 조사가 5년 정도만이라도 계속된다면 성공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실제 조사 단계에서도 그렇게 알려져 왔다. 따라서 표본가구들은 5차가 마지막이며 이후에는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6차 조사가 실시되자 패널표본들의 피로증이 나타났다. 제6차 조사는 이에 대비해서 면접원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고 실제 조사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조사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77.2%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이렇게 하여 일구어 낸 성과이다. 이러한 양적인 측면의 성과는 외국의 우수한 패널조사들에 비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설문을 디자인한 패널팀원들이 실제 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된 설문지의 조사상 논리적 오류를 걸러내고 또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접원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차적인 노력에 추가하여 데이터 클리닝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입력단계를 마친 자료상의 오류를 다시 걸러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다. 게다가 학술대회용으로 미리 공개한 자료를 사용한 학술대회 발표자들의 문제제기와 조언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질을 높이는 데에 또 한번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2005년 2월에 개최될 제 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 발표를 신청한 논문은 대학원생 경진대회 참가 논문 28편을 포함할 경우 총 99편이나 된다.

이상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한국노동패널은 명실 공히 양과 질 모두에서 안정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조사를 지속한다면, 노동시장의 중단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소중한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요 약 .....	i
제1장 머리말 .....	1
제2장 한국노동패널 6차조사의 개요 .....	9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	9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내용 .....	13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	13
2. 설문내용 .....	15
제3절 조사방법과 조사결과 .....	20
1. 조사과정 및 조사방법 .....	20
2. 조사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	24
제4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	27
1. 응답 가구의 특성 .....	27
2. 조사성공 가구원의 특성 .....	31
제5절 이사·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	35
1. 이사 가구의 특성 .....	35
2. 비원표본가구(분가가구)의 특성 .....	36
3. 비성공 가구의 특성 .....	38
4. 신규 조사자의 특성 .....	40
<보론>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	42
1.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	42
2. 2차년도 조사 이후의 가중치 부여방법 .....	43
3. 가중치 변수 및 이용방법 .....	44



제3장 조사가구의 특성 .....	46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	46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	52
1. 가구주의 특성 .....	53
2. 가구원의 특성 .....	54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	56
1. 출생아의 특성 .....	56
2. 사망자의 특성 .....	58
제4절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	60
제4장 가계 경제 .....	65
제1절 가계 소득 .....	65
1. 가구의 총소득 .....	66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	71
제2절 가계 소비 .....	74
1. 생활비 .....	74
2. 저축 .....	79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	83
1. 입주형태 및 주거 비용 .....	83
2. 주택의 종류 및 주거비용 .....	87
제4절 자산 및 부채 .....	90
1. 부동산 자산 .....	90
2. 금융자산 .....	93
3. 가구의 부채 .....	96
제5장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 .....	100
제1절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 .....	102
1. 가구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	102

2.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	107
제2절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비용 .....	113
1. 가구의 총 지출비용 .....	113
2. 연령별 자녀1인당 지출비용 .....	119
3. 지출비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 .....	123
<b>제6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b>	<b>127</b>
제1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	128
1. 경제활동상태 .....	128
제2절 취업자의 특성 .....	137
1. 산업·직업·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자의 분포 .....	137
제3절 미취업자의 특성 .....	143
1. 구직활동 및 취업 가능성, 비구직 이유 .....	143
2. 구직방법 및 구직기간, 구직시 어려움 .....	145
3.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	149
<b>제7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b>	<b>155</b>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	156
제2절 근로시간 .....	159
1. 평균근로시간 .....	159
2. 초과근로시간 .....	163
제3절 임금 .....	164
1. 임금지급주기 및 임금산정방식 .....	164
2. 월평균임금 .....	167
제4절 노동조합 .....	172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 .....	174
1. 비정규직의 규모 .....	174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	176

제8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	177
제1절 종사상 지위 .....	178
제2절 근로시간 .....	180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	180
2. 주당근로시간 .....	181
제3절 근로소득 .....	184
제4절 사업체의 창업 .....	188
제9장 생활·직무 만족도 및 건강과 생활 .....	190
제1절 직무만족도 및 불일치도 .....	191
1. 직무만족도 .....	191
2. 직무불일치와 기술(기능)의 유용성 .....	196
제2절 생활만족도 .....	201
제3절 건강과 생활 .....	206
제10장 중·고령자 부가조사 .....	212
제1절 은퇴자 .....	213
1. 은퇴시기 및 은퇴사유 .....	213
2. 은퇴자의 성별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과 현재 소득 .....	217
제2절 비은퇴자 .....	224
1. 경제활동 및 은퇴계획 연령 .....	224
2.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 .....	228
제3절 경제적 교류 및 사회활동 .....	232
1.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및 부양 .....	232
2. 사회활동 .....	239

## 표 목 차

<표 2-1> 1~6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	11
<표 2-2> 1~6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	13
<표 2-3> 개인설문지의 유형별 구성 및 6차년도 응답 결과 .....	14
<표 2-4> 6차년도(2003년) 설문 내용 .....	17
<표 2-4>의 계속 .....	18
<표 2-5>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	22
<표 2-6> 각 연도별 응답방식 분포 .....	23
<표 2-7>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	25
<표 2-8>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	26
<표 2-9> 1~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횟수 .....	28
<표 2-10> 1~6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의 가구주 특성 .....	30
<표 2-11> 1~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횟수 .....	31
<표 2-12> 1~6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의 특성 .....	34
<표 2-13> 5차년도 신규 조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	41
<표 2-14> KLIPS의 신가중치(2003년 가중치)의 사례수 .....	44
<표 2-15> KLIPS의 신가중치(2003년 가중치)의 변수명 .....	45
<표 3-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	47
<표 3-2> 연도별 세대구성 변화 추이 .....	49
<표 3-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	50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	54
<표 3-5> 1~6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	55
<표 3-6> 2~6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	57
<표 3-7> 2~6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	59
<표 3-8>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시는지 여부 .....	61
<표 3-9> 따로 사는 부모님의 생존 여부 .....	62
<표 3-10>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왕래 빈도 .....	63

<표 3-11>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	63
<표 3-12> 따로 사는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 혹은 받는 금액 .....	64
<표 4-1> 연간 가구 총소득 및 10분위 소득비교 .....	67
<표 4-2>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	69
<표 4-3> 빈곤경험 가구의 특성 .....	71
<표 4-4>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	72
<표 4-5> 1~6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	75
<표 4-6> 6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생활비 .....	76
<표 4-7> 주요 항목별 생활비 부담 .....	77
<표 4-8> 1~6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	79
<표 4-9> 6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저축액 .....	81
<표 4-10> 1~6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	84
<표 4-11> 1~6차년도 가구의 주택종류 분포 .....	87
<표 4-12> 부동산 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	91
<표 4-13> 6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동산자산 분포 .....	92
<표 4-14>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	93
<표 4-15> 6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분포 .....	96
<표 4-16> 부채 잔액 분포 .....	97
<표 4-17> 6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잔액 분포 .....	97
<표 5-1> KLIPS 6차년도 자료의 자녀교육 관련 측정항목 .....	101
<표 5-2> 분석대상 가구 .....	102
<표 5-3> 가구특성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	103
<표 5-4> 어머니특성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	104
<표 5-5>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가구와 비이용가구의 가구특성 비교 .....	106
<표 5-6>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가구와 비이용가구의 어머니특성 비교 .....	107
<표 5-7> 가구특성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	109
<표 5-8> 어머니특성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	110

<표 5-9> 연령집단별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	111
<표 5-10> 가구특성에 따른 가계의 지출비용 .....	114
<표 5-11> 어머니특성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비용 .....	116
<표 5-12> 자녀수별 가구의 지출금액 분포 .....	117
<표 5-13> 가구총소득 대비 시설이용비 지출비율 분포 .....	118
<표 5-14> 가구 총소득수준별 소득 대비 지출비용의 비율 분포 .....	119
<표 5-16> 연령집단별 가구특성에 따른 자녀1인당 지출비용 .....	120
<표 5-17> 연령집단별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자녀1인당 지출금액 .....	121
<표 5-18> 연령별 자녀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 .....	122
<표 5-19> 소득수준별 지출비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	124
<표 5-20> 지출금액 수준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	124
<표 5-21> 소득 대비 지출비율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	125
<표 5-2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정도 .....	126
<표 6-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1998~2003년) .....	127
<표 6-2> 경제활동상태 비교(1998~2003년) .....	129
<표 6-3>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1998~2003년) .....	133
<표 6-4>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1998~2003년) .....	133
<표 6-5>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1998~2003년) .....	134
<표 6-6>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특성(2003년) .....	135
<표 6-7>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인구의 비율 .....	136
<표 6-8> 노동패널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03년) .....	137
<표 6-9> 경활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03년) .....	138
<표 6-10> 노동패널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03년) .....	139
<표 6-11> 경활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03년) .....	140
<표 6-12> 산업별 및 직업별 취업자 분포 .....	140
<표 6-13>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2003년) .....	141
<표 6-14>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별 분포(2003년) .....	142
<표 6-15> 성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1998~2003년) .....	143
<표 6-16> 미취업자의 지난주 취업 가능성 여부(1998~2003년) .....	144

<표 6-17> 미취업자의 비구직 이유(2003년) .....	144
<표 6-18>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1998~2003년) .....	150
<표 6-19>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1998~2003년) .....	150
<표 6-20> 인구학적 특성별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고용 형태(2003년) .....	151
<표 6-21>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	152
<표 6-21> 미취업자가 구직시 주로 겪는 어려움 .....	154
<표 7-1> 각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1998~2003년) .....	155
<표 7-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 .....	158
<표 7-3>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1998~2003년) .....	160
<표 7-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	161
<표 7-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	161
<표 7-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	162
<표 7-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	163
<표 7-8> 임금지급주기 및 임금지급방법 .....	165
<표 7-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여부 .....	166
<표 7-10> 연도별 월평균임금 비교 .....	168
<표 7-11> 임금소득분배 추이 .....	168
<표 7-12>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 .....	169
<표 7-13>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	170
<표 7-14>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	171
<표 7-15>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비노조 가입자의 노조 비가입 이유 .....	173
<표 7-16>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 .....	175
<표 8-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1998~2003년) .....	177
<표 8-2> 1~5차년도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	178
<표 8-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	179
<표 8-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	181

<표 8-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평균 근로시간 .....	182
<표 8-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	183
<표 8-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	184
<표 8-8> 비임금근로자의 연도별 월평균소득 비교 .....	185
<표 8-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별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소득 .....	186
<표 8-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소득 .....	187
<표 8-11>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 .....	188
<표 8-12>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 .....	189
<표 9-1> 항목별 직업만족도 분포(2003년) .....	194
<표 9-2> 인구학적 특성별 교육불일치 결과(2003년) .....	197
<표 9-3>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불일치 결과(2003년) .....	198
<표 9-4>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 유용성 결과(2003년) .....	199
<표 9-5> 항목별 생활만족도 분포(2003년) .....	205
<표 9-6> 인구학적 특성별 전반적 건강상태(2003년) .....	207
<표 9-7> 건강상태별 진단경험 및 장애/육체적 제약 여부(2003년) .....	208
<표 9-8> 가구소득수준별 건강상태 비교(2003년) .....	210
<표 10-1> 은퇴자 구분 .....	214
<표 10-2> 구체적 은퇴사유의 분류 .....	214
<표 10-3> 성별 은퇴사유 .....	215
<표 10-4> 은퇴사유별 은퇴연령 .....	216
<표 10-5> 은퇴사유와 은퇴시기 .....	217
<표 10-6> 성별 인구학적 특성 및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	218
<표 10-7> 소득원천의 분류 .....	220
<표 10-8> 성별 소득원천 .....	220
<표 10-9> 가족형태와 은퇴 후 주 소득원천 .....	222
<표 10-10> 은퇴사유별 평균 소득원천의 수 및 월평균 소득액 .....	223
<표 10-11> 비은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224
<표 10-12> 비은퇴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	226
<표 10-13> 현재 일자리의 정년 유무와 정년연령 .....	227



<표 10-14> 비은퇴자의 은퇴계획 유무와 은퇴계획연령 .....	228
<표 10-15> 노후생활과 관련 연금, 예·적금, 주식투자 여부 .....	229
<표 10-16> 노후생활과 관련 연금 또는 예금의 월납부액과 주식의 총 투자액 .....	230
<표 10-17> 비은퇴자의 노후 생계를 위한 최소소득 및 적정소득 .....	231
<표 10-18> 은퇴여부에 따른 최소소득 및 적정소득 비교 .....	232
<표 10-19>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수혜여부 .....	234
<표 10-20> 가족으로부터 받는 월평균 지원금액 .....	234
<표 10-21> 가족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 .....	236
<표 10-22> 가족에게 주는 월평균 경제적 지원금액 .....	237
<표 10-23> 부모님의 생존 여부와 부양자 .....	238
<표 10-24>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양자 .....	238
<표 10-25> 친구, 이웃, 친척과 만나는 횟수 .....	240
<표 10-26> 교양과 취미활동의 이용시간 .....	240
<표 10-27> 종교모임, 친목모임, 동호회 등의 참여 횟수 .....	242
<표 10-28> 특정 단체 활동여부 및 활동단체 종류 .....	243

## 그림목차

[그림 2-1] 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평균방문횟수 .....	23
[그림 2-2] 노동패널 각 연도별 유효표본 가구수(원표본가구 유지율) ....	25
[그림 2-3] 노동패널 조사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수 .....	28
[그림 2-4] 노동패널 조사 지역별 1~6차년도 계속응답 가구비중 .....	29
[그림 2-5]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	32
[그림 2-6] 각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수 추이 .....	33
[그림 2-7] 6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	36
[그림 2-8] 6차년도 비원표본 가구수 .....	37
[그림 2-9] 각 연도별 전체응답가구 대비 비원표본가구의 비중 .....	38
[그림 2-10] 6차년도 비성공 가구의 지역별 분포 .....	39
[그림 2-11] 4차년도 비성공 사유별 5차년도 성공비율 .....	39
[그림 2-12] 비원표본 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추가된 이유 (2~6차년도) .....	41
[그림 3-1] 5차년도 거주지별 가구원수 비중 및 평균 가구원수 .....	48
[그림 3-2] 6차년도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 .....	49
[그림 3-3] 가구내 자녀수 .....	51
[그림 3-4] 가구내 자녀수 .....	52
[그림 3-5] 6차년도 성별·연령별 가구주의 분포 .....	53
[그림 3-6] 6차년도 출생아 특성 .....	57
[그림 3-7] 사망자의 사망원인 .....	60
[그림 3-8] 부모부양 가구 .....	61
[그림 4-1] 6차년도 성별·경제활동상태별 가구 총소득 .....	68
[그림 4-2] 가구의 빈곤경험 횟수 .....	70
[그림 4-3] 6차년도 가구의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의 항목별 보유 가구 분포 .....	73
[그림 4-4] 6차년도 가구의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의 항목별 보유가구	

분포 .....	73
[그림 4-5] 6차년도 가구의 가구 구성별 월평균 생활비 .....	76
[그림 4-6] 6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주요 생활비 .....	78
[그림 4-7] 1~6차년도 저축을 한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	80
[그림 4-8] 6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	82
[그림 4-9] 6차년도 가구의 가구 구성별 월평균 저축액 .....	82
[그림 4-10] 6차년도 거주지별 입주형태 분포 .....	84
[그림 4-11] 6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	85
[그림 4-12] 6차년도 거주지별 주택종류 분포 .....	86
[그림 4-13] 6차년도 거주지별 주택종류 분포 .....	88
[그림 4-14] 6차년도 거주지별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평균) .....	89
[그림 4-15] 6차년도 거주지별 아파트의 평수 및 시가(평균) .....	89
[그림 4-16] 6차년도 소유 부동산 자산의 종류 분포 .....	91
[그림 4-17] 2~6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추이 .....	94
[그림 4-18] 6차년도 가구의 거주지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	98
[그림 4-19] 6차년도 가구의 가구 구성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	99
[그림 6-1]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 비교(1998~2003년) .....	130
[그림 6-2] 각 연도별 실업률 비교(1998~2003년) .....	131
[그림 6-3] 각 연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비교 (1998~2003년) .....	132
[그림 6-4] 미취업자의 구직 방법(2003년) .....	146
[그림 6-5] 성별 미취업자의 구직방법(2003년) .....	148
[그림 6-6] 연령별 구직방법(2003년) .....	148
[그림 6-7] 교육수준별 구직방법(2003년) .....	149
[그림 6-8] 시간제 근로 희망 이유 .....	152
[그림 6-9] 성별·근로시간형태별 평균희망임금 .....	153
[그림 7-1] 임금근로자의 학력분포 .....	156
[그림 7-2] 임금근로자의 연령분포 .....	157

[그림 7-3] 임금근로자 중 성과급 받는 사람 비중 추이 .....	166
[그림 7-4] 임금근로자의 유노조비율 및 노조조직률(1998~2003년) .....	173
[그림 7-5]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	175
[그림 7-6]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 임금액 .....	176
[그림 8-1] 1~6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평균 근로시간 .....	182
[그림 8-2]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실질소득 차액 비교 ...	186
[그림 9-1]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점수 추이(1998~2003년) .....	192
[그림 9-2] 각 항목별 직무만족도 점수 비교(1998년/2003년) .....	192
[그림 9-3] 성별 직무만족도 점수 - 항목별(2003년) .....	194
[그림 9-4]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점수 - 산업별(2003년) .....	195
[그림 9-5]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점수 - 직업별(2003년) .....	195
[그림 9-6] 산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2003년) .....	199
[그림 9-7] 직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2003년) .....	200
[그림 9-8]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점수(1998~2003년) .....	201
[그림 9-9]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점수 연령별 추이(1998~2003년) .....	202
[그림 9-10]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점수 교육수준별 추이(1998~2003년) ...	203
[그림 9-11] 소득수준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	204
[그림 9-12] 경제활동상태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	204
[그림 9-13] 항목별 생활만족도 점수 비교(2003년) .....	206
[그림 9-14] 항목별 장애/육체적 제약 .....	209
[그림 9-15] 산업별 건강상태 비교(2003년) .....	210
[그림 9-16] 직종별 건강상태 비교(2003년) .....	211

## 제 1 장

## 머리말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기존의 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 자료를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데,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3년에 제6차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2004년 10월 현재 제7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 조사 역시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 보고서는 여섯 차례에 걸친 패널조사 가운데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을 마친 제6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1~5차 조사 자료와 비교한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sup>1)</sup>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5,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들 표본 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의 사활은 일차적으로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지난 제5차 조사에서 유효 원표본 가구의 76%를 조사하는데에 성공하여 패널조사로서 생명력을 잘 유지해 왔다.

※ 본 연구는 남재량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노동패널팀의 김지경(제5장, 10장), 성재민(제7장, 8장), 이상호(제2장, 6장), 최효미(제3장, 4장, 9장)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1) 각 연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해당 연도의 기초분석보고서를 찾아보면 된다.

## 2 제6차(200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이번 제6차 조사에서 유효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77.2%로서 오히려 제5차 조사보다 1.2%포인트 더 높다.<sup>2)</sup>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을 중심으로 한 노력의 결과이며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전도를 밝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가 거듭됨에 따라 패널로 선정된 표본들이 응답을 더욱 기피하는 ‘패널표본 피로증’을 극복하고 이른 성과여서 더욱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처음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시작할 당시 이 조사가 5년 정도만이라도 계속된다면 성공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표본 가구들은 5차가 마지막이며 이후에는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6차 조사가 실시되자 패널표본들의 피로증이 나타났다. 제6차 조사는 이에 대비해서 면접원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고 실제 조사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이러한 조사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77.2%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이렇게 하여 일구어 낸 성과이다. 이러한 양적인 측면의 성과는 외국의 우수한 패널조사들에 비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노동패널과 유사한 영국의 BHPS에서 6차년도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74%에 불과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설문을 디자인한 패널팀원들이 실제 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된 설문지 조사상 또는 논리적 오류들을 걸러내고 또 이러한 오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접원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차적인 노력에 추가하여 데이터 클리닝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입력 단계를 마친 자료상의 오류들을 다시 걸러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다. 게다가 학술대회용으로 미리 공개한 자료를 사용한 학술대회 발표자들의 문제제기와 조언들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질을 높이는 데에 또 한번의 좋은 계기로 작용하였다. 2005년 2월 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 발표를 신청한 논문은 대학원생 경진대회 참가 논문 28편을 포함할 경우 총 99편이나 되었다<sup>3)</sup>.

이상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한국노동패널은 명실 공히 양과 질 모두

2) 제7차 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도 78%로 더욱 높아졌다.

3) 이들 가운데 일부가 학술대회 발표논문으로 채택될 것이다.

에서 안정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후에도 한국노동패널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러 자료 사용자 제위께서도 한국노동패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탄없이 패널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주시기 바란다.

한국노동패널은 자료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노동패널이라는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는 있으나 분석기법 활용상의 한계로 인해 자료에 들어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그리고 엄밀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2005년 2월의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는 특별 분과(special session)를 마련하여 패널자료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는 보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패널분석 방법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엄밀하고 풍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우수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노동패널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제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언이 다시 한국노동패널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한국노동패널 사용을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 문화 등의 제측면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발전에 좋은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한국노동패널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보자. 한국노동패널은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된다. 부가조사는 패널조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기본조사에 덧붙여 실시하는 추가적인 조사이다. 기본조사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주거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취업자 개인(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미취업자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이동 등으로 다양하다.

본 보고서의 구성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설문과 유사하다. 제2장은 제

#### 4 제6차(200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6차 조사에 대해 개관하고 있으며, 제3장과 제4장 및 제5장은 가구에 대한 주요 조사 자료들을 분석한 것으로서 각각 조사가구의 특성, 가계 경제 및 자녀의 사교육과 보육에 대해 다룬다. 제6장부터 제9장까지는 가구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6장은 개별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를 정리하고 있으며, 제7장과 제8장은 각각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제9장은 생활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 등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마지막 제10장은 부가조사 결과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3차 조사에서 처음 실시된 부가조사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반영하여 청년층에 집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차 조사는 건강과 은퇴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고, 제6차 조사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을 반영하여 중·고령자에 대한 조사를 부가조사로 실시하였다.<sup>4)</sup>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은 6차년도 노동패널 조사에 성공한 4,592가구와 그 가구 구성원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5년간의 노동패널 조사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변동을 알아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과 교류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다룬다.

제4장은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성들을 살펴보고 있다. 6차년도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질문하였다. 제1절은 가계소득 부문으로서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2절은 가구의 소비를 생활비와 저축항목으로 구분하여 알아본다. 제3절은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은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다음 부채

4) 7차조사는 '근로시간과 여가'에 대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 특성을 알아본다.

제5장은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 이용하는 종류와 이용횟수, 이용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5가지까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사교육과 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1999년)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고,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는 그 대상을 재수생 이하 자녀로까지 확대하여 조사했다.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되는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종류는 ① 학원, ② 개인 및 그룹과의, ③ 학습지, ④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별도의 수업료를 지불한 경우), ⑤ 방과후교실(학교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특기지도 혹은 보충학습), ⑥ 국공립어린이집, ⑦ 민간어린이집, ⑧ 놀이방, ⑨ 직장보육시설, ⑩ 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⑪ 일반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종류가 5차년도(2002년)까지는 조사되었으나, 6차년도(2003년) 조사에서는 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 및 보육 시설의 종류와 이용횟수, 그리고 이용시간을 제외한 이용여부와 월평균 수업료만을 간략하게 조사하였다.

제5장은 6차년도에 조사된 항목을 중심으로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과 지출비용에 관한 내용을 가구단위와 자녀단위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가구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고,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특성을 비교한다. 또한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와 이용하지 않는 자녀의 특성을 가구 및 어머니 특성별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자녀연령별 이용여부도 살펴본다. 제2절은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계의 총 지출비용을 가구 및 어머니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녀 연령별 1인당 지출금액의 정도를 파악하고

## 6 제6차(200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이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분석한다.

제6장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부터 매년 생산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고용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6장은 이러한 조사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03년도 제6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개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제1절은 개인 응답자들을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특성별로 비교 분석한다. 제2절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분포, 취업 중 구직활동을,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의 구직의사, 구직활동 여부,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 분석한다.

제7장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을 살펴본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 시작 시기 및 종료 시기, 산업·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수급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수는 6차년도에 4,213명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자 대비로 볼 때 1차년도 62.4%에서 꾸준히 늘어 6차년도에는 취업자 중 69.4%가 임금근로자였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998년 61.7%, 2003년 65.1%에 비해 다소 높지만, 1998년 이후 총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제8장은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다룬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임금근로자에게도 매년 유형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특성들을 들 수 있다. 특히 5차년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제9장은 15세 이상 개인 응답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부분을 살펴

본다. 첫째 직업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둘째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 셋째 개인의 건강 생활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앞의 여러 장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주로 다루어 왔다면, 이 장은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다룬다.

제1절은 직업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들로 1차년도 조사부터 포함된 직무 만족도, 직무 불일치도 등을 다룬다.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1차년도부터 취업자의 일자리에 관해서 임금, 취업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를, 특히 임금근로자의 경우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복리후생제도에 관한 만족도를 묻고 있으며, 3차년도 조사부터 전반적인 직업만족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교육이나 기술(기능) 수준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 혹은 기술(기능) 수준 간의 불일치도를 1차년도 조사부터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본인의 기술(기능)의 유용성에 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제2절은 생활 전반과 관련하여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다.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친인척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있다.

제3절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개인의 건강에 대한 문항들은 지난 4차년도 부가조사에서 자세하게 질문하였으며, 6차년도 조사에서 핵심적인 문항을 중심으로 본 조사(개인용 설문과 신규용 설문)에 추가하여 질문하였다. 6차년도에 추가된 건강관련 문항은 현재의 건강상태, 육체적 장애 여부, 질병에 대한 진단경험 등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당해 연도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심층조사로 부가조사를 실시한다. 3차년도(2000년)에는 만 30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경제활동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졌고, 4차년도(2001년)에는 ‘건강과 은퇴’를 주제로 만 15세 이상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노동시장의 활동과 연계된 내용이 다루어졌으며, 만 45세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을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개인과 은퇴하지 않은 개인으로 나누어 은퇴생활 및 은퇴계획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

었다. ‘건강과 은퇴’에 이어 6차년도(2003년)에는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자의 은퇴생활과 비은퇴자의 은퇴계획 및 노후생활 준비, 그리고 가족관계 및 경제적 부양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에 응답한 만 50세 이상의 개인은 모두 3,530명이고, 이들은 완전은퇴자 1,171명,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기는 했으나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자 65명, 비은퇴자 1,530명, 생애 취업경험이 없는 자 76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노동패널 4차년도 ‘건강과 은퇴’와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는 은퇴를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조사당시 시점에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개념화하고, 은퇴상태에 있는 개인을 은퇴자로 정의하였다. 이 같은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현재의 주된 경제활동참가 여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잘 반영된 정의이다.

제10장은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은퇴자와 비은퇴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완전은퇴자와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는 1,023명을 ‘은퇴자’로 설정하고,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은퇴하지 않은 자 1,530명을 ‘비은퇴자’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1절에서는 은퇴자의 은퇴시기 및 은퇴사유를 성별로 나누어 비교하고, 이들의 은퇴 전 생애일자리의 특성과 은퇴 이후의 소득수준을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비은퇴자가 계획하고 있는 은퇴연령과 현재의 경제활동의 내용, 그리고 노후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경제적 준비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제3절에서는 전체 중·고령자의 가족관계와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및 경제적 부양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제4절에서는 중·고령자의 사회활동을 분석한다.

제 2 장

한국노동패널 6차조사의 개요

제 1 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4년 10월에 7차년도 실사까지 완료되었다.<sup>5)</sup>

패널자료는 횡단면적 자료와 시계열 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패널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60년부터 패널조사를 시행한 미국은 현재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1966년부터 시작된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와 1979년부터 시작된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그리고 가구와 개인의 소득 및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1968년에 시작된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등의 패널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5)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노동부의 고용보험 연구사업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승인번호 : 33601).

패널조사로는 미국 국가교육통계센터(National Education Statistics Center)에서 주관하여 1988년부터 조사되고 있는 국가교육종단연구조사인 NELS(National Education Logitudinal Study)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BPS(Beginning Post-secondary Student Longitudinal Study),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B&B(Baccalaureate and Beyond Longitudinal Study)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국 외에도 1993년에 시작된 캐나다의 SLID(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 1991년에 시작된 영국의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1984년에 시작된 독일의 GSEP(German Socio-Economic Panel) 등이 있다<sup>6)</sup>.

한국의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패널조사는 1993년부터 대우 경제연구소에 의해 수행된 한국가구패널조사(Korea Household Panel Study : KHPS)가 있으나 199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가구 패널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이 유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국내에서도 개인단위의 표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패널조사가 시도되고 있다. 우선 청년층의 고용, 교육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에서 2001년부터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패널 조사(Youth Panel)’가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2004년부터 ‘청년층 교육·고용 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 KEEP)’의 1차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청소년개발원에서도 2004년부터 청소년 패널구축이 시작되고 있다.

지금부터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진행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2-1>을 통해서 조사년도별 경과를 살펴보면, 1998년에 실시된 1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원표본 5,000가구 총인원 17,505명 중 3,775가구가

6) 아시아 지역의 패널조사로는 1993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IFLS(Indonesia Family Life Survey)를 비롯하여 일본의 JPSC(Japanese Panel Survey on Consumers), 대만의 PSFD(Panel Study of Family Dynamics), 2001년도부터 조사가 시작된 호주의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r Dynamics in Australia) 등이 있다. 한편 전 세계의 패널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미국의 PSID 홈페이지 중 세계 각국의 패널조사를 소개한 페이지(<http://www.isr.umich.edu/src/psid/panelstudies.html>)를 참고.

〈표 2-1〉 1~6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조사성공 가구수 <sup>1)</sup>	원표본 가구수 <sup>2)</sup>	표본 유지율 <sup>3)</sup>	분가 가구수	가구원 수 <sup>4)</sup>	실사 기간
1차조사('98)	5,000	5,000	100.0	-	13,321	6월~10월
2차조사('99)	4,509	4,379	87.6	130	12,042	7월~12월
3차조사('00)	4,267	4,045	80.9	222	11,206	5월~10월
4차조사('01)	4,248	3,865	77.3	383	11,051	5월~10월
5차조사('02)	4,298	3,798	76.0	500	10,966	4월~9월
6차조사('03)	4,592	3,862	77.2	730	11,543	4월~9월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년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년도에 조사 성공한 유효표본가구의 비임.

4)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조사 성공되어 원표본 성공률은 75.5%였으며 추가 표본으로 1,225가구를 조사하여 총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였다. 이 중 15세 이상 가구원 13,738명 중에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은 13,317명이었다.

1999년에는 한국노동패널 제1차 조사에 포함된 원(原)표본가구<sup>7)</sup>에 대하여 제2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2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sup>8)</sup>는 4,379가구로 표본유지율은 87.6%이며, 원표본가구의 가구원이 분가하여 새로 일가를 이룬 경우 이들을 추적조사한 130분가가구<sup>9)</sup>를 포함하여 제2차 조사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509가구였다.

7) '원표본가구'는 제1차년도에 표본으로 추출되어 1차 조사완료된 유효표본가구를 의미한다.

8) '유효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표본가구를 의미하는데, 조사대상 표본가구에 속한 면접대상 가구원, 특히 우선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응답한 '면접대상자'들이 설문문의 거의 모두와 핵심적 문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하여 조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중인 가구원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하며, 우선 조사대상 전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만이 '유효표본가구'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9) '분가가구' 1차년도 조사시에는 '원표본가구원'이었으나 조사 이후 결혼이나 세대분리

개인응답자를 기준으로 볼 때, 제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 11,237명을 재조사하는 데 성공하여 84.4%의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2000년에는 제3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3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80.9%이며 분가한 222가구를 포함하여 제3차 조사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267가구였다. 제3차 조사의 총 응답가구원은 11,206명이며 이 중 기존 조사자는 10,740명이고 신규 조사자는 466명이었다.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는 10,540명을 재조사하는데 성공하여 79.1%의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2001년에 실시된 제4차 조사에는 총 4,248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원표본가구는 3,865가구로 77.3%의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분가한 가구는 383가구이며 총 응답가구원은 11,651명이었다. 가구원의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 4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은 11,051명이었으며 이 중 기존 조사자는 10,607명, 신규 조사자는 444명이었다. 4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 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10,332명이며 신규 조사자 중 원가구원은 240명이었다.

2002년에 실시된 제5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는 원표본 3,798가구 및 분가한 500가구를 합하여 총 4,298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6%로 전년도에 비해 약 1%p가 감소하였다. 표본유지율을 개인단위로 살펴보면 조사에 성공한 개인 10,966명 중에서 기존 조사자는 10,557명이며, 새로 진입한 신규가구원도 409명에 이른다.

2003년에 실시된 제6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는 원표본 3,862가구 및 분가한 730가구를 합하여 총 4,592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7.2%로 전년도에 비해 1.2%p가 증가하였다. 한편, 개인응답자는 전체 11,543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0,985명, 새로 진입한 신규가구원이 558명이었다.

전반적인 실사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노동패널은 이제 종단면 조사로

---

등으로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형성한 가구 또는 분가하여 들어간 다른 가구를 말한다.



서 확고한 안정성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조사가 수행될 경우 각종 노동정책의 수립 및 평가,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기초자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 2 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내용

###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크게 가구용과 개인용으로 나누어지며, 개인용은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나누어지고,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진다. <표 2-2>를 통해서 연도별로 노동패널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1~6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1차년도 (1998)	2차년도 (1999)	3차년도 (2000)	4차년도 (2001)	5차년도 (2002)	6차년도 (2003)
가구용 자료			○	○	○	○	○	○
개 인 용 자 료	유형 ①~⑧		×	○	○	○	○	○
	개 인 공 통	취 업 자	임금 근로	○	○	○	○	○
			비임금 근로					
		미취업자	○			○	○	○
신규용 자료			×	○	○	○	○	○
부가조사 자료			×	×	○	○	×	○

주: 3차년도는 청년층, 4차년도에는 건강과 은퇴, 5차년도에는 중·고령자에 대한 부가 조사가 실시되었음.

1998년 1차년도 조사자료는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로 나누어지고, 개인용 자료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2차년도 조사자료는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 및 이동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일자리별 유형 설문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밖에 가구용, 개인 공통, 그리고 연령이 15세가 되거나 혼인 등으로 조사가구에 편입되어 조사에 새로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응답자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0년에 실시된 3차년도 조사자료는 가구용과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로 나눈 개인용 자료, 신규, 그리고 부가조사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3차년도부터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차년도에는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이동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4차년도 조사자료는 3차년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개인용 자료의 경우 임금·비임금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취업자 공통으로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부가조사의 경우 청년층 조사에 이어서 ‘건강과 은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2년 5차년도 조사에서는 별도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조사자료 형태는 기존자료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6차년도에는 4차년도 부가조사에서 다루었던 ‘건강과 은퇴’라는 주제에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 및 은퇴과정에 집중하여 만 50세(1953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개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중·고령자’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3> 개인설문지의 유형별 구성 및 6차년도 응답 결과

		지난 조사 당시부터 계속된 일자리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시작한 일자리	
		임금	비임금	임금	비임금
일자리 지속 여부	지속	유형 ① (2,839명)	유형 ③ (1,727명)	유형 ⑤ (1,405명)	유형 ⑦ ( 361명)
	중단	유형 ② (1,183명)	유형 ④ ( 348명)	유형 ⑥ ( 180명)	유형 ⑧ ( 20명)

2차년도 조사부터 등장한 유형 설문은 지난 조사의 일자리 관련 응답 사항과 현재 일자리 관련 응답 사항을 토대로 모두 8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2-3>과 같다. 유형 설문의 응답 대상은 지난 조사 당시, 또는 조사 이후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개인이며, 유형설문지에는 일자리의 업종, 직종, 근로형태와 임금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유형 ①~유형 ④는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응답자로 유형 ①과 유형 ③은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유형 ②와 유형 ④는 지난 조사 당시 하던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이다. 유형별 정의를 살펴보면, 유형 ①은 지난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현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유형 ②는 지난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현재 그 일을 그만둔 경우이다. 유형 ③은 지난 조사 당시 비임금근로자로 현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유형 ④는 지난 조사 당시 비임금근로자로 현재 그 일을 그만둔 경우이다. 유형 ⑤는 지난 조사 이후 새롭게 취업한 일자리로 현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임금근로자가 해당되며, 유형 ⑥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로 현재 그 일을 그만둔 임금근로자가 해당된다. 유형 ⑦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로 현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가 해당되며, 유형 ⑧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로 현재 그 일을 그만둔 비임금근로자가 해당된다.

6차년도 노동패널조사에서 신규진입자를 제외한 기존응답자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다. 1개 이상의 유형설문지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전체 개인조사 응답자의 62.5%인 6,864명이며, 이 중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를 가졌던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54.7%인 6,00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6차년도에 조사된 총일자리 수는 8,282개이며, 이 중 유형 ①이 34.3%(2,839개), 유형 ②가 14.3%(1,183개), 유형 ③이 20.9%(1,727개), 유형 ④가 4.2%(348개), 유형 ⑤가 17.0%(1,405개), 유형 ⑥이 2.2%(180개), 유형 ⑦이 4.4%(361개), 유형 ⑧이 0.2%(20개), 그리고 신규 조사자의 일자리가 1.4%(119개)이다.

## 2. 설문내용

한국노동패널조사의 6차년도 설문지의 본 설문 부분은 가구용설문, 예비조사설문, 유형설문, 취업자용 및 미취업자용 설문, 신규 조사자용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외에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설문내용<sup>10)</sup>을 구성별·조사 자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4 참조).

우선 가구용 설문은 크게 가구원과 관련된 내용과 전체 가구 관련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5차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설문 내용상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가구원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난 조사와 동일하게 가구원의 성별·연령·학력·가구주와의 관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 이외에 가구원의 추가·분가·사망 등 가구원의 변동사항이 조사되었다. 가구단위로 조사된 내용 역시 지난 조사와 같이 주거(변동)상황,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관계, 가구의 소득·소비·자산·부채 등이 조사되었다. 다만 생활비에서 ‘피복비’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보험의 종류에도 건강보험을 추가하였다. 이 외에도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과 관련하여 사교육·보육기관 종류, 이용횟수 등을 제외시키는 동시에 교육종류별 수업료 항목도 자녀 1인당 수업료로 단순화하였다.

개인단위로 조사하는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에게 어떠한 유형설문으로 조사할 것인가를 판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예비설문, 기존의 응답자에 대해 일자리 단위별로 조사하는 유형설문, 유형설문에서 조사되는 내용 이외에 개인단위의 질문으로 구성된 취업자용 및 미취업자용 설문, 새로 조사에 진입한 응답자에 대해 조사하는 신규조사자용 설문, 마지막으로 만 50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령자 설문으로 구분하였다.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⑤, 유형 ⑥)으로 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 형태 및 규모, 근로계약상태, 근로시간, 임금, 일자리 단위로 가입하는 사회보험 관련 내용, 노동조합, 구직활동 등은 기존의 조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에 일자리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방식인 기업체규모(본사, 지점 등 포함)의 측정 이외에 사업체 규모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추가하였다.

10) 1~6차년도 조사자료의 설문내용은 각 연도별 설문지 및 ‘KLIPS 1~6차 User’s Guide’를 참조.

〈표 2-4〉 6차년도(2003년) 설문 내용

가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의 인적 사항</li> <li>▪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문항</li> <li>▪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문항</li> <li>▪ 주거 관련 문항</li> <li>▪ 자녀교육 및 자녀 보육 관련 문항</li> <li>▪ 가구의 소득</li> <li>▪ 가구의 소비</li> <li>▪ 가구의 자산과 부채</li> <li>▪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li> </ul>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 여부</li> <li>▪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 여부</li> </ul>
유형①, 유형② 유형⑤, 유형⑥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li> <li>▪ 일자리 형태 및 규모</li> <li>▪ 근로계약 관련 문항</li> <li>▪ 근로시간 관련 문항</li> <li>▪ 임금 관련 문항</li> <li>▪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li> <li>▪ 일자리의 노동조합</li> <li>▪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li> <li>▪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li> <li>▪ 구직활동 관련 문항</li> </ul>
유형③, 유형④ 유형⑦, 유형⑧ (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li> <li>▪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li> <li>▪ 일자리의 근로시간</li> <li>▪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li> <li>▪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li> <li>▪ 구직활동 관련 문항</li> <li>▪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li> <li>▪ 현재 하는 사업의 가치(금액으로 환산)</li> <li>▪ 사업체의 장기적 전망</li> <li>▪ 임금근로자로의 전직의사</li> <li>▪ 사업체 시작 당시 비용 혹은 투자액</li> <li>▪ 사업비용 조달방법</li> <li>▪ 창업과정의 어려움</li> </ul>

<표 2-4>의 계속

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상태</li> <li>▪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li> <li>▪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li> <li>▪ 근로시간 관련 문항</li> <li>▪ 직무만족도</li> <li>▪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li> <li>▪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li> <li>▪ 교육 및 직업훈련</li> <li>▪ 사회보험 수급 관련 문항</li> <li>▪ 학교명, 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 등 정규교육 관련 문항</li> <li>▪ 대학입학 수능시험 치른 연도, 시험점수(30세 이하만 해당)</li> <li>▪ 혼인상태</li> <li>▪ 비정규직의 고용조정, 파견근로 여부 등(임금근로자만 해당)</li> <li>▪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li> </ul>
미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상태</li> <li>▪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li> <li>▪ 교육 및 직업훈련</li> <li>▪ 사회보험 수급 관련 문항</li> <li>▪ 학교명, 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 등 정규교육 관련 문항</li> <li>▪ 대학입학 수능시험 치른 연도, 시험점수(30세 이하만 해당)</li> <li>▪ 혼인상태</li> <li>▪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li> </ul>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설문 의 모든 내용 포함</li> <li>▪ 만 15세 이후의 이전 일자리의 경력</li> <li>▪ 부모님의 학력</li> <li>▪ 만 14세 무렵의 아버님(계시지 않았던 경우 어머님)의 경제활동상태</li> <li>▪ 출생지와 만 14세 무렵의 주요 성장지</li> <li>▪ 혼인력과 출산력</li> </ul>
중·고령자 부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상태의 판별, 은퇴시기, 은퇴사유, 은퇴계획</li> <li>▪ 현재 취업유무, 현재 일자리의 정년유무, 정년시기</li> <li>▪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의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취업기간, 직장규모, 근로시간, 정년, 그만둔 사유, 임금(소득)</li> <li>▪ 만 45세 당시의 일자리 특성(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등)</li> <li>▪ 현재의 소득원천, 연금 및 보험 납부액</li> <li>▪ 자녀 수,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가족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li> <li>▪ 부모님 부양 주체, 이웃과의 교류, 여가활동, 건강상태</li> </ul>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유형 ③, 유형 ④, 유형 ⑦, 유형 ⑧)으로 일자리의 종업원 수, 근로시간, 매출액과 소득, 구직활동 관련 문항, 직업 및 산업 등은 동일하게 조사하였다. 그러나 지난 조사에서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던 유형 ③ 설문문의 현재 사업의 가치 및 장기적 전망 등은 삭제하였다.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개인을 취업자 혹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조사한 설문에는 공통적으로 경제활동상태, 구직활동, 사회보험수급, 학교명, 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 등 정규교육 관련 문항, 혼인상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등이 기존의 조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나, 5차년도에 조사되었던 대학입학 수능(학력고사)시험 여부와 시험점수 등의 항목들은 지난 조사에서 응답의 편향(bias)이 나타남에 따라 제외되었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관련 추가문항, 직무만족도,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등이 조사되었으며,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성, 비구직사유 등 미취업 상태와 관련된 문항이 조사되었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 주된 일자리가 임금근로인 경우에는 비정규직 실태와 관련된 문항을 유지하였다. 취업/미취업자용 설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이 추가되었다. 먼저,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연간 근로소득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세전·세후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한편, 교육관련 문항도 대폭 추가되었는데, 여기에는 평생학습이나 고등학생의 성적과 진학,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 등에 대한 항목들이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인단위의 가족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형제자매의 수와 관련된 문항을 추가하였다.

신규용 설문은 당해년도에 조사되는 유형 ①~유형 ⑧에 해당되는 모든 설문내용 및 취업자·미취업자용 설문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단위의 조사에 처음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만 15세 이후에 가졌던 일자리의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학력, 만 14세 무렵 부모님의 경제활동상태, 출생지와 만 14세 무렵의 주요 성장지 및 혼인력과 출산력에 대한 조사까지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용 설문에는 개인용 설문에서 반영된 모든 변경사항이

동일한 구조로 반영되었다.

부가조사는 주요 이슈에 대해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심층 조사이다. 6차년도에는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및 중·고령자 은퇴 문제에 대응하여 만 50세 이상 모든 개인들을 대상으로 ‘중·고령자 부가조사’가 실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여부와 은퇴 시기, 은퇴이유와 은퇴 당시 상황, 은퇴계획 시기(이상 은퇴관련), 현재 직업활동과 생애 가장 주된 일자리의 특성, 만 45세 당시 취업활동(일자리 특성관련), 현재의 소득원과 노후 생활대비 저축여부(노후생활), 가족 관계, 부양의무 및 사회관계, 그리고 건강상태에 관련된 내용 등이다.

### 제 3 절 조사방법과 조사결과

#### 1. 조사과정 및 조사방법<sup>11)</sup>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실사는 민간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6차년도 조사는 2003년 4월에서 9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가구의 표본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에 개인용 설문지를 면접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이 설문지 작성을 미루거나 거

11)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틀 및 추출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인터넷 사이트(<http://www.kli.re.kr/klips>)를 참고.



부할 경우, 응답 시기가 가구용 설문지와 달라지게 되고, 한 가구 내에서도 개인간의 응답 시기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용 설문은 주로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면접하였으나 일부는 자녀나 노부모를 통한 설문 응답도 있었다. 가구용 설문지는 반드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개인용 설문지는 직접 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장기 출타 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전화로 재확인 작업을 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실시하는 기간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소년원·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 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은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표 2-5>는 각 연도별 조사방식이 어떤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면접조사의 비중이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치고 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6차년도에는 86.3%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7%나 되었지만, 6차년도에는 1.7%로 그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화조사는 1~6차년도 기간 내내 거의 시도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다른 조사방식들에서도 거의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개인응답자수(신규 포함)	13,321	12,042	11,206	11,051	10,966	11,54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면접	64.4	77.7	83.0	83.7	83.8	86.3
(2) 유치	21.7	7.6	5.1	3.3	2.6	1.7
(3) 전화	1.5	7.4	5.3	4.6	3.9	3.8
(4) 면접+전화	2.6	4.7	3.8	4.9	6.4	5.7
(5) 유치+전화	3.7	2.5	1.4	1.2	1.0	0.9
(6) 면접+유치	2.6	0.0	0.9	1.8	1.0	1.3
(7) 면접+유치+전화	0.0	0.0	0.2	0.5	1.3	0.4

<표 2-6>은 대리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대리응답의 비중은 19.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약 1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주요 대리응답 사유로는 조사대상자의 귀가가 너무 늦어 면접 자체가 힘들거나, 혹은 수험생을 둔 부모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녀의 면접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사례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방문 횟수는 평균 2.9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1). 이 중 서울/대구/경북지역은 평균 3.4회 정도 방문하여야 조사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충남과 대전지역은 1.8회의 방문으로도 조사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성공률이 낮은 지역은 조사성공을 하는 데에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사의 양적·질적 성공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과거부터 다양하고 체계적인 실사 관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면접원에게 조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조사가 시작되기 전 노동부 공문 및 노동패널 소식지를 발송하고, 이사가구의 추적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도 공문을 발송한다. 만일 조사대상가구가 이사한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알려 오면 선물을 제공하며, 생일카드도 보내고 있다. 특히, 4차년도 조사부터는 응답 가구에 대해 3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조사응답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조사 종료 후 10여 가구를 추첨하여 선물을 지급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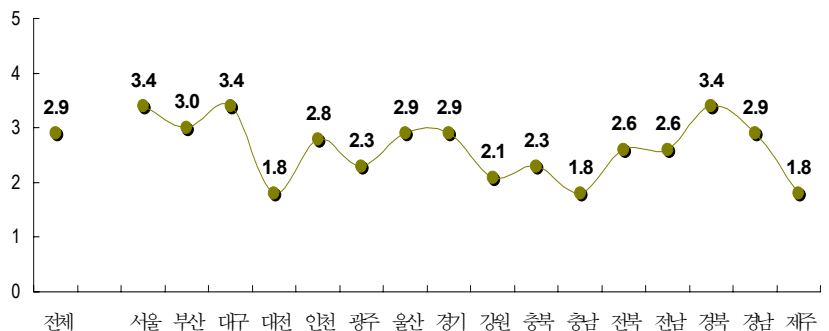
〈표 2-6〉 각 연도별 응답방식 분포

(단위: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개인응답자수(신규 포함)	13,321	12,042	11,206	11,051	10,966	11,54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본인	74.0	88.6	88.3	83.3	83.8	83.1
(2) 대리인	19.7	11.3	8.1	11.0	9.8	11.2
(3) 본인+대리인	0.4	0.0	3.6	5.5	6.4	5.8

〔그림 2-1〕 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평균방문횟수

(단위: 회)



한편, 조사대상가구가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응답자와 직접 접촉하게 되는 면접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매년 조사가 시작되기 전 면접원을 대상으로 당해년도에 변경된 설문 내용과 면접시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 중에도 각 지역의 실사 감독자와 면접원을 대상으로 실사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의 관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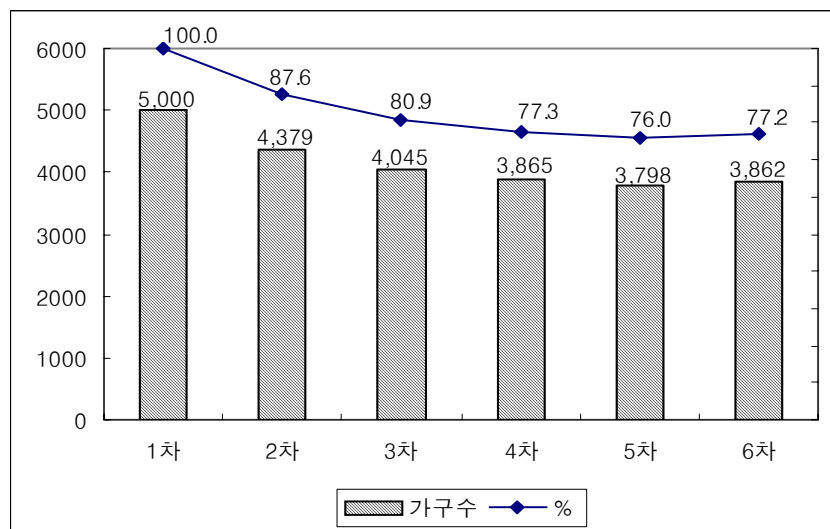
## 2. 조사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표본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차년도 한국 노동패널조사의 총 조사표본은 4,592가구와 그 가구 내에 포함된 가구원 14,961명이며, 이들 중에서 15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의 수는 기존조사자 10,985명과 신규조사자 558명을 합한 11,543명이다. [그림 2-2]를 통해서 유효표본가구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차조사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원표본가구의 87.6%인 4,379가구였으며, 3차조사에서 성공한 가구수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80.9%에 해당한다. 4차조사에서 성공한 가구수는 3,865가구로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77.3%이며, 5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가구수는 전년도에 비해 1.3%p가 하락한 3,798가구로 76%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6차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1.2%p가 증가한 77.2%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유지율은 외국의 주요 패널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7>은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2차년도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미국의 PSID나 독일의 GSEP, 영국의 BHPS와 비슷한 88%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패널조사 초기에 표본이탈률이 높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3차년도의 표본유지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독일의 패널조사에 비해 5%p 낮으나 영국의 BHPS에 비해서는 2%p 낮다. 4차년도의 유지율은 미국에 비해서 7%p, 독일에 비해서는 8%p, 영국에 비해서는 2%p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5차년도의 유지율은 외국패널과의 격차가 다소 좁혀져서 미국과 독일에 비해서는 5%p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영국에 비해서는 오히려 1%p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가 6차년도에는 표본유지율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미국 및 독일과의 격차가 2%p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 6차년도 조사에서 종료되었던 대우패널(KHPS)과 달리, 한국노동패널은 향후에도 장기적인 조사 성공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패널조사 표본은 표본설계 당시의 모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이탈률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임의의 특성에 따라 편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추출은 인구주택 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15개 광역시 및 도를 층화하여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지역에 따라 고른 조사성공률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2] 노동패널 각 연도별 유효표본 가구수(원표본가구 유지율)



<표 2-7>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단위: %, 년도)

	미국 PSID	독일 GSEP	영국 BHPS	대우 KHPS	KLIPS
2차년도	89 (1969)	90 (1985)	88 (1991)	79 (1994)	88 (1999)
3차년도	86 (1970)	86 (1986)	83 (1992)	68 (1995)	81 (2000)
4차년도	84 (1971)	85 (1987)	79 (1993)	62 (1996)	77 (2001)
5차년도	81 (1972)	81 (1988)	75 (1993)	60 (1997)	76 (2002)
6차년도	79 (1973)	79 (1989)	74 (1994)	종료	77 (2003)

주: 영국의 BHPS는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임.

〈표 2-8〉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단위: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서울	100.0	84.9	75.2	68.4	69.7	73.5
부산	100.0	90.5	87.9	85.0	84.6	80.8
대구	100.0	84.1	72.9	67.5	71.5	76.9
대전	100.0	83.7	81.7	81.0	76.4	80.3
인천	100.0	85.6	83.2	74.5	76.3	75.2
광주	100.0	78.5	69.0	77.2	81.3	80.3
울산	100.0	96.5	95.7	88.8	86.2	85.3
경기	100.0	90.2	83.3	78.4	72.2	76.7
강원	100.0	87.7	81.5	71.5	66.2	62.2
충북	100.0	87.6	76.1	82.8	75.0	70.5
충남	100.0	91.6	90.8		83.1	84.7
전북	100.0	88.9	74.4	87.7	83.4	81.4
전남	100.0	92.1	93.0		87.3	82.1
경북	100.0	89.4	81.0	80.7	80.9	83.0
경남	100.0	90.1	91.1	93.0	85.5	83.0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유지율을 조사지역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격차가 매년 감소하여 수렴하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및 경기도의 표본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 지역의 조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표본 성공 비율을 살펴보면 (표 2-8 참조), 6차년도 조사에서 원표본 조사성공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85.3%를 기록한 울산지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84.7%를 기록한 충남지역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중 조사성공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2.2%를 보이고 있는 강원지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70.5%의 성공률을 기록한 충북지역이었다. 서울, 인천, 경기도의 조사성공률은 각각 73.5%, 75.2%, 그리고 76.7%로 평균치보다는 약간 낮으나 이전 연도에 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산을 포함한 경남지역과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역은 1

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이는 6차년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부산과 경남은 각각 80.8%와 83.0%의 조사성공률을 보였으며, 광주, 전북, 전남지역도 각각 80.3%, 81.4%, 82.1%의 성공률을 보였다. 한편, 대구와 경북지역은 같은 지역권역에 속하면서도 상반된 성공률을 나타내었다. 대구의 경우 6차년도 성공률이 76.9%로 전체평균보다 약간 낮지만, 경북지역은 83.0%으로 비교적 높은 성공률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한국노동패널의 조사성공률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해가 거듭될수록 지역별 편차가 대체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러한 지역별 성공률 격차가 조사의 신뢰도를 침해할 정도로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제 4 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 1. 응답 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만일 조사 중간에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는 가구의 비중이 많다면, 실사과정의 어려움은 물론이요 궁극적으로는 자료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표 2-9>는 1~6차년도 기간동안 조사성공가구가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의 수는 5,838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85.6%,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비원가구는 14.4%이다. 원가구 중에서는 1~6차년도 기간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가 61.7%, 5회 이상 응답한 가구가 11.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가가구 중에서 5차년도 모두 조사에 응답한 가구가 8.7%인 반면, 1회만 응답한 가구가 3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가가구의 경우 조사 진입년도가 가구별로 다르므로 이러한 비중만으로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는 정도, 즉 조사에 대한 충성도(loyalty)를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차년도 분가가구(130가구) 중 2~6차년도 모두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56.2%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원가구의 조사에 대한 충성도가 전반적으로 비원가구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9〉 1~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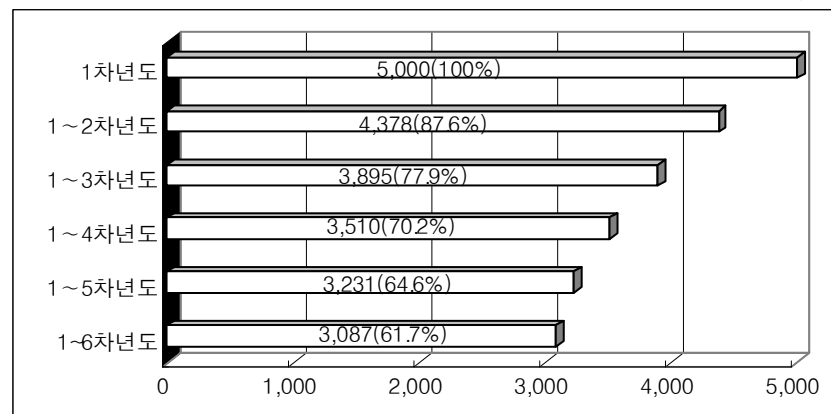
(단위: 가구수,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전체
전체	593 (10.2)	483 ( 8.3)	523 ( 9.0)	498 (8.5)	654 (11.2)	3,087 (52.9)	5,838 (100.0)
원가구	273 (5.5)	321 (6.4)	346 (6.9)	392 (7.8)	581 (11.6)	3,087 (61.7)	5,000 (100.0)
비원가구	320 (38.2)	162 (19.3)	177 (21.1)	106 (12.7)	73 (8.7)	-	838 (100.0)

[그림 2-3]은 한국노동패널 조사 연도별로 계속해서 응답한 가구수와 1차년도 대비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1~6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응답한 가구는 3,087가구로, 1차년도 5,000 원표본가구의 61.7%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원표본 비중이 2차년도의 경우 87.6%를 보여주었으며, 3차년도에 77.9%, 4차년도에 70.2%, 5차년도에는 64.6%를 보여주고 있어 매년 원표본 비중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노동패널 조사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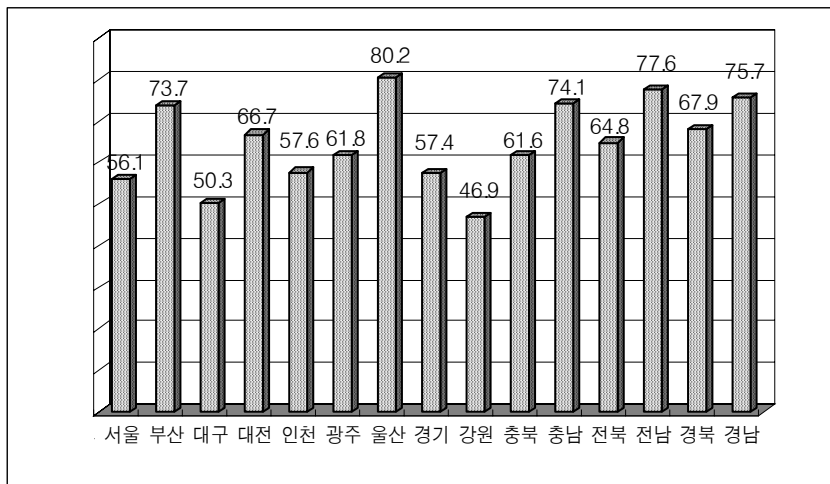
(단위: 가구, %)





[그림 2-4] 노동패널 조사 지역별 1~6차년도 계속응답 가구비중

(단위: %)



[그림 2-4]를 통해서 6차년도 현재 원가구 대비 지역별 계속응답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강원과 대구지역이 각각 46.9%와 50.3%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서울과 경기지역도 각각 56.1%와 57.4%로, 이들 네 지역은 60% 미만의 계속응답 성공률을 보였다. 반면, 울산은 80.2%가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응답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전남, 충남, 경남지역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 75% 전후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광역시 중에서 부산지역은 유일하게 70% 이상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구의 지역별 조사 성공률의 상대적 격차가 매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절대적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것이 계속조사 성공률에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에 속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10>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계속응답 가구주의 83.3%가 남성으로 1차년도 조사(85.9%) 당시에 비해 그 비중이 2.6%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의 비중이 1차년도에 비해 3.5%p 증가한 96.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차년도 조사 당시 40대(27.9%) > 30대(27.1%) > 50대(19.7%) > 60세 이상(17.7%) > 30세 미만(7.6%) 순으로 나타난 데 비해,

1~6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의 경우 60세 이상이 3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0대가 30.3%, 50대가 2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경우는 0.6%에 그치고 있어, 조사차수에 따른 연령증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응답 가구의 경우 비교적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10〉 1~6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의 가구주 특성<sup>1)</sup>

(단위: 명, %)

		1차년도 원표본가구(1차)	1~6차년도 계속응답 가구 <sup>2)</sup>
전 체		5,000 (100.0)	3,062 (100.0)
성 별	남 성	4,293 ( 85.9)	2,552 ( 83.3)
	여 성	707 ( 14.1)	510 ( 16.7)
혼인 상태 <sup>3)</sup>	기혼(무배우 포함)	4,657 ( 93.1)	2,959 ( 96.6)
	미 혼	332 ( 6.6)	103 ( 3.4)
연 령	30세 미만	380 ( 7.6)	18 ( 0.6)
	30대	1,356 ( 27.1)	468 ( 15.3)
	40대	1,397 ( 27.9)	928 ( 30.3)
	50대	984 ( 19.7)	688 ( 22.5)
	60세 이상	883 ( 17.7)	960 ( 31.4)
교육수준	고졸 미만	1,910 ( 38.6)	1,365 ( 44.6)
	고 졸	1,819 ( 36.1)	1,039 ( 33.9)
	대학 재학 및 중퇴	147 ( 3.2)	60 ( 2.0)
	전문대졸	241 ( 4.8)	137 ( 4.5)
	대졸 이상	882 ( 17.5)	461 ( 15.1)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2,229 ( 44.6)	1,322 ( 43.2)
	비임금	1,440 ( 28.8)	891 ( 29.1)
	미취업자	1,331 ( 26.6)	849 ( 27.7)

주: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응답을 기준으로 함.

2) 6차년도: 해당 가구에 가구주가 없거나 개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25case는 제외.

3) 1차년도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11명은 제외.

교육수준별 분포에서는 가구주가 고학력자일수록 지속적인 응답에 보다 덜 참여하는 현상이 이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계속응답 가구 중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가 1차년도(38.6%)보다 6%p 증가한 반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는 1차년도보다 약 2%p 정도 감소하였다.

취업상태별로는 1차년도 조사 당시와 비교할 때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6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주 중 임금근로자는 43.2%, 비임금근로자는 29.1%, 미취업자는 27.7%로 나타나, 1차년도에 비해 미취업자의 비중이 약 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1~6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한 번 이상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들은 가구주의 특성이 여성인 경우보다는 남성인, 기혼인 경우보다는 미혼인, 중고령자보다는 저연령층인, 저학력층보다는 고학력층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 2. 조사성공 가구원의 특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조사대상가구에 소속된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성공률과 관련된 가구원의 특성 또한 전적으로 가구의 성공률에 의해 좌우된다. <표 2-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년도에서 6차년도 조사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한 개인은 15,988명이다. 조사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응답한 개인은 7,010명으로 전체 원표본가구원 대비로 65.8%이며, 1회만 조사에 응답한 원표본가구원은 276명으로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원표본가구원은 신규가구 조사에 진입하는 연도에 따라 응답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응답횟수가 1~5회까지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1~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횟수

(단위: 가구,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전 체
전 체	1,698 (10.6)	1,579 ( 9.9)	1,722 (10.8)	1,852 ( 11.6)	2,127 (13.3)	7,010 (43.9)	15,988 (100.0)
원표본 가구원	276 (2.6)	419 (3.9)	625 (5.9)	957 (9.0)	1,370 (12.9)	7,010 (65.8)	10,607 (100.0)
비원표본 가구원	1,422 (26.7)	1,160 (21.8)	1,097 (20.6)	895 (16.8)	757 (14.2)	- (-)	5,331 (100.0)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총 가구원인 17,506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3,321명<sup>12)</sup>이었다. 2차년도에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총 가구원 12,039명 중 97.3%에 해당하는 11,710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3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205명 중 96.4%에 해당하는 10,798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으며, 4차년도에는 총 11,051명의 조사성공가구원 중 95%에 해당하는 10,499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5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0,966명 중 93.9%에 해당하는 10,295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543명 중 92.3%에 해당하는 10,657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즉 1~6차년도 기간동안 당해년도 전체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원표본가구원의 절대적인 수치는 6차년도에 들어오면서 4, 5차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지적했듯이 원표본 조사성공률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5)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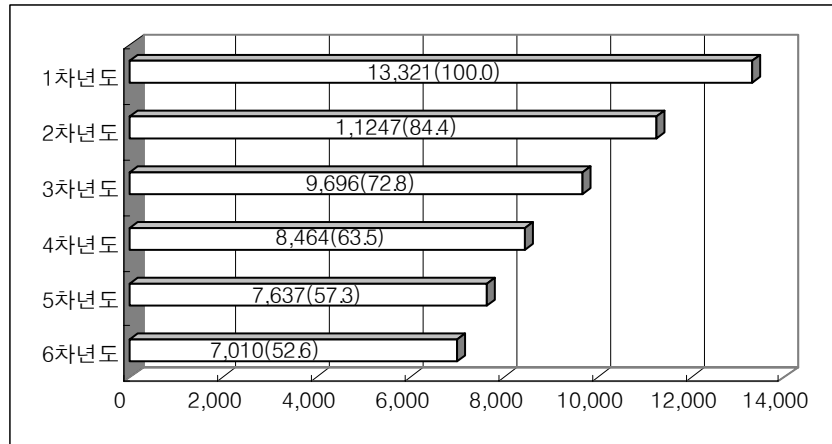
(단위: 명, %)



12) 1차년도 개인용자료에는 13,738명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417명은 가구조사를 통해서 성별·연령·교육수준·경제활동상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정보만 조사되었을 뿐, 개인조사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1차년도 개인조사에 성공한 총응답자수를 13,321명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2-6] 각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성공가구 대비 신규가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원표본가구원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예컨대, 원표본가구원의 경우 만 15세가 되어 개인조사에 진입하게 되는 비중보다 사망, 이민, 조사 거부 등의 이탈요인이 더 클 수 있다. 또한, 원표본가구원이 성장하여 취업하거나 결혼을 함으로써 배우자와 새로운 가족이 추가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각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2-6]과 같다. 1차년도 총 조사 성공가구원 13,321명 중 84.4%인 11,247명이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3차년도 조사에는 전년도보다 11.6%p가 감소한 9,696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4차년도에는 9.3%p가 감소한 8,464명의 가구원이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6.2%p가 감소한 7,637명이 조사에 성공하였다. 마지막으로 6차년도에는 전년도보다 4.7%p가 감소한 7,010명이 조사에 성공하였다. 이처럼 1~6차년도 기간동안 계속응답 가구원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감소폭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이탈했던 개인이 다시 복귀할 경우, 중간에 누락되었던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임금 등과 같은 주요 특성에 대한 설문에서 복원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당해년도에 직접 조사할 경우와 비교할 때 자료의 일관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 2-12〉 1~6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의 특성<sup>1)</sup>

(단위: 명, %)

		1차년도 가구원	1~6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
전 체		13,321 (100.0)	7,010 (100.0)
성별	남 성	6,470 ( 48.5)	3,170 ( 45.2)
	여 성	6,851 ( 51.4)	3,840 ( 54.8)
혼인 상태 <sup>2)</sup>	기혼(무배우 포함)	9,465 ( 71.1)	5,909 ( 84.3)
	미 혼	3,854 ( 28.9)	1,101 ( 15.7)
연령	15~19세	1,566 ( 11.8)	1 ( 0.0)
	20~24세	1,258 ( 9.4)	449 ( 6.4)
	25~29세	1,486 ( 11.2)	472 ( 6.7)
	30~39세	3,045 ( 22.9)	1,468 ( 20.9)
	40~49세	2,547 ( 19.1)	1,790 ( 25.5)
	50~59세	1,694 ( 12.7)	1,175 ( 16.8)
	60세 이상	1,725 ( 12.9)	1,655 ( 23.6)
교육 수준 <sup>3)</sup>	무 학	856 ( 6.4)	532 ( 7.6)
	고졸 미만	6,025 ( 45.2)	2,331 ( 33.3)
	고 졸	2,952 ( 22.2)	2,348 ( 33.5)
	대졸 미만	1,616 ( 12.1)	335 ( 4.8)
	전문대졸	540 ( 4.1)	496 ( 7.1)
	대졸 이상	1,331 ( 10.0)	966 ( 13.8)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4,012 ( 30.1)	2,689 ( 38.4)
	비임금근로자	2,415 ( 18.1)	1,519 ( 21.6)
	미취업자	6,894 ( 51.8)	1,802 ( 40.0)

주: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응답을 기준으로 함.

2)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3) 고졸 미만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수료·중퇴자를 포함. 대졸 미만은 전문대 및 일반대학의 재학, 휴학, 수료 및 중퇴자를 포함. 교육수준이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계속응답 가구원과 1차년도 조사성공 원표본가구원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표 2-12>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계속응답 가구원 중 여성의 비중이 54.8%로 1차년도 51.4%와 비교할 때 3.4%p 정도 높으며, 혼인상태별로도 계속응답 가구원 중 기혼자의 비중이 84.3%로 1차년도보다 13.2%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지난 6년간의 자연증가가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60세

이상의 계속 응답자 비중이 23.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미만과 고졸의 비중이 1~6차년도 계속응답자의 약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1차년도에는 45.2%에 이르렀으나 1~6차 계속응답자 내에서는 33.3%에 그치는 반면, 고졸자는 1차년도 22.2%에 비해 약 11%p 증가하였다. 취업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차년도에 비해 약 8%p 증가한 반면, 미취업자의 비중은 11%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 5 절 이사·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 1. 이사 가구의 특성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률이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3)</sup>. 경제활동,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구이동은 인구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가구를 추적조사해야 하는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은 2003년 분가한 155가구를 제외한 4,43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6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976가구로, 분가가구를 제외한 전체 성공가구의 2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7]을 통해 현재 거주지별로 이사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서울(25.6%), 대구(23.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사가구의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는 경남(10.5%), 충남(13.6%)으로 나타났으며, 전북과 경북, 전남 등도 15% 전후의 이사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서울 및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이 높은 이사율을 보이는 가운데,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대전, 인천 등도 20% 이상의 이사 비율을 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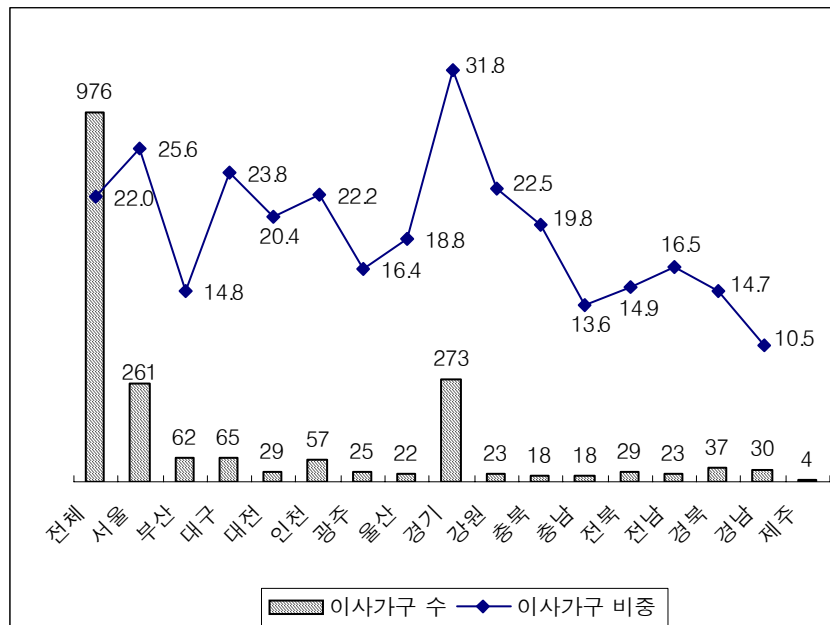
13)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제시된 수치는 2000년 총인구 대비 전입자 비중이다.

다. 이에 비해 호남과 영남의 도지역들은 낮은 이사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라 하더라도 부산의 경우 14.8%의 낮은 이사율을 보이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결과는 앞의 <표 2-8>에서 살펴보았던 지역별 표본유지율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조사성공률이 낮은 지역의 대부분이 높은 이사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사 가구를 추적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2-7) 6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단위: 가구수, %)



## 2. 비원표본가구(분가가구)의 특성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조사성공가구(4,592가구) 중에는 원표본 3,862가구 이외에,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가구는 아니었지만, 2차년도 이후 분가하여 새롭게 조사에 진입한 비원표본 730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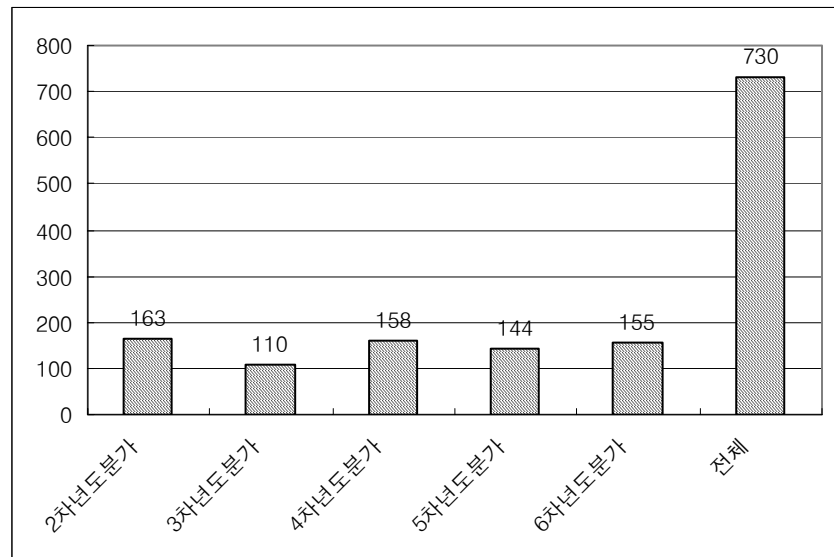
분가성공가구 중 2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63가구이며, 3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10가구, 4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58가구, 5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44가구, 6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55가구로 나타났다(그림 2-8 참조).

한편,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이들 분가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2-9]에서 볼 수 있듯이, 2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비원표본가구의 비중이 2.9%에 그치고 있으나, 3차년도에는 5.2%, 4차년도에는 9.0%, 5차년도에는 11.6%로 증가하였으며, 6차년도에는 15.9%에 이르고 있다.

비원표본 가구 중 6차년도에 신규로 분가한 155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35가구(22.6%)와 33가구(21.3%)로 약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와 인천도 각각 16가구(10.3%)와 12가구(7.7%)를 차지하였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들은 고른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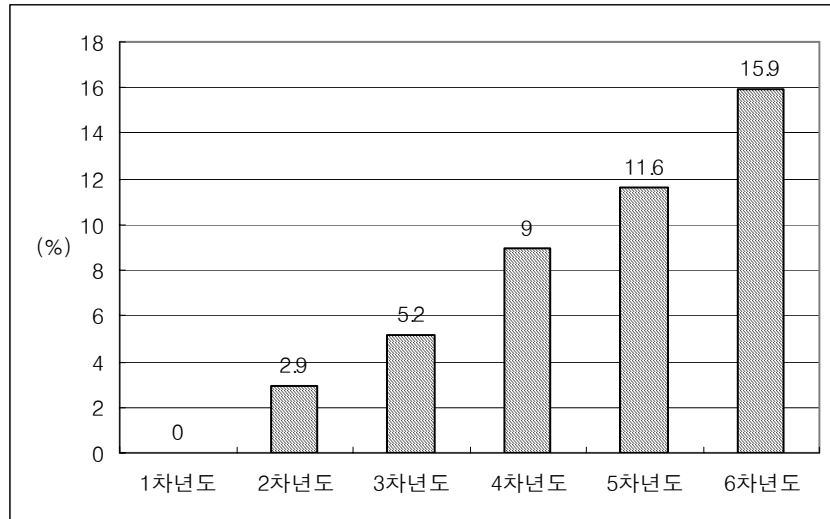
[그림 2-8] 6차년도 비원표본 가구수

(단위: 가구수)



[그림 2-9] 각 연도별 전체응답가구 대비 비원표본가구의 비중

(단위: %)



### 3. 비성공 가구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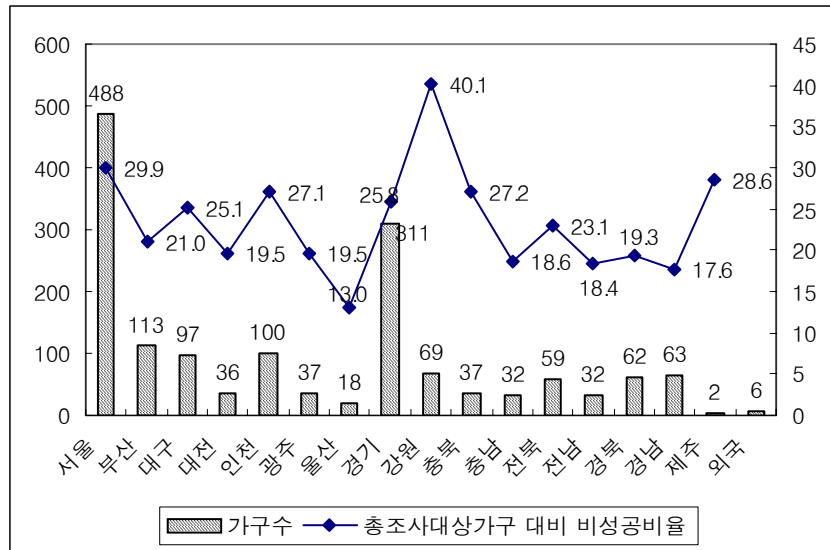
6차년도까지 파악된 전체 조사대상가구는 모두 6,114가구인데, 이 중 비성공가구는 2003년에 신규로 분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조사에 성공하지 못한 120가구와 기존 조사대상이면서 조사에 성공하지 못한 1,402가구를 합해 1,522가구로 집계되었다. [그림 2-10]은 6차년도 비성공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의 조사성공가구의 지역별 분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을 제외한 16개 지역 가운데 비성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40.1%를 기록한 강원이었으며, 그 다음이 29.9%를 기록한 서울로 나타났다. 경기, 인천, 충북, 대구지역의 경우에도 25%를 상회하는 비성공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가장 낮은 비성공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13.0%를 기록한 울산이었으며, 전라남북도 및 경상남북도 지역도 낮은 비성공 비율을 기록하였다.

비성공 가구 중에서 2003년 신규분가 비성공 120가구를 제외한 1,402가구의 비성공 사유를 살펴보면, '강력거절'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47.6%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사를 하였으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없

어서 추적할 수 없었던 ‘이사추적 불가’가 28.9%, ‘접촉 안됨’이 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1인가구의 가구원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멸이 2.3%, 이민 1.3%, 병환 0.2%를 각각 차지하였다(그림 2-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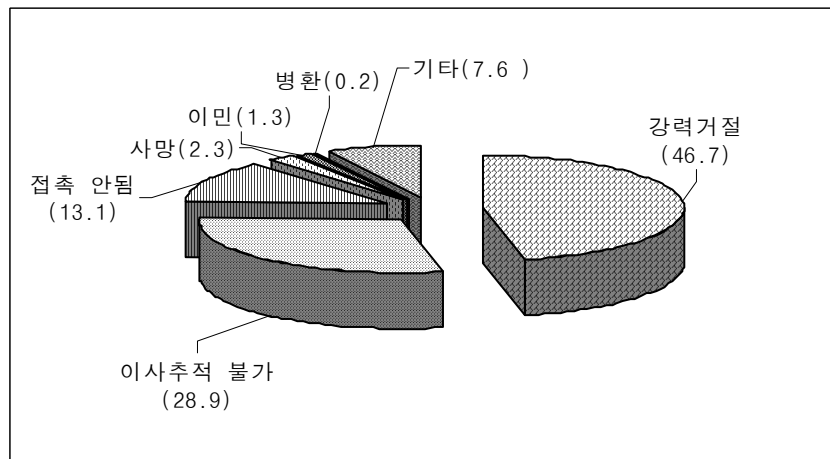
[그림 2-10] 6차년도 비성공 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가구수, %)



[그림 2-11] 4차년도 비성공 사유별 5차년도 성공비율

(단위: %)



비성공가구에 대한 면접원의 접촉횟수는 평균 3회로, 이 중 3회 접촉이 3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4회 접촉 21.5%, 1회 접촉 15.8%, 2회 접촉 13.9% 순으로 나타났다.

#### 4. 신규 조사자의 특성

6차년도 한국노동패널의 신규 조사자는 558명으로, 이 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276명, 비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 조사된 가구원은 282명이다. 신규 조사자의 진입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 조사자에 포함되는 경우인데, 이들은 1~5차 조사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6차년도 조사 당시 만 15세가 되어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비원표본가구의 진입인데, 이 경우에도 기존의 비원표본가구원이 새롭게 15세가 되는 등의 이유로 처음 개인조사에 응답하는 경우와, 혼인이나 합가로 인해 6차년도에 새롭게 조사대상자로 추가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71명 중에서 혼인이 94명, 합가가 63명, 기타 14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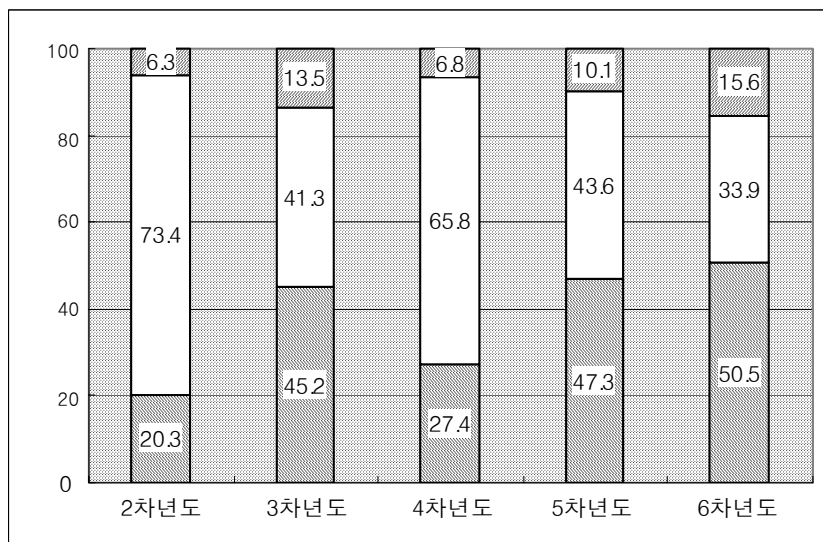
[그림 2-12]를 통해서 2~6차년도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추가이유 중 혼인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합가로 인한 추가는 감소하고 있다. 먼저 혼인의 경우 2차년도에는 20.3%에 불과하였으나 4차년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차년도에는 50.5%를 차지하였으며, 반대로 합가는 2차년도에 73.4%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6차년도에는 3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차년도 신규응답자 중 원표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2-13 참조), 남성과 여성이 각각 278명(49.8%)과 280명(50.2%)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규가구원 중에서 가구주는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원표본가구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53.4%를 차지한 가운데, 원표본가구의 대부분이 미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연령은 40.6세로 기존 조사자들보다 낮은 편이며, 특히 원표본가구의 평균연령(36.8세)이 비원표본가구원(40.8세)보다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2] 비원표본 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추가된 이유(2~6차년도)

(단위: %)



<표 2-13> 5차년도 신규 조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세)

		전 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전 체		558 (100.0)	276 (100.0)	282 (100.0)
성별	남 성	278 (49.8)	141 (51.1)	137 (48.6)
	여 성	280 (50.2)	135 (48.9)	145 (51.4)
가구주와 의 관계	가구주	78 (14.0)	73 (25.9)	5 ( 1.8)
	가구원	480 (86.0)	203 (74.1)	277 (98.2)
혼인 상태	미 혼	298 (53.4)	273 (98.9)	25 ( 8.9)
	기 혼	260 (46.6)	3 ( 1.1)	257 (91.1)
평균 연령		40.6	36.8	40.8

## 〈보론〉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표본조사자료의 결과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에도 표본자료에 대표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1999년 가중치(이하 ‘구가중치’)를 개발한 바 있다<sup>14)</sup>.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의 구가중치가 공개된 이후 추출확률계산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2차년도 이후의 가중치를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2003년에 보완된 가중치(이하 ‘신가중치’)는 통계청의 해당 부서의 협조하에 인구센서스 및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내 가구수와, 동부 및 읍면부 도시조사구 비중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구가중치를 보완한 것이다. 여기서는 신가중치의 부여방법 및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1.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계산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표본이 추출될 확률(selection probability)을 계산하는 것인데 이것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과 표본가구의 추출확률로 구분된다. 먼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은 인구센서스의 10% 표본조사구에 선정되고, 다시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조사구로 선정될 확률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표본조사구에서 최종 표본가구로 추출될 확률은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로 총접촉가구수를 나눈 값과 인구센서스 조사구 내의 전체 가구수로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를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최종적인 표본의 추출확률은 조사구 추출확률과 최종 표본가구 추출확률의 곱으로 계산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응답률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지역에 따라 응답가구와

14) 강석훈, 『KLIPS 1차 웨이브에서 가중치 부여방법에 관한 연구』, 『제1회 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1999를 참조.

비용답가구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응답률 계산에 지역정보나 조사구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특성을 가중치에 반영해 주는 것이다.

한편, 한국노동패널 가중치 부여에는 적절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관계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를 실시하지 않았다. 우선 한국노동패널의 1차 조사가 1998년도임을 고려할 때, 가구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는 통계청의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이나 이를 사용하여 사후층화를 하는 것은 시의성이 떨어진다. 개인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 등이 있으나, 장래인구추계 자료는 광역시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대한 연령·성별 인구분포 추계가 제시되지 않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는 전수조사 자료가 아닌 표본조사 자료이므로 사후층화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2. 2차년도 조사 이후의 가중치 부여방법

그동안 한국노동패널은 2차년도 조사 이후의 가중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신가중치가 공개되면서 1차년도 자료에 대한 가중치와 함께 2~5차년도 자료에 대한 가중치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2차년도 조사부터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 자료의 특성상 1차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및 가구원이 2차년도 조사 이후에 응답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조사간 표본이탈(panel attrition)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표본가구에 결혼·동거·입양·출생 등의 이유로 새롭게 진입한 가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표본가구원(non-sample household)으로 인해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 구성원이 달라지게 된다.

한국노동패널 신가중치는 2차년도 조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로 부여하였다. 1단계로 이미 산출된 1차 조사의 개인가중치를 가구원들의 상이한 응답률을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가구와 가구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 여부에 관한

로짓(logit) 모형을 설정한 후 도출된 계수를 사용하여 모든 가구원의 응답 확률을 추정하게 된다. 이 응답확률의 역수를 최초의 개인가중치에 곱하여 무응답 조정 가중치(non-response adjusted weights)를 산출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새롭게 산출된 해당 조사의 개인가중치를 평균하여 적절한 조정절차를 거친 후 가구가중치를 산출한다. 이때 결혼·동거 등의 사유로 새롭게 진입한 비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가구 차원의 무응답 조정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가중치는 스케일 조정을 거쳤다. 1998년 가구가중치는 이미 스케일 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했으나, 나머지 연도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2000~2005년)의 5년간 총가구수 증가율을 평균한 값을 KLIPS 1차년도 가중치 합계에서부터 매년 곱해 주어 산출하였다. 개인가중치의 스케일 조정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농가 생산가능인구(1998~2002년)의 5년간 평균증가율을 이용하여 1차년도 개인가중치 합계에 평균증가율 값을 매년 곱해 주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계산과정을 거친 최종적인 가중치의 결과값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KLIPS의 신가중치(2003년 가중치)의 사례수

(단위: 명)

	가구가중치	개인가중치
1차년도	11,276,899	30,039,370
2차년도	11,453,518	30,503,448
3차년도	11,632,899	30,974,696
4차년도	11,815,100	31,453,224
5차년도	12,000,165	31,939,145
6차년도	12,188,092	32,432,573

### 3. 가중치 변수 및 이용방법

<표 2-15>는 지금까지 설명한 가중치 부여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중치의 변수명과 분석단위를 제시하고 있다. 각 연도별 가중치는 현재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www.kli.re.kr/klips)에 엑셀 파일(.xls), SPSS 파일



〈표 2-15〉 KLIPS의 신가중치(2003년 가중치)의 변수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가구분석		w1-h	w2-h	w3-h	w4-h	w5-h	w6-h
개인분석	횡단면 분석	w1-p	w2-pc	w3-pc	w4-pc	w5-pc	w6-pc
	종단면 분석	w1-pl	w2-pl	w3-pl	w4-pl	w5-pl	w6-pl

(.sav), SAS 파일(.sd2) 등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상의 가중치는 한국노동패널의 분석 단위에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개략적인 사용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 차원의 분석에는 가구가중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종단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 중 어떤 것을 하더라도 동일한 가중치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 차원의 분석에는 연구자의 분석목적에 따라 개인 횡단면 가중치와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비표본가구원의 추출확률이 표본가구원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표본가구원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비표본가구원을 제외하고 원표본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현재 개발된 가중치의 스케일이 조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추계조사 내지는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대표 모집단의 총사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다음 장부터 제시될 요약통계들에서는 각 특성별 비중만 제시하였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 제 3 장

## 조사가구의 특성

이 장에서는 6차년도 노동패널조사에 성공한 4,592가구와 그 가구 구성원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 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지난 5년간의 노동패널 조사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변동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의 교류와 관련된 여러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 장에서는 분석대상이 가구일 경우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단, 제2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되는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 제 1 절 가구 및 세대 구성

이 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패널 조사에서 가구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같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하며, 가

구원에는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함께 살고 있지 않으나 교육, 군복무, 다른 지방 근무 등의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와 경제적 교류가 있는 미혼자녀를 포함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다른 지방 근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 경제적 교류가 없거나 미혼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파출부, 운전사,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표 3-1>을 통해서 6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평균 가구원수는 1~5차년도보다 낮은 3.3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가구원수의 분포는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3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인(19.9%), 2인(16.1%)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체(가구수)	5,000	4,508	4,266	4,248	4,298	4,592
1인	10.2	9.1	10.3	9.8	11.2	12.4
2인	13.1	12.4	13.7	13.3	15.2	16.1
3인	19.4	18.6	19.7	18.4	19.4	19.9
4인	38.1	38.6	38.0	38.6	38.4	37.1
5인	13.8	14.9	13.6	14.5	12.3	11.4
6인 이상	5.5	6.4	4.7	5.4	3.6	3.2
평균(인)	3.5	3.6	3.5	3.5	3.4	3.3

연도별 가구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4인가구와 5인가구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1.3%p와 0.9%p 하락한 반면, 1인가구와 2인가구의 비중은 각각 1.2%p와 0.9%p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가구추계자료』<sup>15)</sup>에서 추정된 1인가구의 비중과 비교했을 때 약 4%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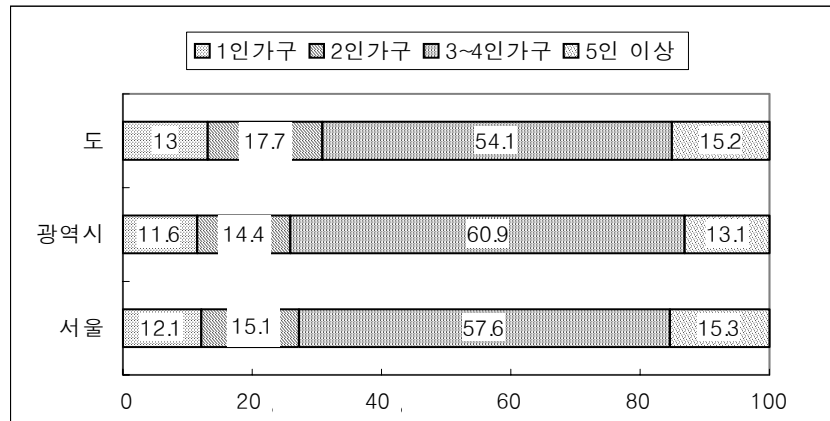
거주지별로 가구원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지역 거주자의 평균가구원수가 3.32명, 광역시가 3.32명, 도지역이 3.27명으로 거주지별 평균가구원수

15) 인구센서스 및 가구추계에 의한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15.5%, 2001년 15.8%, 2002년 16.1%, 2003년 16.4%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림 3-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도지역의 가구구성이 서울 및 광역시에 비해 3~4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1~2인가구의 비중 및 5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서울 및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도시의 경우 혼자 사는 노인, 혹은 노인부부로 이루어진 1~2인가구나 5인 이상의 가구원이 함께 사는 확대가족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1) 5차년도 거주지별 가구원수 비중 및 평균 가구원수

(단위: %)



조사가구의 세대구성<sup>16)</sup>을 <표 3-2>를 통해 살펴보면,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67.9%로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

16)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인 가구 : 가구구성원이 1명인 가구.
- 1세대가구 :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속한다.
- 2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속한다.
- 3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4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인가구가 12.4%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은 7.6%였다. 그러나 가구주와 그의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대에 걸쳐 사는 4세대 가구는 0.1%에 불과하였다.

세대구성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세대 가구는 1차년도에 그 비중이 10.1%에 그쳤던 데 비해 6차년도 조사에서는 2.0%p가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는 1차년도 9.8%에 비해 오히려 2.2%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2〉 연도별 세대구성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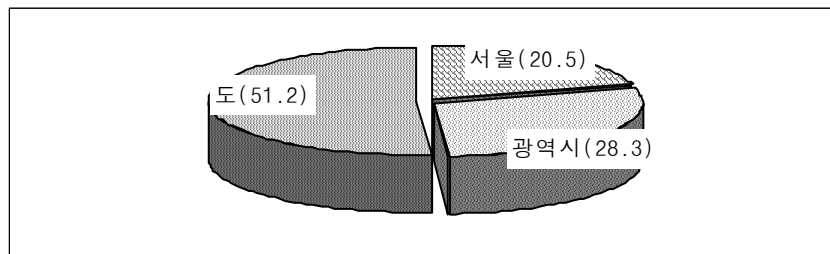
(단위: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 체(가구수)	5,000	4,508	4,266	4,248	4,298	4,592
1인 가구	10.2	9.7	10.2	10.8	10.9	12.4
1세대 가구	10.1	10.1	10.7	10.9	11.8	12.1
2세대 가구	69.8	70.3	69.7	69.2	68.9	67.9
3세대 가구	9.8	9.8	9.3	8.8	8.3	7.6
4세대 가구	0.1	0.1	0.1	0.2	0.1	0.1

이와 함께 6차조사에서 3세대 가구라고 응답한 가구 중 51.2%가 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과 광역시지역의 3세대가구 비중을 합한 값보다도 많은 것으로, 중소도시일수록 여전히 확대가족 형태를 지닌 가구가 많음을 잘 보여준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6차년도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

(단위: %)



다음으로 <표 3-3>에서는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단독),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편부모+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구성을 중심으로 가족구성형태별 변화 추이를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미혼자녀 가구가 56.6%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이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단독 가구가 11.2%, 편부모+미혼자녀 가구가 7.7%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핵가족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74.4%, 2차년도 74.8%, 3차년도 75.1%, 4차년도 75.8%, 5차년도 76.0%, 6차년도 75.6%로 매년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6차년도에 다소 주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의 경우,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2000년 68.3%, 2001년 68.5%, 2002년 68.6%, 2003년에는 68.7%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노동패널조사의 핵가족 비중이 약 7%p 정도 높지만 핵가족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체(가구수)	5,000	4,508	4,266	4,248	4,298	4,592
핵가족가구	74.4	74.8	75.1	75.8	76.0	75.6
부부 단독	9.0	9.0	9.5	10.2	10.8	11.2
부모+미혼자녀	59.3	59.6	59.1	59.2	58.6	56.6
편부모+미혼자녀	6.1	6.2	6.5	6.4	6.6	7.7
1인가구	10.2	9.7	10.2	10.8	10.9	12.4
비핵가구	15.4	15.5	14.8	13.4	13.1	12.1

가구내 자녀의 수를 [그림 3-3]을 통해 살펴보면, 6차년도 조사에서 2명의 자녀를 둔 가구의 비중이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녀가 없는 가구의 비중이 26.4%인 반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9.3% 수준이었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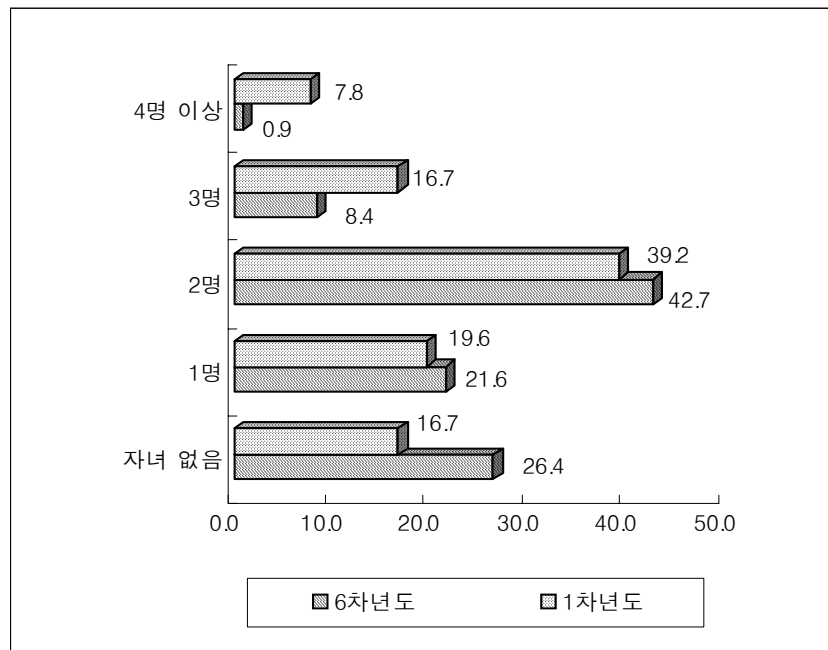
17) [그림 3-3]의 분석에 사용된 자녀의 수란, 현재 가구원인 자녀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수치로, 실제 가구주의 자녀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실제 가구주의 자녀인 가구원이 장성하여 분가했을 경우, 이 개인은 자녀의 수에는 합산되지 않았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1차 조사와 6차 조사에서 나타난 자녀의 수를 비교해 보면, 자녀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16.7%에서 26.4%로 크게 증가했으며, 자녀가 1명인 가구와 2명인 가구의 비중은 각각 2%p, 3.5%p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1차 조사에서 24.5%이던 것이 6차 조사에서는 크게 감소하여 9.3%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점차 결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젊은 부부가 늘어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자녀의 성비<sup>18)</sup>는 121.7로 장남인 경우가 장녀인 경우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둘째, 셋째, 넷째자녀의 성비는 각각 125.7, 149.4, 178.6으로, 나중에 낳는 아이 일수록 남아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3-3] 가구내 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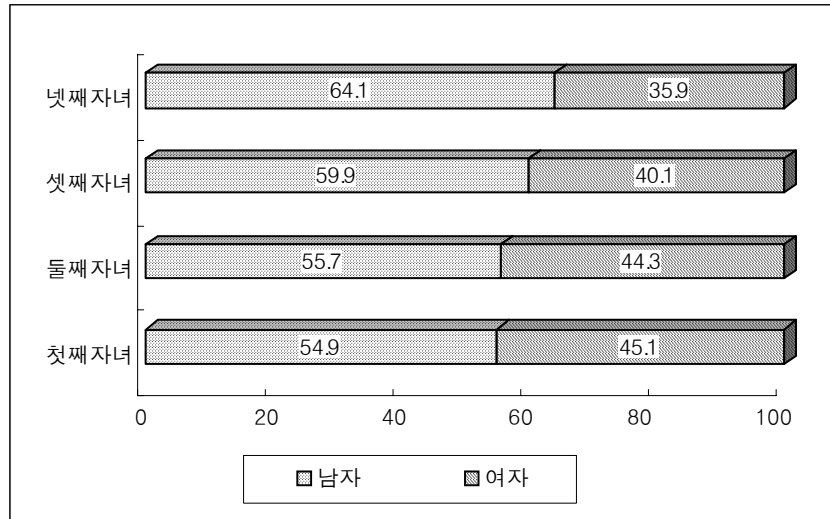
(단위: %)



18) 인구의 성별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나타낸다.

[그림 3-4] 가구내 자녀수

(단위: %)



## 제 2 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여기서는 패널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패널조사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비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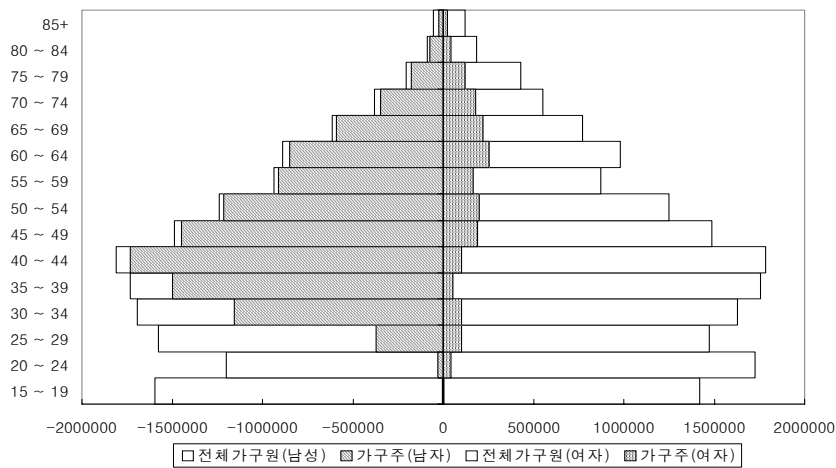
19)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가계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1. 가구주의 특성

먼저 15세 이상 전체 가구원 대비 가구주의 연령별 및 성별 분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그림 3-5 참조),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부터 가구주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0대 초반의 남성 가구주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령대부터 90% 이상이 남성 가구주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가구주의 비중이 훨씬 낮으며 남성과는 달리 60대 초반에 이르러 가구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5) 6차년도 성별·연령별 가구주의 분포



주: 그림의 가로축 항목의 값들은 가중치를 곱한 후의 케이스임.

다음으로 <표 3-4>를 통해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49.5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여성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54.2세로 남성 가구주(48.6세)보다 약 6세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83.5%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조사 이후 남성 가구주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세 미

만을 제외한 전연령층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40대의 비중이 2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이 1~6차년도 기간동안 매년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단위: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 체		4,999	4,507	4,258	4,248	4,268	4,592
성 별	남 성	86.1	86.1	86.0	85.7	85.3	83.5
	여 성	13.9	13.9	14.0	14.3	14.7	16.5
혼 인 상 태	미 혼	6.6	5.9	6.1	5.6	5.9	6.7
	기혼유배우	77.3	80.9	80.0	79.7	78.9	77.0
	기혼무배우	16.1	13.2	13.9	14.7	15.2	16.3
연 령	30세 미만	7.6	6.0	4.9	4.7	4.5	4.6
	30대	27.3	27.0	26.2	23.7	23.0	21.5
	40대	28.0	27.7	28.2	29.2	28.5	28.8
	50대	19.5	20.3	19.9	20.2	20.4	20.3
	60세 이상	17.6	19.0	20.8	22.2	23.6	24.8
	평 균(세)	46.4	47.1	47.8	48.4	48.9	49.5
교 육 수 준	무 학	6.2	6.2	6.1	5.9	6.0	5.7
	고졸 미만	32.2	32.0	32.2	33.2	31.8	30.5
	고졸	36.1	35.6	35.5	34.1	34.1	33.8
	대재밋중퇴	2.9	2.7	2.5	2.6	2.4	2.6
	대졸 이상	22.6	23.5	23.7	24.3	25.7	27.4

## 2. 가구원의 특성

여기서는 개인설문과 신규 조사자 설문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11,543명(개인조사 10,985명 + 신규조사자 558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5>를 통해서 6차년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1차년도 조사 당시 여성의 비중이 51.4%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조사차수가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여 6차년도 조사에 이르게 되면 여성이 49.9%, 남성이

50.1%로 거의 동일한 분포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41.0세로 1~6차년도 조사 기간을 경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1~6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 체		13,321	12,039	11,205	11,051	10,966	11,543
성별	남성	48.6	48.9	49.3	49.6	49.9	50.1
	여성	51.4	51.1	50.7	50.4	50.1	49.9
연령	15~19세	11.8	11.7	11.3	10.3	9.8	8.9
	20~24세	9.4	9.5	9.4	10.1	10.1	9.5
	25~29세	11.2	10.8	10.7	10.6	10.5	10.9
	30~39세	23.0	22.9	22.6	21.7	21.7	21.3
	40~49세	19.1	19.0	19.2	20.1	20.0	20.6
	50~59세	12.6	12.5	12.3	12.3	12.3	12.6
	60세 이상	13.0	13.8	14.6	15.0	15.6	16.1
	평균(세)	39.2	39.5	39.8	40.1	40.4	41.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37.5	37.5	37.7	38.2	38.5	39.5
	배우자	29.6	29.1	28.7	28.3	28.2	27.2
	부모	4.0	3.7	3.5	3.1	2.8	2.5
	자녀	27.1	28.1	28.7	29.2	29.3	29.8
	형제	1.1	1.1	1.0	0.7	0.7	0.5
	기타	0.6	0.5	0.5	0.6	0.5	0.5
혼인 상태	미혼	28.8	29.7	30.6	30.8	31.1	31.9
	기혼유배우	61.2	62.5	61.4	60.9	60.2	59.2
	기혼무배우	10.0	7.8	8.0	8.3	8.7	8.9
교육 수준	무학	6.5	6.3	6.0	5.7	5.6	5.2
	고졸 미만	45.3	33.2	32.2	31.8	30.5	29.4
	고졸	22.0	32.7	32.4	30.8	30.5	29.7
	대재및중퇴	12.1	8.8	9.2	9.9	9.5	9.6
	전문대졸	4.1	5.9	6.5	7.2	8.0	8.4
	대졸 이상	10.1	13.1	13.8	14.7	15.9	17.7

6차년도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16.1%로 1차년도(13.0%)에 비해 3.1%p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19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의 11.8%에서 8.9%로 낮아졌다. 개인 응답자의 주 연령대는 21.3%를 차지하고 있는 30대지만, 40대도 20.6%로 두 연령대의 격차가 조사를 거듭할수

록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부모-자녀가 동거하는 직계가족의 형태가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조)부모의 비중은 1차년도 4.0%에서 6차년도에는 1.5%p까지 하락한 데 반해, 자녀의 비중은 1차년도 27.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차년도에는 2.7%p가 증가한 29.8%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자가 2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비중도 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 미만의 학력 소지자도 29.4%에 이르고 있으나 1차년도(45.3%)에 비해서는 15.9%p나 감소한 데 반해,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26.1%로 1차년도 14.2%에 비해 11.9%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제 3 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한국노동패널의 조사대상 가구에는 매년 가구원의 출생·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진입 및 유학·군입대·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인구변동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sup>20)</sup>.

#### 1. 출생아의 특성

2~6차년도 기간동안 총 출생아는 828명이며,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20) 이 절의 분석에는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KLIPS에서 부여하는 개인단위의 가중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5차년도 조사기간동안 출생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개인조사에서 당연히 누락되므로 역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다.

2차년도 148명, 3차년도 122명, 4차년도 191명, 5차년도 150명, 6차년도는 21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4차년도를 제외한 모든 해의 조사에서 남아의 비중이 각각 50.7%, 54.1%, 54.7%, 51.2%로 여아의 출생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4차년도에는 여아의 출생비중이 55.4%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 2~6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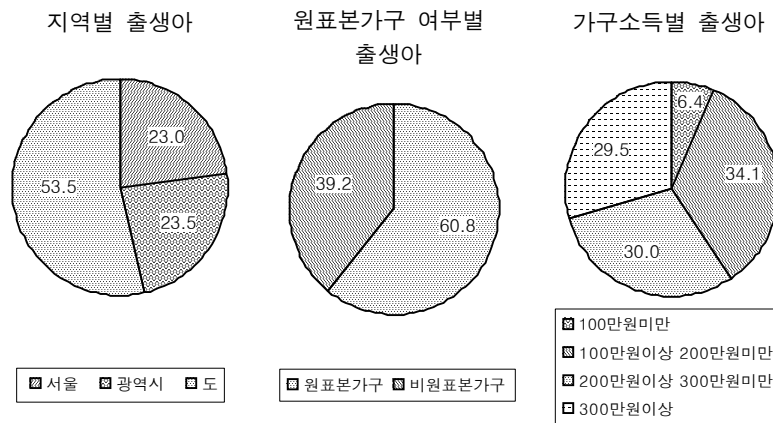
(단위: 명, %)

		전 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 체		828(100.0)	148(100.0)	122(100.0)	191(100.0)	150(100.0)	217(100.0)
성별	남 성	421 (50.8)	75 (50.7)	66 (54.1)	87 (45.6)	82 (54.7)	111 (51.2)
	여 성	407 (49.2)	73 (49.3)	56 (45.9)	104 (55.4)	68 (45.3)	106 (48.8)

주: ( )안은 전체 대비 비중임.

(그림 3-6) 6차년도 출생아 특성

(단위: %)



6차년도 조사에서 출생아가 태어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3.0%, 광역시가 23.5%, 기타 도지역이 53.5%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지역에서 출산경험을 가진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출생아의 비중을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4%, 100만~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4.1%, 200만~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0.0%,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9.5%로 나타나,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빈곤가구에서 아동의 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생아의 비중을 원표본가구 여부별로 살펴보면, 원표본가구가 39.2%, 비원표본가구가 60.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원표본가구가 주로 가구 내에서 성인이 된 가구원 중 혼인으로 인해 분가한 경우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2. 사망자의 특성

여기서는 2~6차년도 기간동안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사망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2~6차년도 기간동안 총 사망자는 355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 사망자가 64명, 3차년도는 59명, 4차년도는 92명, 5차년도는 60명, 6차년도가 80명이다. 6차년도 조사에 나타난 가구원의 조사망률<sup>21)</sup>은 5.2로,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에 나타난 조사망률 5.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 연도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2~6차년도 기간동안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58.3%(207명), 여성이 41.7%(148명)로 남성이 약 17%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2차년도의 경우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8.8%로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3차년도에는 여성의 비중이 39.0%로 증가하고, 4차년도에는 여성이 55.4%로 과반수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5차년도에는 남성 대 여성의 비중이 3대 2로 다시 남성 사망자가 증가했으며, 6차년도 조사에서도 남성 사망자가 62.5%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사망 당시의 연령을 살펴보면, 2~6차년도 기간동안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 사망 당시 50세 미만이었던 가구원의 비중은 14.5%이며, 50~59세가 11.0%, 60~69세는 21.4%, 70~79세는 26.6%, 80세 이상은 26.6%로 나타나, 이 기간동안 사망한 가구원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6차년도 기간동안 사망 당시의 평균연령은 68.1세이

21) 조사망률이란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며, 이 중 2차년도 사망자는 65.5세, 3차년도 69.3세, 4차년도 70.7세, 5차년도 66.8세, 6차년도는 67.3세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표 3-7〉 2~6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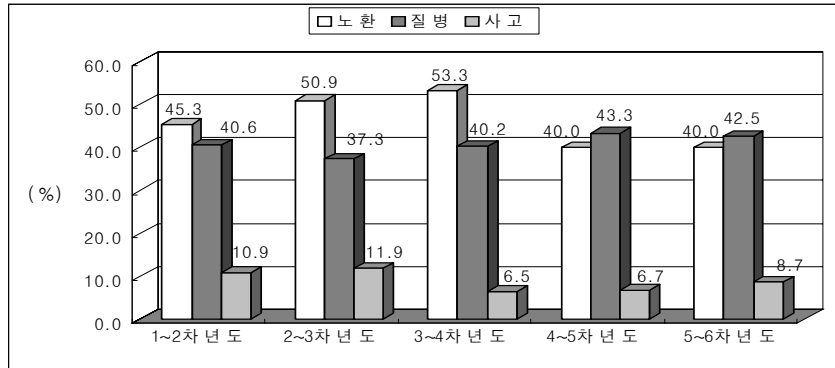
		전 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 체		355 (100.0)	64 (100.0)	59 (100.0)	92 (100.0)	60 (100.0)	80 (100.0)
성별	남 성	207 (58.3)	44 (68.8)	36 (61.0)	41 (44.6)	36 (60.0)	50 (62.5)
	여 성	148 (41.7)	20 (31.3)	23 (39.0)	51 (55.4)	24 (40.0)	30 (37.5)
사망 당시 연령	50세미만	50 (14.5)	12 (19.1)	6 (10.3)	10 (10.9)	9 (16.1)	13 (16.9)
	50~59세	38 (11.0)	6 (9.5)	6 (10.3)	12 (13.0)	6 (10.7)	8 (10.4)
	60~69세	74 (21.4)	18 (28.6)	15 (25.9)	11 (12.0)	10 (17.9)	20 (26.0)
	70~79세	92 (26.6)	14 (22.2)	17 (29.3)	26 (28.3)	21 (37.5)	14 (18.2)
	80세이상	92 (26.6)	13 (14.1)	14 (24.1)	33 (35.9)	10 (17.9)	22 (28.6)
	평균(세)	68.1	65.5	69.3	70.7	66.8	67.3

주: 사망시기를 응답하지 않아 사망 당시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가 9명 있음.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노환이 46.2%(16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질병이 40.8%(145명), 사고가 8.7%(31명), 기타가 4.2%(15명)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사망원인이 기타인 경우를 제외한 340명에 대해 연도별로 그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7]과 같다. 분석결과, 사망원인이 노환인 경우는 1~4차년도 조사기간동안 점차 증가하다가 4~6차년도 기간에 감소한 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4~6차년도 기간동안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7] 사망자의 사망원인

(단위: %)



### 제 4 절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이 절에서는 가구주(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의 부모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을 경우에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와 관련된 조사는 4차년도 부터 가구설문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주요 조사내용으로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부모와의 왕래 빈도, 경제적 교류 여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먼저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시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6차년도 조사의 경우 친가(또는 시가) 부모님과 친정(또는 처가) 부모님<sup>22)</sup> 어느 한쪽이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이 계신다는 응답이 66.0%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양가 부모님 모두 계신다는 응답은 35.4%로 가장 많으며, ‘친가 부모님만 있다’(11.1%)고 응답한 경우보다 ‘친정 부모님만 있

22) 앞의 2절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노동패널조사에서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모든 가구주가 남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엔 가구주의 부모님이,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에는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이, 부부 중 남성의 부모님이 된다. 본 절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부부 중 남성의 부모님을 친가(또는 시가) 부모님, 여성의 부모님을 친정(또는 처가) 부모님이라 하기로 한다.



다'(19.5%)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7.6%로, 이 중 친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88.4%이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구가 11.6%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가부장제도로 인해 남성의 부모님은 함께 살면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인 경우에는 친부모와 동거하면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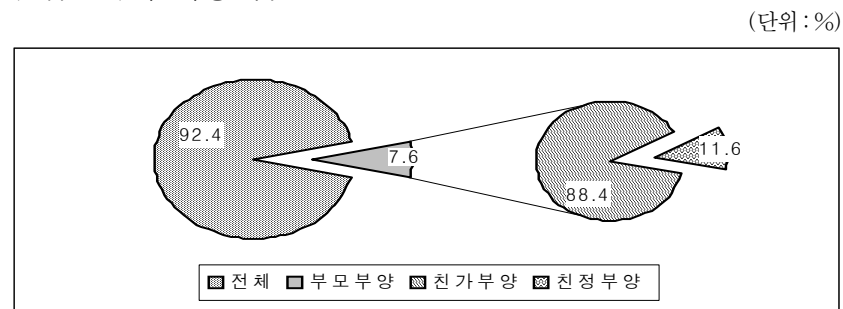
다음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실 경우,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표 3-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친가와 친정 부모님 모두 생존해 계신다는 비중이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구주(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가 부모님 모두가 살아 계실 비중은 82.0%에 이르고 있지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로 사는 친정 부모님의 경우에도 가구주(혹은 가구주의

<표 3-8>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시는지 여부

(단위: %)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시는지 여부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친가(또는 시가) 부모님만 있음	10.4	10.7	11.1
친정(또는 처가) 부모님만 있음	19.1	18.9	19.5
양가 부모님 모두 있음	35.4	34.8	35.4
소 계	64.9	64.4	66.0
양가 부모님 모두 없음	35.1	35.6	34.0

(그림 3-8) 부모부양 가구



〈표 3-9〉 따로 사는 부모님의 생존 여부

(단위: %)

		친가 부모님			친정 부모님		
		모두 생존	아버지만 생존	어머니만 생존	모두 생존	아버지만 생존	어머니만 생존
전 체		52.9	6.3	40.8	49.3	5.9	44.9
가구주 연령	30세 미만	82.0	5.3	12.7	81.7	2.9	15.4
	30~39세	68.3	4.5	27.2	68.4	3.4	28.1
	40~49세	47.7	7.4	44.9	45.9	6.5	47.6
	50~59세	22.1	8.7	69.2	24.3	8.7	67.0
	60세 이상	12.2	5.6	82.2	15.9	8.9	75.2

배우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높아져, 이들이 6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신다는 비중이 15.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가구주(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만 생존해 계신다는 비중이 높아져, 친가와 친정에서 각각 82.2%와 7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왕래 정도는 가구주(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0>에서 볼 수 있듯이, 친가 부모님과 ‘자주 왕래한다’는 비중이 60.4%, ‘가끔 왕래한다’는 비중은 36.9%인 데 반해, 친정 부모님과는 ‘가끔 왕래한다(50.0%)’가 ‘자주 왕래한다’(46.0%)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평균 방문횟수도 친가 부모님과 왕래(자주 왕래 월4.8회, 가끔 왕래 연4.3회)하는 빈도가 친정 부모님과의 왕래(자주 왕래 월4.7회, 가끔 왕래 연3.7회)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왕래 빈도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약 70% 정도가 자주 왕래한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중은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먼저 친가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가 있다는 응답은 67.8%인 데 반해 친정 부모님과의 교류는 54.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부모님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중은 약 27%인

데 반해, 도움을 드리는 비중은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제적 교류를 한다는 응답이 친가의 경우 43.0%, 친정인 경우에는 28.1%에 그치고 있지만,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친가와 교류 있는 가구의 비중이 78.2%, 친정과의 교류가 있는 가구는 68.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비중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살펴보면 <표 3-12>와 같다. 먼저 연간 총금액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표 3-10>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왕래 빈도

(단위: %)

		친가 부모님			친정 부모님		
		자주 왕래	가끔 왕래	거의 안함	자주 왕래	가끔 왕래	거의 안함
전 체		60.4	36.9	2.7	46.0	50.0	4.0
가 구 주 연 령	30세 미만	73.7	24.5	1.8	68.1	27.4	4.4
	30~39세	68.2	30.8	1.1	56.8	39.8	3.4
	40~49세	55.2	41.5	3.4	36.6	60.3	3.2
	50~59세	48.6	45.8	4.6	41.3	53.1	5.6
	60세 이상	52.0	40.8	7.3	41.5	52.0	6.5
평균방문횟수		월 4.8회	연 4.3회	-	월 4.7회	연 3.7회	-

<표 3-11>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단위: %)

		친가 부모님			친정 부모님		
		경제적 교류 있음	경제적		경제적 교류 있음	경제적	
			받는 도움	드리는 도움		받는 도움	드리는 도움
전 체		67.8	27.4	89.8	54.3	27.5	90.0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3.0	42.1	73.9	28.1	40.2	76.5
	100만~200만원	61.4	29.3	87.5	47.4	28.4	87.0
	200만~300만원	72.1	30.5	90.7	57.0	33.7	88.9
	300만원 이상	78.2	20.8	93.6	68.6	20.6	94.8

적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보다는 부모님에게서 받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도 총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부모님에게서 받는 금액은 친가와 친정이 각각 518만원과 94만원인 데 비해,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은 친가와 친정이 각각 141만원과 8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으로는 가구주의 연령이 20~30대일 경우 혼인이나 취업 등으로 인한 분가가 많은데다, 아직 경제적으로는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표 3-12〉 따로 사는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 혹은 받는 금액

(단위: 만원)

		친가 부모님		친정 부모님	
		부모님께 받는 금액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	부모님께 받는 금액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
가구주 연령	30세 미만	268	112	196	115
	30~39세	330	140	85	85
	40~49세	213*	146	89	75
	50~59세	87	145	120	70
	60세 이상	21	114	28	113
지난해 연간총금액		274	141	94	81

주: \* 가구번호가 3824번인 가구가 친가 부모님에게서 5억원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평균값이 매우 높게 추정되었음. 그러나 노동패널조사에서는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은 이유나 용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음.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 가구를 제외하고 평균값을 추정하였음. 만일 이 가구를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가구주가 40대인 경우 친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금액의 평균치는 1,026만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마찬가지로 이 가구를 포함할 경우 전체 평균은 518만원 정도로 높아짐.

## 제 4 장

## 가계 경제

이 장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6차년도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의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 가계소득 부문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소비를 생활비와 저축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구가중치를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히도록 하였다.

## 제 1 절 가계 소득

노동패널조사에서 가계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 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

로소득은 가구원 중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서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 중 누구라도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경우, 그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 중 누구라도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 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총액을 의미한다. 1~5차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6차조사에서는 이전소득 항목 중 정부보조금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과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기타소득에는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패널조사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6차년도의 경우 2002년 한 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대답하게 했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간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 모든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표 4-1>을 통해 연도별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차년도의 연간총소득은 2,730만원(월평균 228만원)으로 전년도

에 비해 114만원 정도 늘어났으며, 이를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환산<sup>23)</sup>하면, 5차년도에 비해 41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질소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차년도(1998년 소득)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5차년도에 크게 증가하였다.

가구총소득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6차년도 조사가구의 최상위 1분위가 차지하는 소득몫이 전체 소득의 31.4%로 최하위 10분위에 비해 56

〈표 4-1〉 연간 가구 총소득 및 10분위 소득비교

(단위: 가구, 만원,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 체	5,000		4,359		4,147		4,095		4,298		4,592	
1분위	5469	30.3	5719	30.5	5927	29.8	6535	30.6	8185	31.3	8571	31.4
2분위	2934	16.3	3032	16.2	3185	16.0	3477	16.3	4133	15.8	4445	16.3
3분위	2347	13.0	2371	12.7	2485	12.5	2750	12.9	3300	12.6	3505	12.8
4분위	1916	10.6	1954	10.4	2152	10.8	2274	10.7	2767	10.6	2859	10.5
5분위	1656	9.2	1684	9.0	1804	9.1	1909	8.9	2305	8.8	2392	8.8
6분위	1315	7.3	1348	7.2	1492	7.5	1582	7.4	1916	7.3	1998	7.3
7분위	1102	6.1	1125	6.0	1200	6.0	1237	5.8	1567	6.0	1623	5.9
8분위	774	4.3	827	4.4	893	4.5	915	4.3	1134	4.3	1133	4.1
9분위	449	2.5	502	2.7	551	2.8	492	2.3	679	2.6	629	2.3
10분위	70	0.4	165	0.9	188	0.9	150	0.7	184	0.7	153	0.6
명목 소득	1803		1928		2039		2205		2616		2730	
실질 소득	1999		1987		2084		2205		2513		2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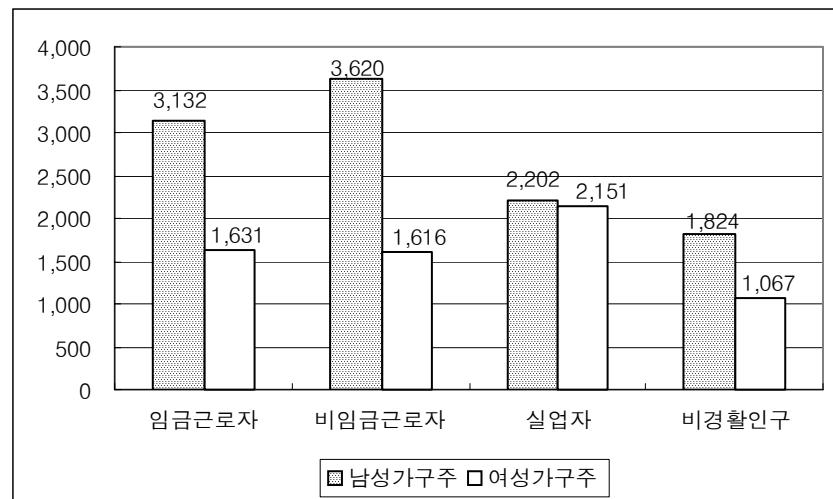
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분위 소득의 변화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상위 1분위가 차지하고 있는 소득몫이 1차년도 30.3%에서 3차년도에 29.8%까지 하락하였으나, 6차년도에는 다시 31.4%를 차지하여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하위 10분위가 차지하고 있는 소득몫은 1차년도 0.4% 수준에서 2~3차년도 기간 동안 소폭 증가하였으나, 4~6차년도 기간동안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23) 실질소득 = (명목소득 /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100 으로 산출하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조사』의 물가지수(2000년 = 100 기준)를 사용하였다.

6차년 가구 총소득을 가구의 성별 및 경제활동 상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4-1]과 같다. 먼저 가구가 남성인 경우, 연간 가구 총소득이 2,999만원으로, 가구가 여성인 경우(1,361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가구의 경제활동상태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가구가 남성인 경우에는 비임금근로자일 때 가구소득의 평균 값이 3,62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가 여성인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일 때가 비임금근로자일 때보다 조금 높았다. 실업자인 경우에는 남녀 각각 2,202만원과 2,151만원,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에는 남녀 각각 1,824만원과 1,067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6차년도 성별·경제활동상태별 가구 총소득

(단위: 만원)



다음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빈곤실태를 <표 4-2>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어진다. '절대적 빈곤'은 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수준에 미달할 때를 일컫는 반면,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절대빈곤율<sup>24)</sup>은 2차조사(1998년)에서 26.0%를 기록한 이후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16.1%까지 하락하다, 2002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17.1%를 나타냈다. 차상위계층의 비중 또한 1998년 8.8%에 이르던 것이 2002년에는 4.3%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상대빈곤율<sup>25)</sup>은 이 기간동안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8년 당시 상대빈곤율은 절대빈곤율보다 7.2%p가 낮은 18.8%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후로 크게 감소하지 않고 20%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대적 차상위계층의 비중도 이 기간동안 소폭(1.7%p)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2002년도 기준으로 절대적 차상위계층보다 약 두 배 이상 높은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유경준(2003)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할 경우, 총소득에서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이 1996년 13.3%에서 2000년 1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노동패널의 조사결과가 절대적 수치면에서는 조금 높지만, 동태적 추세면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4-2〉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절대빈곤율	25.0	26.0	22.3	21.7	16.1	17.1
절대차상위층비중	8.7	8.8	7.1	7.3	5.3	4.3
상대빈곤율	21.7	18.8	18.0	20.2	19.6	19.6
상대차상위층비중	11.5	11.9	13.2	13.1	11.6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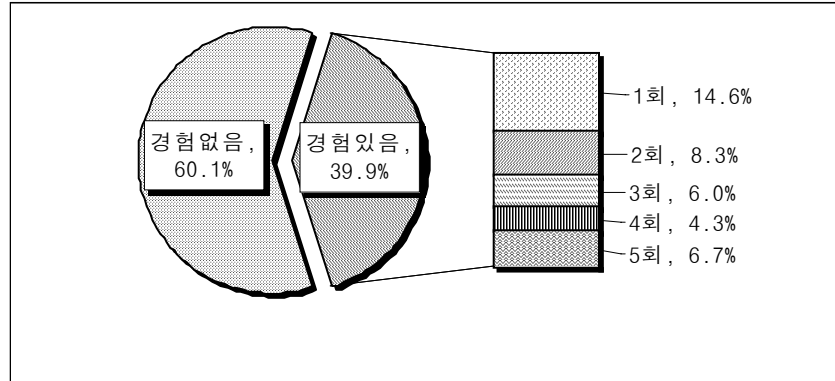
주: 1~6차년도 계속응답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2,888개 가구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24) 절대빈곤율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를 빈곤선 이하의 가구로 정하여 계산하였다. 6차년도의 경우엔 2002년도 기초생계비를 사용하여 구하였으며, 가구원수당 기초생계비는 1인가구일 때 34.5만원, 2인가구는 57.2만원, 3인가구는 78.7만원, 4인가구는 99만원, 5인가구는 112.5만원, 6인 이상 가구인 경우는 127만원이었다. 또한, 절대빈곤율 계산에서의 차상위계층이란 빈곤선의 120%의 소득에 해당하는 구간을 의미한다.

25) 상대빈곤율은 OECD(1995)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50%를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중위값의 50~70% 수준을 차상위층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4-2] 가구의 빈곤경험 횟수

(단위: %)



[그림 4-2]는 1998~2002년 기간동안 분석대상 가구들 중 빈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가구는 어느 정도인지, 경험했다면 몇 회나 경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sup>26)</sup>. 우선 빈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가구는 39.9%로 분석된다. 이 중에서 빈곤을 한 번만 경험한 가구는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내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구들도 6.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가구의 빈곤경험 횟수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취업상태 등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표 4-3 참조). 분석대상 기간동안 빈곤을 한 번 경험한 가구 중 85.2%가 남성가구주인 데 반해, 계속빈곤가구인 경우에는 남성가구주의 비중이 47.3%로 낮아졌다. 그러나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는 1회 빈곤경험가구의 비중이 14.8%이던 것에 비해 만성빈곤가구에서는 52.7%로 크게 높아졌다. 다시 말해서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남성인 경우에 비해 만성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1회 빈곤경험가구의 경우 3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 빈곤가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만성빈곤

26) 1차 조사 당시의 빈곤 여부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1차 조사 이전의 취업상태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분석상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1차 조사 당시의 빈곤경험 여부는 빈곤경험 횟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빈곤경험가구의 분석은 연도를 넘나드는 동태분석으로 특정년도의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가구의 경우에는 60대 이상 가구의 비중이 9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계속빈곤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미취업자인 경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빈곤을 경험한 횟수가 단 한 번에 그친 가구는 상당수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로 빈곤경험이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계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빠져 있는 가구들은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1회 빈곤가구의 빈곤발생 연도를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 고르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일시적 빈곤의 원인이 1997년의 외환위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고용 문제와 연관된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 빈곤경험 가구의 특성

(단위: 가구, %)

가구주의 특성		1회 빈곤경험가구	5회 모두 빈곤을 경험한 가구
가구수(전체가구 대비 비중)		412 (14.6)	188 (6.7)
성별	남성	85.2	47.3
	여성	14.8	52.7
연령	30대 이하	2.9	0.0
	40대	21.8	2.1
	50대	28.9	4.3
	60대 이상	46.4	93.6
취업 형태	임금	27.7	7.5
	비임금	34.0	18.1
	미취업자	38.3	74.5

주: 1) 1회 빈곤가구의 가구주 특성은 빈곤을 경험한 연도의 특성임.

2) 5회 빈곤가구의 가구주 특성은 2002년의 가구주 특성임.

##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표 4-4〉에서는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먼저 가구 소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IMF 직후인 2차년도 조사 당시 83.4%로 1차년도에 비해 2.4%p가 하락하였으나, 이후 3차, 4차년도에는 각각 85.8%와 87.4%로 증가하였다가, 5차년도에

다시 84.2%로 하락하였고, 6차 조사에서는 84.7%로 다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원은 전체 소득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소득이며, 이전소득이 3.4%, 기타소득 3.3%, 사회보험소득 1.9%, 금융소득은 1.3%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5차년도에 큰 증가폭을 보이던 부동산소득의 비중이 6차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퇴직금이나 증여/상속재산 등 기타소득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4〉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단위: 가구,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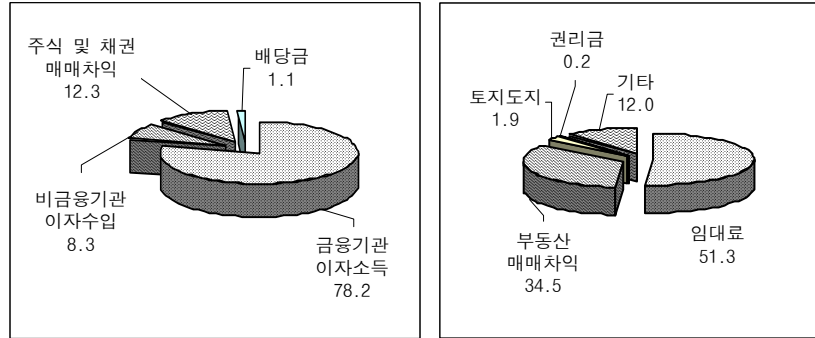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체	5,000	4,359	4,147	4,094	4,298	4,592
근로소득	85.8	83.4	85.8	87.4	84.2	84.7
금융소득	2.5	2.2	3.3	2.0	1.7	1.3
부동산소득	2.1	4.2	2.7	3.0	6.7	5.4
사회보험소득	2.7	1.2	1.4	1.5	2.0	1.9
이전소득	2.1	2.7	2.4	2.7	3.3	3.4
기타소득	4.9	6.2	4.3	3.4	2.2	3.3
연평균 총소득	1803	1928	2039	2205	2616	2730

각각의 소득원천에 대한 항목별 구성을 살펴보면(그림 4-3 참조),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기관 이자소득이 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이 12%, 비금융기관의 이자수입이 8%를 차지하였으며, 배당금의 비중은 1%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소득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료가 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부동산 매매차익이 35%로 나타났다. 반면 권리금과 토지를 도지 준 것은 각각 0.2%와 1.9%에 그치고 있다. 한편 5차년도 조사에서는 부동산 매매차익이 가장 높은 비중(54%)을 차지하였으나, 6차조사에서는 부동산 임대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sup>27)</sup> 이는 5차년도 가구의 급격한 소득 증가가 부동산소득, 특히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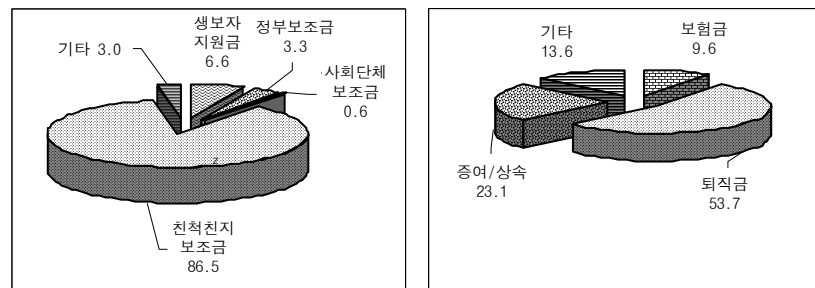
27) 5차년도 소득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노동연구원, 『제5차년도 한국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2004, 71~72쪽 참조.

(그림 4-3) 6차년도 가구의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의 항목별 보유가구 분포



다음으로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소득의 항목별 구성비중은 친척친지 보조금이 8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과 기타정부보조금은 각각 6.6%와 3.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8)</sup>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의 사회부조 형태가 여러 선진국처럼 국가에 의한 공적부조의 형태가 아니라, 친척이나 친지와 같은 혈연관계에 의한 사적이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원으로는 퇴직금이 54%로 약 절반을 넘으며, 증여/상속이 23%, 보험금의 비중은 1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 6차년도 가구의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의 항목별 보유가구 분포



28) 1~5차년도 조사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조사되던 정부보조금을 6차년도 조사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과 기타정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 제 2 절 가계 소비

이 절에서는 6차년도 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패널조사에서 가계소비는 작년 한 해(6차년도의 경우 2002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또한 혼수 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부터는 1~3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항목별 생활비를 묻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①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② 외식비 ③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④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⑤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⑥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⑦ 경조사비, ⑧ 보건의료비, ⑨ 문화비(TV·케이블TV·위성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⑩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⑪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⑫ 용돈 ⑬ 피복비 ⑭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이 중 용돈 항목은 5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6차년도 조사에서는 피복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① 예·적금, ② 개인연금, ③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④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⑤ 계, ⑥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 1. 생활비

<표 4-5>는 1~6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4-5〉 1~6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단위: 가구, %, 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 체	4,986	4,473	4,248	4,210	4,290	4,567
50만원 미만	19.3	16.9	16.4	13.9	12.3	10.8
50만~75만원미만	23.2	21.8	22.1	17.3	13.3	12.0
75만~100만원미만	12.3	14.9	11.3	13.3	9.7	9.6
100만~150만원미만	26.6	29.9	27.9	30.0	28.4	25.5
150만~200만원미만	12.5	11.9	15.6	16.6	20.6	20.0
200만원 이상	6.0	4.5	6.8	8.9	15.8	22.0
평 균	101	101	108	118	137	151

6차년도 조사에서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14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의 경우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차년도와 비교할 때 생활비의 증가가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3차년도는 전년도보다 7만원이 증가한 108만원, 4차년도에는 118만원, 5차년도에는 137만원, 6차년도에는 151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비 항목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소비계층은 1차년도 19.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차년도 조사에서는 10.8%까지 감소한 반면, 월 2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층은 1차년도에 6%에 불과했으나, 5차년도부터는 크게 증가하여 6차년도에는 2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을 통해 가구의 소득계층별 생활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 가구의 경우 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37.1%, 50~75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30.3%를 차지하고 있어, 이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60% 이상이 월 75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월평균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100~1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50~20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62.4%에 이르고 있어, 가구소득수준별로

생활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 소득계층별 월평균 생활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49.1만원으로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월평균 생활비 69.6만원)보다 3.6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6〉 6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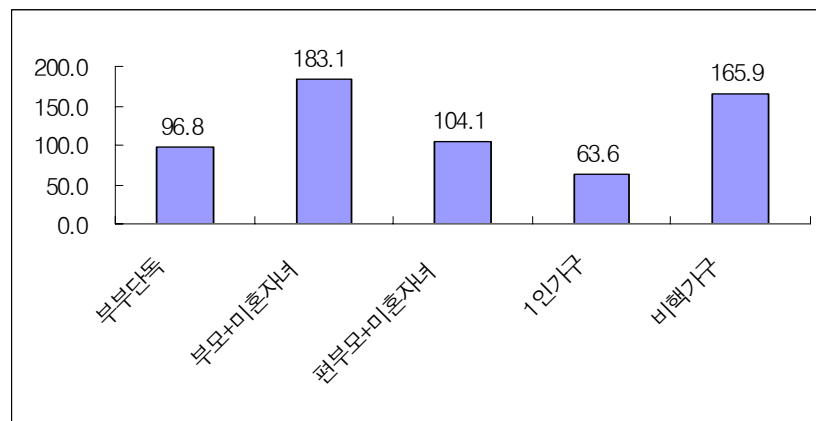
(단위: 가구,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1,173	1,299	989	1,106
50만원 미만	37.1	3.5	0.6	0.2
50만~75만원 미만	30.3	10.9	3.4	1.2
75만~100만원 미만	13.2	15.5	6.6	1.4
100만~150만원 미만	13.7	43.4	30.8	12.2
150만~200만원 미만	3.6	21.7	35.0	22.5
200만원 이상	2.1	5.0	23.6	62.4
월평균 생활비(만원)	70	123	165	249

[그림 4-5]를 통해서 6차년도 가구의 가구 구성별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핵가족 구성인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가 163.7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59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5) 6차년도 가구의 가구 구성별 월평균 생활비

(단위: 만원)





확대가족을 의미하는 비핵가구의 경우 148.7만원으로 가구원수가 더 많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부모-미혼자녀 가구보다 월평균 생활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님 중 한 분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생활비는 95.1만원으로, 부부단독가구(84.4만원)의 생활비보다 10.7만원 정도 높았다.

거주지역별 생활비는 가구 소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이 167.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는 153.6만원, 도지역은 139.4만원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주요 생활비 항목별 비중<sup>29)</sup>을 살펴보면(표 4-7 참조), 식비의 비중이 전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21.4%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차년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4-7〉 주요 항목별 생활비 부담

(단위: %)

	2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체 생활비	100.0	100.0	100.0	100.0
식비	34.5	28.4	24.1	21.4
의식비	3.2	3.9	4.2	4.0
공교육비	9.3	8.2	7.1	6.9
사교육비	8.4	8.9	8.9	10.0
차량유지비	9.0	10.5	9.8	9.7
주거비	12.1	11.6	9.8	8.8
경조사비	8.3	5.0	4.5	4.4
보건의료비	5.1	4.2	3.7	3.6
문화비	2.3	5.2	2.2	2.3
내구재	2.2	1.3	1.4	1.6
통신비	-	7.2	7.4	7.4
용돈	-	-	14.4	14.1
피복비	-	-	-	3.6
기타	5.8	5.5	2.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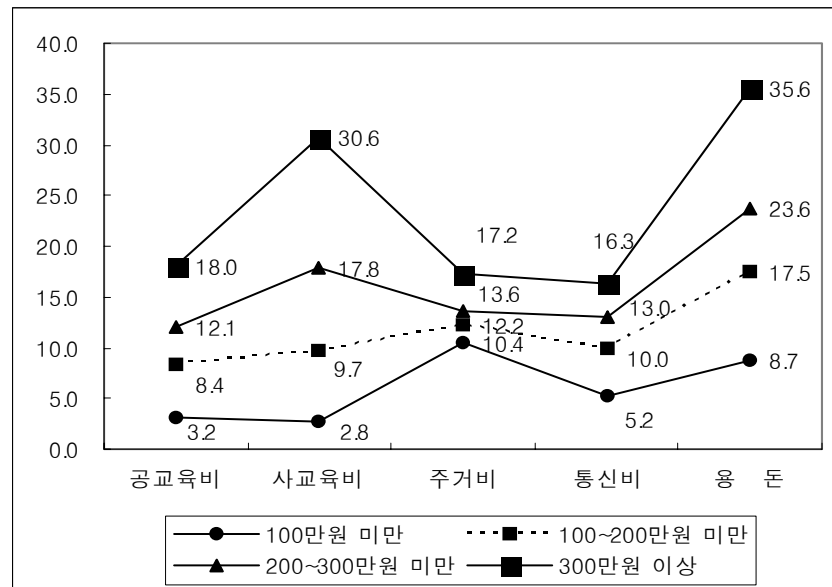
29) 한국노동패널 2, 4, 5, 6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생활비 항목 외에도 각각의 생활비 항목별 액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생활비'는 항목별 생활비의 합계를 기준(100%)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이에 반해 외식비의 비중은 2차년도 3.2%에서 4차년도 3.9%, 5차년도 4.2%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6차년도에는 4.0%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공교육비의 경우 2차년도 9.3%에서 6차년도에는 2.4%p 감소한 6.9%로 나타난 반면, 사교육비의 비중은 2차년도 8.4%에도 6차년도에는 1.6%p가 증가한 10.0%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주거비 및 경조사비의 부담정도는 2~6차년도 기간동안 각각 3.3%p와 3.9%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차년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피복비의 비중은 3.6%로 조사되었고, 5차년도부터 추가적으로 조사된 용돈의 경우에는 매해 14%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4차년도 이후 조사된 통신비의 비중 또한 7% 이상으로 나타나 인터넷 및 휴대전화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을 통해 6차년도 가구소득 계층별 평균생활비를 주요 항목 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가구소득별 생활비 지출편차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항목이 용돈과 사교육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6] 6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주요 생활비

(단위: 만원)



가구당 자녀의 수나 가구원수 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으나, 사교육비의 경우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평균 2만 8천원인 데 비해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평균 30만 6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소득계층 간에 28만원 가량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용돈의 경우에도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가구당 8만 7천원이 지출되고 있으나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35만 6천원으로 27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주거비나 통신비와 같이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지출은 소득계층별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 2. 저축

6차년도 조사가구 중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5.6%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40만 7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8 참조).

〈표 4-8〉 1~6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단위: 가구,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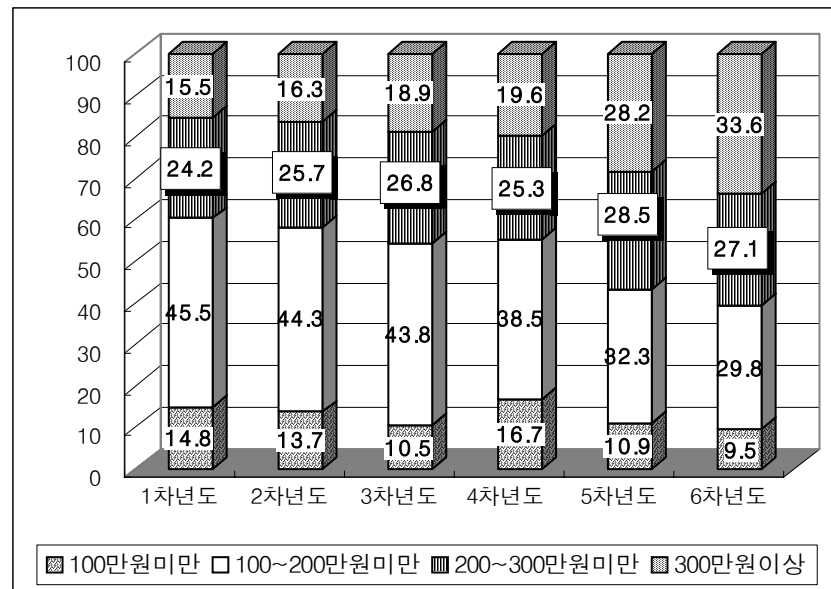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 체	4,965	4,458	4,247	4,186	4,292	4,592
저 축 안 함	46.1	47.4	48.5	30.2	26.8	34.4
저 축 함	53.9	52.6	51.5	69.8	73.2	65.6
월평균저축액	33	25	29	35	42	41

1~6차년도 기간동안 저축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저축을 한 가구가 53.9%에서 2차년도(52.6%)와 3차년도(51.5%)까지는 소폭 감소하다가 4차년도에는 69.8%까지 증가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73.2%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6차년도에 저축을 하는 가구의 비중은 65.6%로 감소하였다. 월평균 저축액의 변화 또한 1차년도에는 33만 3천원에서 2차년도(24만 8천원)까지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3차년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6차년도에는 40만 7천원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소득이나 생활비 지출과 그 맥락을 거의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그림 4-7]을 통해 각 소득계층별 저축가구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IMF 경제위기 이후 감소된 저축률의 회복이 주로 고소득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저소득가구의 저축률은 여전히 그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경우 1차년도 당시 저축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에 그치고 있으나, 저축가구의 비중이 가장 낮았던 3차년도에도 1차년도보다 3.4%p 증가한 18.9%로 나타나고 있으며, 6차년도에는 33.6%까지 증가하고 있다. 6차년도에 월평균 소득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 역시 5차년도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1차년도 이후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7) 1~6차년도 저축을 한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단위: %)



이에 반해 월평균 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차년도에 전체 저축가구 중에서 45.5%를 차지하였으나, 6차년도에는 오히려 15.7%p가 감소한 29.8%로 조사되었으며,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차년도 14.8%에서 6차년도 9.5%까지 그 비중이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

세를 살펴볼 때 저소득층은 최근 전반적인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에 급급하여 저축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표 4-9>를 통해 6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저축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의 경우 25만원 미만을 저축하는 가구의 비중이 93.7%로, 이 소득계층의 경우 저축액수 측면에서도 그다지 큰 액수를 저축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만~200만원 미만 소득계층 가구의 경우에도 월 25만원 미만을 저축하는 비중이 65.5%로 가장 높으며, 월소득 200만~300만원 미만의 가구는 50만~100만원 미만을 저축하는 가구의 비중이 26.6%에 이르고 있다.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40.7%가 월 100만원 이상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구소득 규모별 월평균 저축액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를 월평균 저축액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월평균 저축액이 18만 9천원인 데 반해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가구는 월평균 저축액이 105만 5천원으로 약 5.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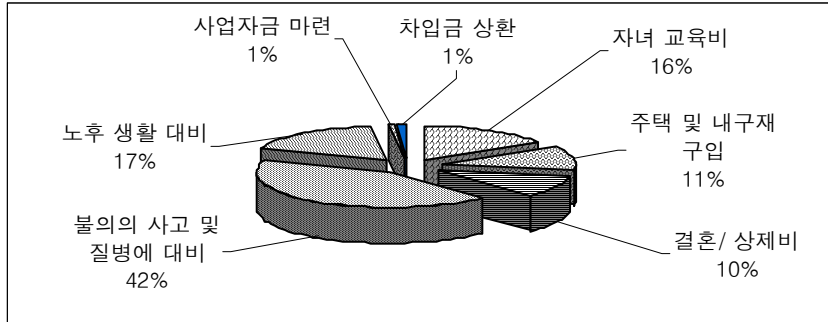
다음으로 6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4-8]과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가구 중 4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녀교육비’와 ‘노후 생활대비’가 각각 16%와 17%로 이들 세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4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6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저축액

(단위: 가구, %, 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200만~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304	894	802	973
25만원 미만	93.7	65.5	42.8	23.3
25~50만원 미만	4.3	18.2	20.2	11.9
50~100만원 미만	1.6	12.8	26.6	24.2
100만원 이상	0.4	3.5	10.4	40.7
월평균 저축액	19	37	51	106

[그림 4-8] 6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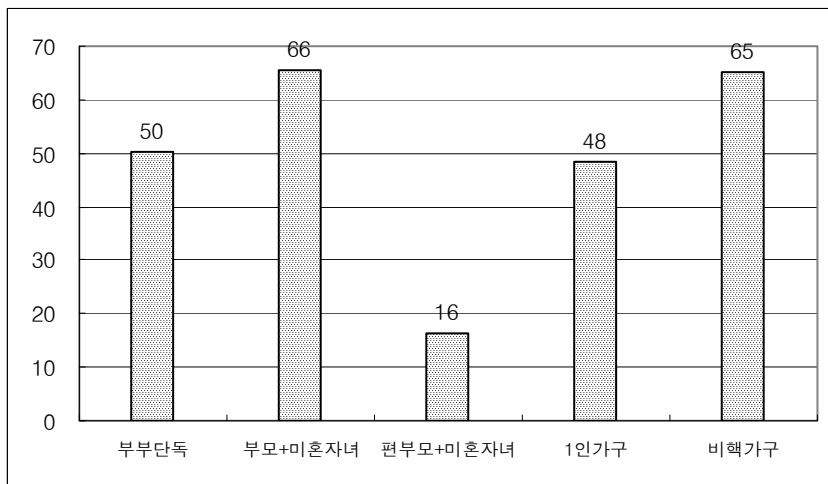


주택 및 내구재 구입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가구의 비중은 11%로 그리 크지 않았으며, 결혼이나 상·제례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는 비중 역시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4-9]를 통해서 가구 구성별로 월평균 저축액을 살펴 보면, 생활비 지출이 가장 컸던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월평균 저축액이 6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 중 한 분과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저축액이 16만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9] 6차년도 가구의 가구 구성별 월평균 저축액

(단위: 만원)



한편,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68만 4천원으로 가장 높고, 광역시가 54만 7천원으로 가장 낮으며, 도지역은 63만 6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제 3 절 주거형태 및 비용

이 절에서는 6차년도 패널가구의 주거형태와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전세·월세·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을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기재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평수와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 1. 입주형태 및 주거 비용

먼저 <표 4-10>을 통해 6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61.1%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전세 23.8%, 월세 9.2%로 나타나고 있다. 1~6차년도 입주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자의 비중

이 1차년도 55.8%에서 6차년도에 61.1%로 증가한 반면, 전·월세의 비중은 1차년도 40.4%에서 7.4%p정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0〉 1~6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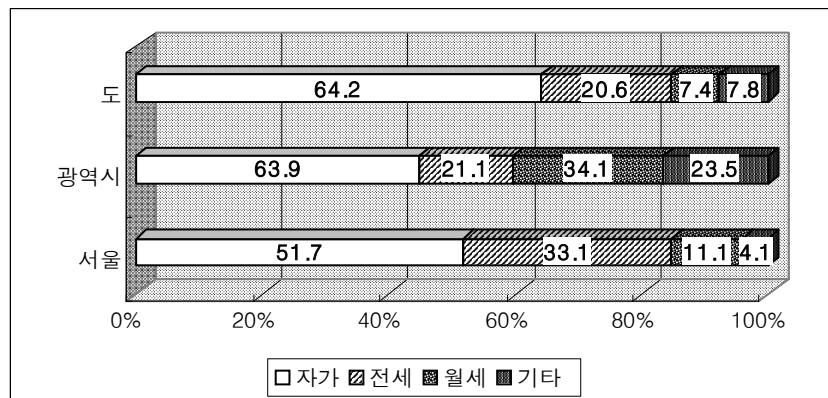
(단위: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 체	5,000	4,508	4,258	4,248	4,286	4,592
자 가	55.8	56.6	56.8	59.2	60.1	61.1
전 세	31.0	30.1	30.4	28.6	27.6	23.8
월 세	9.3	9.1	8.4	7.6	7.3	9.2
기 타	3.8	4.2	4.3	4.6	5.0	5.9

[그림 4-10]을 통해서 6차년도 조사가구의 거주지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도지역의 자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전·월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 자가 비중은 도지역이 64.2%로 서울(51.7%)보다 12.5%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63.9%)에 비해서도 0.3%p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전·월세 비중은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지역의 전세와 월세 비중은 각각 33.1%와 11.1%로 나타나고 있으나 광역시는 각각 21.1%와 34.1%, 도지역은 20.6%와 7.4%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0) 6차년도 거주지별 입주형태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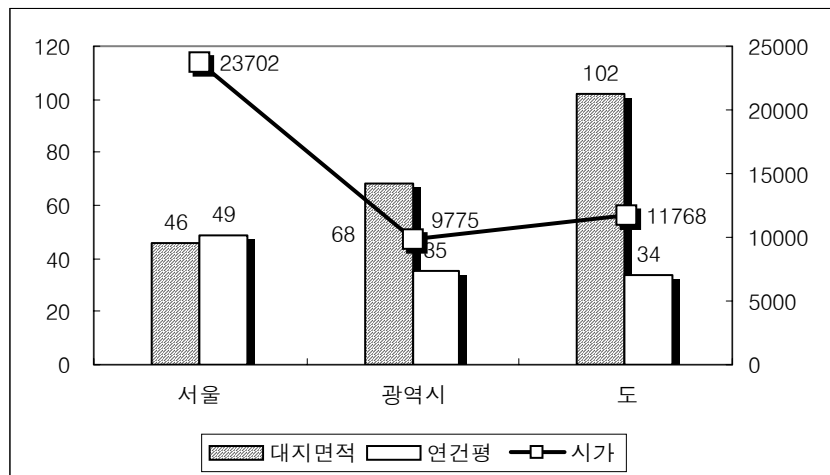




이러한 거주지별 편차는 집값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1]을 통해,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지면적의 경우, 도지역이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원이나 마당, 차고 같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실제 주거공간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도지역의 대지면적은 평균 102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68평, 서울은 46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인 연건평은 서울이 가장 넓은 49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35평, 도지역은 34평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지역이 가장 높은 2억 3,702만원인 데 비해 광역시는 서울의 41.2%에 해당하는 9,775만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도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1억 1,7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서울지역의 경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의 주거공간이 타지역에 비해 넓고 집값 또한 2배 가량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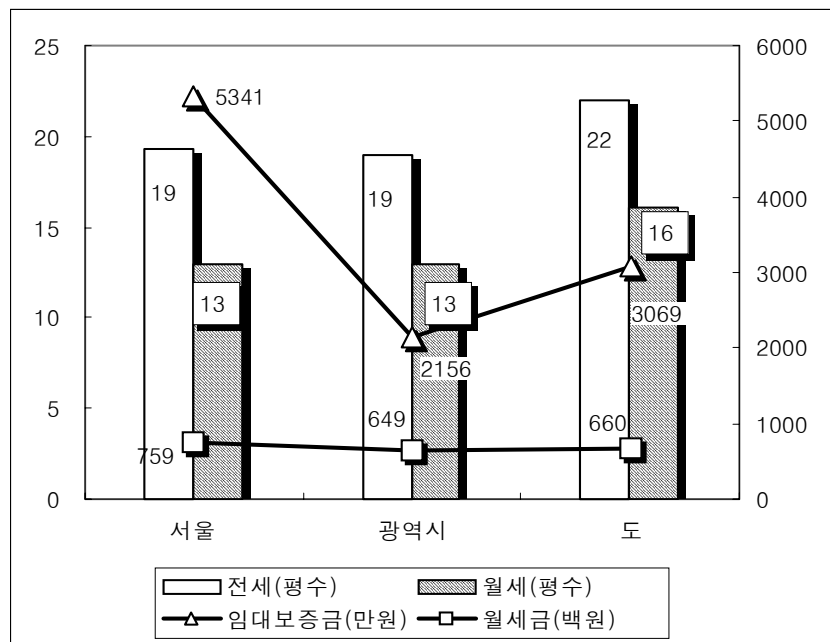
(그림 4-11) 6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단위: 평, 만원)



다음으로 [그림 4-12]는 거주지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의 주택의 실제사용평수와 전·월세금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전세인 경우, 도지역의 평수가 22평으로 19평에 그친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3평 정도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세의 경우도 비슷한데, 도지역에 거주할 경우 실제 평수가 16평인 데 반해 서울과 광역시는 이보다 3평 정도 작은 13평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월세 거주자의 실제 평수는 전세에 비해 5~6평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세 거주자가 월세 거주자에 비해서는 활용가능한 주거공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전·월세 평균 임대보증금은 5,341만원으로, 광역시(2,156만원)보다는 약 2.5배 정도 높으며, 도지역(3,069만원)보다도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월세금 또한 서울지역의 경우 7만 6천원인 데 비해 광역시와 도는 이보다 약 1만원 정도 낮은 6만 5천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2) 6차년도 거주지별 주택종류 분포

(단위: 평, 만원)



## 2. 주택의 종류 및 주거비용

<표 4-11>은 1~6차년도 주택종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6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39.6%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다음으로는 36.6%를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10.2%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기간동안 주택 종류별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트 거주자가 1차년도 3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차년도에 이르러 7%p 이상 증가한 반면, 나머지 주택의 거주자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단독주택 비중의 감소(1970년 95% → 2000년 49.9%), 아파트의 비중 증가(1970년 0.7% → 2000년 36.8%)라는 추세가 노동패널조사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거주지별 주택 종류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4-13]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여, 서울지역의 경우 20.0%에 이르지만 광역시지역과 도지역은 각각 9.0%, 5.8%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광역시와 도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비중(각각 37.2%, 40.6%)이 서울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거주자의 비중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34.2%로 광역시(41.2%)와 도지역(41.4%)에 비해 낮지만, 단독주택보다는 오히려 6.1%p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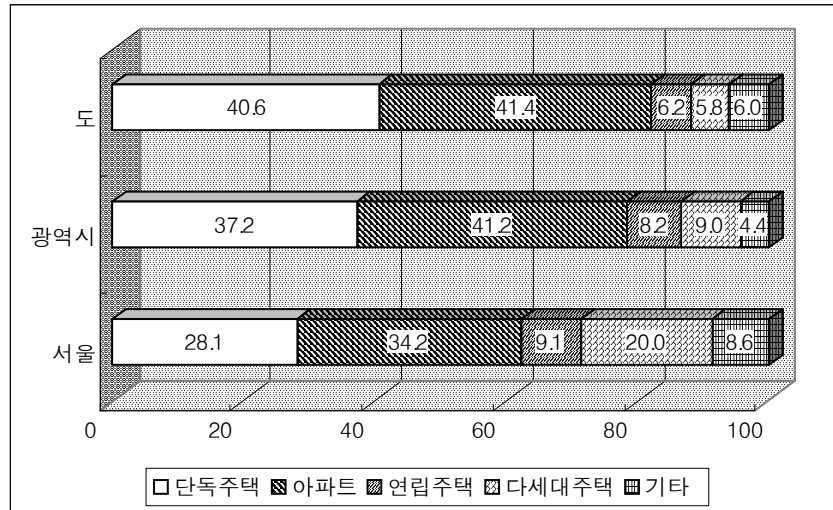
<표 4-11> 1~6차년도 가구의 주택종류 분포

(단위: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 체	4,996	4,506	4,250	4,248	4,286	4,592
단 독 주 택	39.2	38.4	37.8	38.0	36.5	36.6
아 파 트	32.0	33.5	34.5	35.7	37.3	39.6
연 립 주 택	8.1	7.8	8.0	7.8	7.7	7.5
다 세 대 주 택	16.2	15.3	14.8	12.0	12.3	10.2
기 타	4.5	5.0	4.9	6.6	6.1	6.2

[그림 4-13] 6차년도 거주지별 주택종류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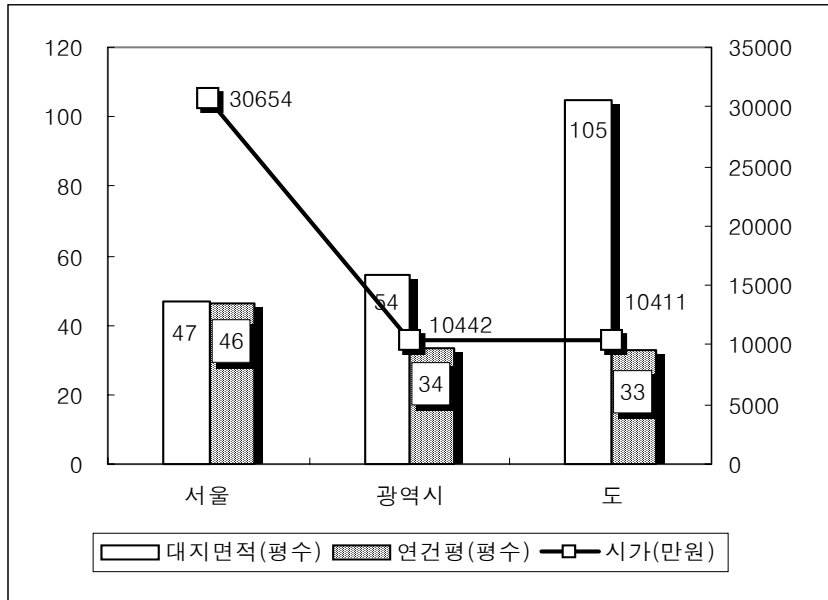


이는 서울지역 응답자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비중이 29.1%로, 도지역(12.0%)과 광역시(17.2%)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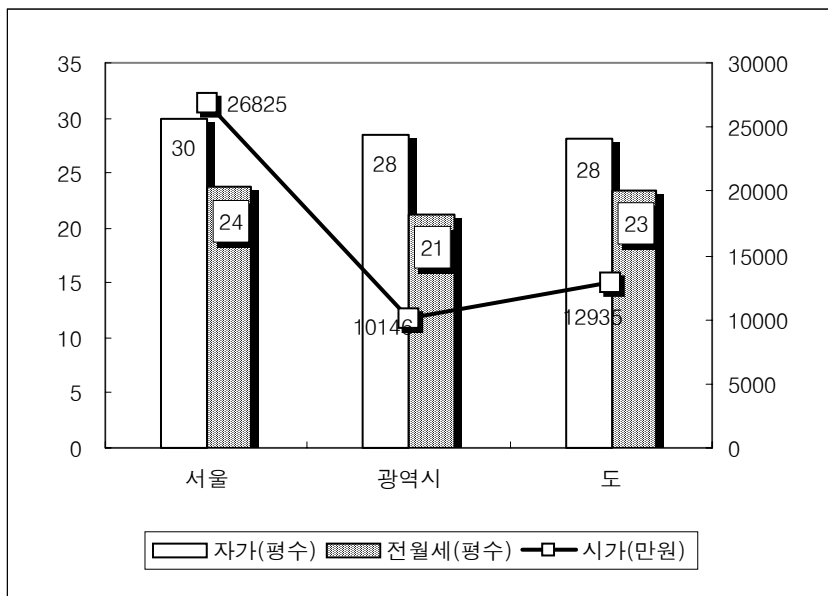
[그림 4-14]는 거주지별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자가의 분포와 유사하게 대지면적의 경우, 도지역이 105평으로 가장 넓은 데 비해서 연건평은 서울지역이 46평으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주거지 시가의 경우, 서울지역은 평균 3억 654만원인 데 비해서 타지역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1억 442만원(광역시)과 1천억411만원(도지역) 수준이었다.

이어서 [그림 4-15]는 거주지별 아파트의 평수와 시가를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가 자기 집인 경우, 아파트 평수는 모든 지역이 28~30평 사이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전·월세인 경우에도 아파트 평수는 서울이 23.8평, 광역시가 21.3평, 도지역이 23.4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가 소유자일 경우 아파트 시가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억 6,825만원으로 광역시(1억 146만원)보다는 2.6배, 도지역(1억 2,935만원)보다는 2.1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4] 6차년도 거주지별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평균)



[그림 4-15] 6차년도 거주지별 아파트의 평수 및 시가(평균)



## 제 4 절 자산 및 부채

이 절에서는 6차년도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소비 문항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현재를 기준(6차년도의 경우 2003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 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노동패널조사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대 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차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는지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여야 할 갯돈 등을 포함한다.

### 1. 부동산 자산

먼저 부동산 자산을 살펴보면, 6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1.2%로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12 참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시가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6차년도의 경우 1억~3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높지만, 이전 연도와 비교할 때 부동산 시가가 3억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가가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2차년도에 1.5%에서 3차년도에 0.2%p 정도 감소했으나, 6차년도에는 2.8%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부동산 시가가 3억~10억원 미만인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3차년도와 4차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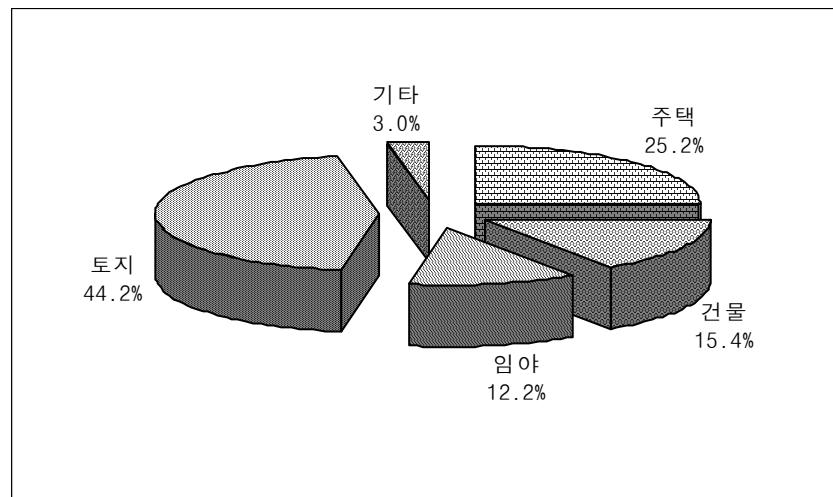
도에 각각 7.6%, 7.2%에 그치던 것이 5차년도부터 증가하여 6차년도에는 12.9%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4-12〉 부동산 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 체	4,508	4,266	4,248	4,298	4,592
부동산 소유여부					
없음	78.7	80.0	77.7	77.7	78.8
있음	21.3	20.0	22.3	22.3	21.2
1천만원 미만	8.7	6.3	8.3	5.8	6.8
1천~5천만원 미만	28.9	30.2	27.7	24.1	28.5
5천~1억원 미만	24.2	24.0	26.5	26.5	19.1
1억~3억원 미만	28.4	30.7	26.5	31.0	28.8
3억~5억원 미만		5.3	4.4	5.9	7.1
5억~10억원 미만	3.6	2.3	2.8	4.0	5.8
10억원 이상	1.5	1.3	1.8	1.8	2.8
잘모르겠음	4.6	-	2.0	0.9	1.0

〔그림 4-16〕 6차년도 소유 부동산 자산의 종류 분포



주: 이 항목은 복수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개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6차년도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종류에 대한 조사문항은 가구당 최대 5개 종류까지 복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16]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토지로 전체 응답 중 44.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주택이 25.2%, 건물이 15.4%, 임야가 12.2%, 기타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4-13>을 통해 6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동산 자산 총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의 시가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1천만~5천만원 사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41.1%)이 가장 높은 반면,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서는 1억~3억원 사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32.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3> 6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동산자산 분포

(단위: 가구,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195	206	180	360
1천만원 미만	13.8	7.5	3.7	4.7
1천~5천만원 미만	41.1	38.2	28.5	17.3
5천~1억원 미만	18.1	20.8	24.5	16.0
1억~3억원 미만	21.3	24.2	33.0	32.8
3억~5억원 미만	1.6	3.7	5.7	12.3
5억~10억원 미만	3.4	2.2	3.6	10.1
10억원 이상	0.0	2.8	0.0	5.6
잘모르겠음	0.8	0.7	0.9	1.2

또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소득계층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54.9%로 절반이 넘는 데 반해, 월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45.7%,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32.2%,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2.0%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저가의 부동산 소유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자산이 1억~3억원 미만인 경우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



2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32.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 가구 중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금융자산

<표 4-14>를 통해서 6차년도에 조사된 가구 중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차년도 71.2%에서 3차년도 64.9%, 4차년도 65.9%, 5차년도 66.3%, 6차년도 63.3%로 지난 6년 동안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2차년도 1344만원에서 3차년도 1396만원, 4차년도 1582만원, 5차년도에는 1598만원이었으며, 6차년도에는 2차년도보다 330만원이 증가한 167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4-14>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 체	4,508	4,266	4,248	4,298	4,592
없음	28.8	35.1	34.1	33.7	36.7
250만원 미만	15.7	12.7	14.7	12.4	11.8
250만~500만원 미만	8.6	7.4	6.1	5.6	5.3
500만~1000만원 미만	12.7	12.4	12.3	11.4	10.8
1000만~5000만원 미만	27.8	25.2	25.4	27.7	27.2
5000만~1억원 미만	4.4	4.6	4.4	6.1	4.7
1억원 이상	2.0	2.7	3.1	3.0	3.6
평 균(만원)	1344	1396	1582	1598	1674

주: 금융자산 시가총액의 평균은 금융자산이 0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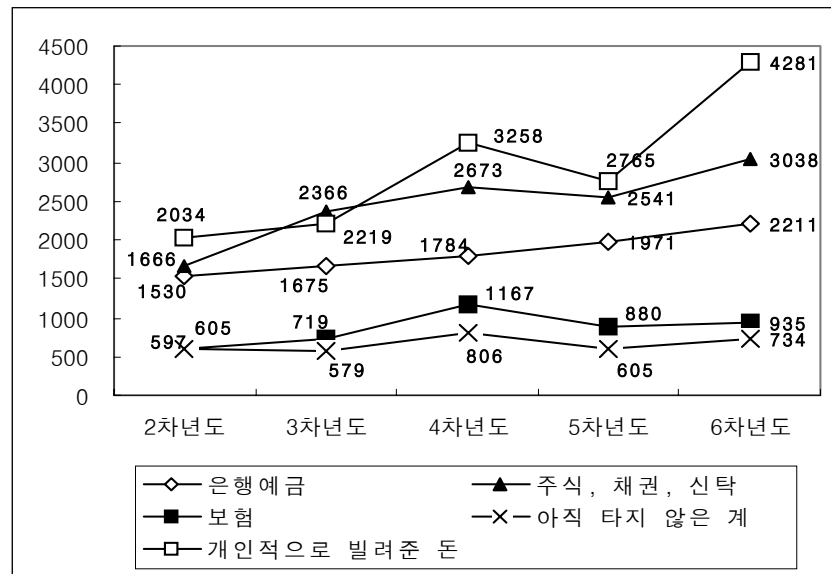
6차년도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0만원 미만인 가구가 11.8%, 250만~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5.3%, 500만~1,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소득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보다 금융소득이 적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금융

소득이 이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6차년도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늘고, 5,000만~1억원 미만의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그림 4-17]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를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절대적 비중 및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은 2차년도에 평균 2034만원이었으나 4차년도에 3258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6차년도에 크게 증가하여 428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7) 2~6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추이

(단위: 만원)



한편,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 비중은 은행예금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간 격차 또한 연도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는 주식/채권/신탁이 1666만원으로 은행예금(1530만원)보다 136만원 정도 높지만, 3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그 격차

가 더욱 벌어져 각각 691만원과 88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5차년도에는 조금 감소하여 570만원으로 좁혀졌으나, 6차년도에는 그 격차가 다시 827만원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저축성보험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차년도 597만원에서 4차년도에는 최고 1167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88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6차년도에는 조금 증가한 93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직 타지 않은 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변동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차년도와 6차년도 조사에서 각각 평균 605만원과 73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표 4-15>는 6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금융자산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자산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250만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16.9%를 차지하였다. 월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금융자산이 없다는 응답이 41.0%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자산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비중이 21.8%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월소득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금융자산 1,000만~5,000만원 미만으로 그 비중이 33.8%에 이르며, 금융자산이 없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없다는 응답이 16.9%까지 크게 줄어들었으며, 1,000만~5,000만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43.8%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5,000만~1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가졌다는 응답도 11.3%에 이르며, 1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소유한 비중도 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구소득계층별 금융자산 소유의 불평등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금융자산을 1억 이상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2.2%로, 월평균 소득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의 비중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는 이 소득계층에 속한 가구의 가구주가 은퇴한 고령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15〉 6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분포

(단위: 가구,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1,185	1,307	992	1,108
없 음	56.6	41.0	30.9	16.9
250만원 미만	16.9	13.3	10.8	5.8
250~500만원 미만	3.9	8.1	5.9	3.2
500~1천만원 미만	7.6	12.5	12.8	10.2
1천~5천만원 미만	11.0	21.8	33.8	43.8
5천~1억원 미만	1.8	2.0	3.9	11.3
1억원 이상	2.2	1.3	2.0	8.8

### 3. 가구의 부채

6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7.1%를 차지하여 1차년도 조사(40.6%) 당시보다 약 6.5%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16 참조). 평균 부채잔액도 1차년도는 773만원에 그쳤으나 2차년도 1,045만원, 3차년도 1,043만원, 4차년도 1,072만원, 5차년도 1,092만원, 6차년도 1,152만원으로 계속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가 안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소득증가로 이어지긴 했지만, 가계부채 또한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성장이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의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노동패널자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6차년도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가구의 분포를 부채잔액별로 살펴보면 <표 4-17>과 같다. 먼저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65.5%에 이르고 있으나,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부채비중도 함께 증가하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48.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라 부채잔액의 비중이 가장 크게 변동하는 구간은 5000만원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2%에 그치고 있으나,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3%로 3.6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6〉 부채 잔액 분포

(단위: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전 체	4,942	4,491	4,259	4,225	4,281	4,581
부채 없음	59.4	51.2	55.4	52.4	52.5	52.9
500만원 미만	6.8	7.7	5.9	6.3	5.9	5.0
500~1,000만원 미만	5.8	7.4	6.4	6.7	6.5	6.1
1,000~5,000만원 미만	24.8	27.2	25.1	27.7	27.8	27.0
5,000만원 이상	3.3	6.5	7.3	6.9	7.3	9.0
평 균(만원)	773	1045	1043	1072	1092	1152

주: 가구의 부채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표 4-17〉 6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잔액 분포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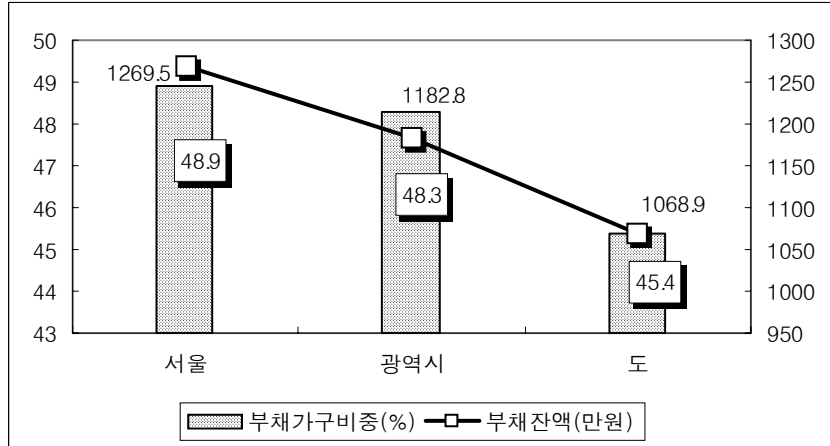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1,180	1,303	991	1,108
부채 없음	65.5	50.9	45.2	48.9
500만원 미만	7.4	5.0	4.1	3.3
500~1천만원 미만	4.5	7.5	8.0	4.1
1천~5천만원 미만	18.4	29.5	32.4	28.4
5천만원 이상	4.2	7.1	10.3	15.3
평 균(만원)	655	1146	1365	1466

주: 가구의 부채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잔액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모든 소득구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8.4%만이 이 구간에 해당되지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200만원인 경우와 200만~300만원인 경우에는 각각 29.5%, 32.4%로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다만,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28.4%로 앞의 두 소득계층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5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15.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계층별 평균 부채잔액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655만원, 월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146만원, 200만~

[그림 4-18] 6차년도 가구의 거주지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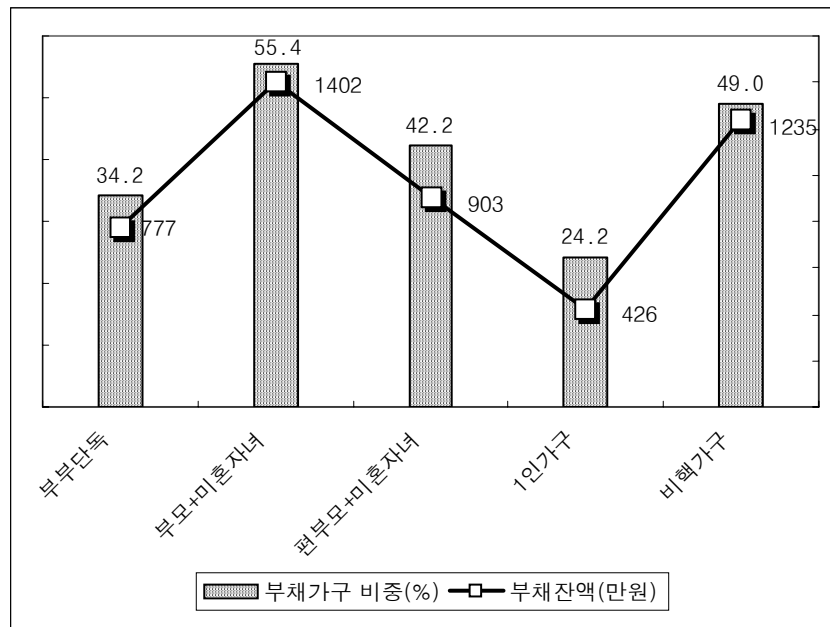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365만원,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466만원으로 가구소득계층에 따른 부채잔액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그림 4-18]을 통해 거주지별로 부채가구의 비중과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서울지역이 48.9%로 타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지역이 45.4%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부채가구의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지역의 경우, 평균 부채잔액이 1069만원으로 서울지역(1269만원)보다 200만원 정도 적고, 광역시지역에 비해서 114만원 정도 적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4-19]를 통해 가구 구성별로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중 및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핵가족 형태인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부채가구의 비중이 55.4%로 가장 높으며, 편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부채의 비중이 42.2%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등록금과 같은 교육비 문제로 인해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부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확대가족 형태인 비핵가구의 경우에도 49.0%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 구성별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부채잔액이 가장 높은 가구형태도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로 1,40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비핵가족(1,235만원), 편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903만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부부단독가구나 1인가구의 경우에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34.2%와 24.2%로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 아니라, 평균 부채잔액 또한 각각 777만원, 426만원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19] 6차년도 가구의 가구 구성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 제 5 장

##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

한국노동패널(KLIPS)조사에서는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 이용하는 종류와 이용횟수, 이용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5가지까지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사교육과 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1999년)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고,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는 그 대상을 재수생 이하 자녀로까지 확대하여 조사했다.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되는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종류는 ① 학원, ② 개인 및 그룹과외, ③ 학습지, ④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별도의 수업료를 지불한 경우), ⑤ 방과후교실(학교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특기지도 혹은 보충학습), ⑥ 국공립어린이집, ⑦ 민간어린이집, ⑧ 놀이방, ⑨ 직장보육시설, ⑩ 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⑪ 일반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종류가 5차년도(2002년)까지는 조사되었으나, 6차년도(2003년) 조사에서는 <표 5-1>과 같이 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종류와 이용횟수, 그리고 이용시간을 제외한 이용여부와 월평균 수업료만을 간략하게 조사하였다.



〈표 5-1〉 KLIPS 6차년도 자료의 자녀교육 관련 측정항목

자녀번호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월평균 수업료(만원)
첫 번째 자녀	1.이용함 2.이용 안함	1인당 지출비용 총액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		
...		

본 장에서는 6차년도에 조사된 항목을 중심으로 제6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과 지출비용에 관한 내용을 가구단위와 자녀단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가구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고,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와 이용하지 않는 자녀의 특성을 가구 및 어머니 특성별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자녀연령별 이용여부도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계의 총 지출비용을 가구 및 어머니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녀 연령별 1인당 지출금액의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대상은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에 조사된 4,592가구 중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1,999가구와 이들 가구의 재수생 이하 개별 자녀이다. 가구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분석은 1,999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분석은 1,999가구의 3,389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구의 총 지출비용과 자녀 1인당 지출비용은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1,999가구(3,389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이들 가구 중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없는 681가구(959명)를 제외한 1,318가구(2,430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을 모두 제시하였다. 한편, 어머니특성과 관련된 분석의 결과는,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96가구와 이들 가구의 133명의 자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본장의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가구가중치가 적용되었다.

〈표 5-2〉 분석대상 가구

(단위: %)

		사례수	비율
전 체		4,592	100.0
재수생 이하 자녀유무	자녀 없음	3,839	56.5
	자녀 있음	1,999	43.5
	이용자녀 있음	1,318	65.9
	이용자녀 없음	681	34.1

## 제 1 절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

### 1. 가구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가구단위에서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재수생자녀가 있는 1,999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및 어머니특성에 따른 가구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고,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비교하였다. 우선 가구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은 가구내 재수생 이하 자녀수(B) 대비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자녀수(A)의 비율로 정의하여 산출하였다. <표 5-3>과 <표 5-4>는 가구 및 어머니 특성에 따른 이용률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5-3>에 정리되어 있는 가구특성에 따른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 우선 분석대상 가구 전체의 평균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은 69.3%로 70.0% 가까운 이용률을 보였다. 각각의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의 재수생 이하 자녀수로 구분할 경우 자녀수가 2명인 가구의 이용률이 75.4%로 가장 높았다. 가구원수로 구분할 경우 4명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가 74.2%의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또 가족구성별로 구분하면, 핵가족과 비핵가족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가지 범주로 나누어 이용률을 제시한 월평균 가구총소득 수준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아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갖는 가구의 이용률은 43.4%인 데 반해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이용률은 86.3%로 그 차이가 42.9%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지역의 이용률이 73.0%로 가장 높고, 도지역이 62.1%로 가장 낮아 서울과 경기 또는 광역시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이들 지역과 도지역의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5-3〉 가구특성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단위: %)

	범주	구성비율	이용률
재수생 이하 자녀수	1명	34.5	61.7
	2명	57.6	75.4
	3명 이상	7.9	58.2
가구원수	3명 이하	48.4	58.8
	4명	37.1	74.2
	5명	11.4	67.7
	6명 이상	3.1	65.7
가족구성	핵가족	87.9	69.5
	비핵가족	12.1	68.1
월평균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	24.6	43.4
	100만~200만원 미만	28.2	58.8
	200만~300만원 미만	22.0	72.2
	300만~500만원 미만	18.1	83.7
	500만원 이상	7.1	86.3
거주지역	서울	24.1	73.0
	경기	19.7	71.6
	광역시	30.4	70.1
	도	25.8	62.1
전 체		100.0	69.3

〈표 5-4〉에서는 조사가구에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96가구가 제외된 1,903가구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에 따른 이용률을 비교하였다. 분석가구의 전체 평균 이용률은 70.5%로, 어머니의 정보가 없는 가구도 포함된 1,999가구의 전체 평균 이용률 69.3%보다 소폭 높

게 나타났다.

세 범주로 구분된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이용률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30대인 가구의 이용률이 74.4%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73.0%, 20대 34.2%로 나타났다. 20대의 젊은 어머니의 경우에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들의 자녀가 사교육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린 자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이용률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대졸 이상 학력인 가구의 이용률이 76.0%로 가장 높고, 고졸(73.4%)의 경우가 전문대졸(68.1%)의 경우보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 고졸미만의 경우가 56.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가구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의 차이가 19.5%p로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이용률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의 이용률(75.6%)이 어머니가 미취업상태인 가구의 이용률(67.1%)에 비해 8.5%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어머니특성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단위: %)

	범주	구성비율	이용률
연령	만 30세 미만	8.4	34.2
	만 30~39세	51.7	74.4
	만 40세 이상	39.9	73.0
교육수준	고졸 미만	16.1	56.5
	고졸	54.5	73.4
	전문대졸	12.2	68.1
	대졸 이상	17.2	76.0
취업상태	취업	40.5	75.6
	미취업	59.5	67.1
전 체		100.0	70.5

<표 5-5>와 <표 5-6>은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가구특성과 어머니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표 5-5>에 제시되어 있는 가구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 중 재수생 이하 자녀가 2명인 가구가 62.6%로

가장 많으나,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재수생 이하 자녀가 1명인 가구(43.1%)나 3명 이상인 가구(10.7%)의 비율이 이용하는 가구에 비해 각각 12.3%p, 4.1%p 높다.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나 그렇지 않은 가구나 평균 가구원수는 4.0명으로 같다. 그러나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4명인 비율(60.7%)이 비이용가구(47.6%)보다 높고, 비이용가구는 3명 이하의 비율(29.7%)이 이용가구(18.7%)보다 높아, 재수생 이하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의 경우가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이용가구(86.2%)나 비이용가구(85.4%)나 85.0% 이상이 핵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비핵가족의 비율이 비이용가구에서 0.8%p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의 총소득을 비교하여 보면, 월평균 200만원의 소득을 기점으로 하여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비율이 비이용가구의 경우에 비해 높은 반면, 비이용가구의 경우는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비율이 이용가구의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비율이 이용가구는 6.6%, 비이용가구의 경우는 이보다 12.8%p 높은 19.4%이며, 월평균 100만~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에서도 비이용가구의 비율이 이용가구에 비해 14.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만~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경우에는 이용하는 가구의 비율이 비이용가구에 비해 3.9%p 높고, 300만~5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경우에는 비율 차이가 16.3%p에 달하며,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경우에는 7.0%p의 적지 않은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가계의 경제적 여건이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주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가 비이용가구에 비해 도지역을 제외한 서울, 경기, 광역시지역의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이용가구의 서울지역 거주율은 25.1%로 비이용가구의 20.9%보다 4.2%p 높고, 이용가구의 경기도 거주율은 2.6%p, 광역시 거주율은 1.2%p

높았다. 그러나 도지역의 거주율은 비이용가구 29.4%, 이용가구 21.4%로 비이용가구의 경우가 8.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 및 보육시장이 성장·발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5-5>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가구와 비이용가구의 가구특성 비교 (단위: %)

	범주	전체	이용가구	비이용가구
전체		100.0	65.9	34.1
		100.0	100.0	100.0
재수생 이하 자녀수	1명	34.5	30.8	43.1
	2명	57.6	62.6	46.2
	3명 이상	7.9	6.6	10.7
	평균(명)	1.7	1.8	1.7
가구원수	3명 이하	48.4	18.7	29.7
	4명	37.1	60.7	47.6
	5명	11.4	15.3	16.5
	6명 이상	3.1	5.3	6.2
	평균(명)	4.0	4.0	4.0
가족구성	핵가족	87.9	86.2	85.4
	비핵가족	12.1	13.8	14.6
월평균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	24.6	6.6	19.4
	100~200만원 미만	28.2	24.6	39.0
	200~300만원 미만	22.0	28.9	25.0
	300~500만원 미만	18.1	29.0	12.7
	500만원 이상	7.1	10.9	3.9
	평균(만원)	236.9	312.1	213.6
거주지역	서울	24.1	25.1	20.9
	경기	19.7	24.2	21.6
	광역시	30.4	29.3	28.1
	도	25.8	21.4	29.4

<표 5-6>은 이용가구와 비이용가구의 어머니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어머니의 평균연령을 비교해 보면 이용가구가 38.2세로 비이용가구 36.3세보다 1.9세 높은데, 이 같은 차이는 만 30세 미만의 경우 비이용가

구(18.7%)가 이용가구(4.0%)에 비해 14.7%p 높기 때문이며, 이용가구가 비이용가구에 비해 30세 이상의 비율, 특히 40세 이상의 비율이 높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이용가구 어머니의 평균 교육연수가 12.5년으로 비이용가구 어머니의 11.7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비이용가구 어머니가 고졸 미만의 비율이 23.7%로 이용가구 어머니에 비해 10.8%p 높은 것에 반해, 이용가구 어머니는 고졸학력의 비율이 7.6%p, 대졸 이상의 비율이 4.6%p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취업상태의 경우는 이용가구의 어머니가 취업한 비율이 43.4%로 비이용가구 어머니의 취업비율 33.6%보다 9.8%p 높아,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가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가구와 비이용가구의 어머니특성 비교

(단위: %)

	범주	전체	이용가구	비이용가구
전체		100.0	70.5	29.5
		100.0	100.0	100.0
연령	만 30세 미만	8.4	4.0	18.7
	만 30세~39세	51.7	54.6	44.8
	만 40세 이상	39.9	41.4	36.5
	평균(세)	37.6	38.2	36.3
교육수준	고졸 미만	16.1	12.9	23.7
	고졸	54.5	56.7	49.1
	전문대졸	12.2	11.8	13.2
	대졸 이상	17.2	18.6	14.0
	평균(년)	12.3	12.5	11.7
취업상태	취업	40.5	43.4	33.6
	미취업	59.5	56.6	66.4

## 2.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여기에서는 자녀 1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재수생 이하 3,38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가구 및 어머니 특성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으며, 자녀연령별 이용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았다. 우선 분석 대상의 63.8%가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36.2%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은 가구특성별 재수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 여부를 제시한 것이다. 가구의 재수생이하 자녀수와 가구원수로 구분해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가구단위의 분석결과와 같이 이용하는 자녀의 가구는 재수생 이하 자녀수가 2명인 비율이 이용하지 않는 자녀의 가구에 비해 높고, 자녀수가 1명이거나 3명 이상의 비율은 이용하지 않는 자녀의 경우가 이용하는 자녀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 가구원수에 있어서도 이용하지 않는 자녀는 가구원수가 3명 이하인 비율이 이용하는 자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단위 분석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던 가족구성의 경우,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가 비핵가족 비율에 있어 이용하는 자녀에 비해 3.0%p 높게 나타나, 가구단위 분석에 비해 다소 많은 차이를 보였다.

다섯 범주로 나누어 분포를 제시한 월평균 가구 총소득의 경우, 이용자녀 가구의 소득과 이용하지 않는 자녀 가구의 소득수준이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용자녀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46만 9천원이고 이용하지 않는 자녀 가구는 200만 6천원으로 무려 146만 3천원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소득분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구단위 분석의 결과와 같이 월평균 소득 200만원을 기점으로 하여 200만원 미만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자녀의 구성비율이 높아, 이용하지 않는 자녀의 20.7%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인 데 반해 이용하는 자녀는 7.7%만이 포함되어 그 차이가 13.0%p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100만~2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에서도 이용하지 않는 자녀 비율이 이용하는 자녀 비율에 비해 16.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는 이용하는 자녀 비율이 이용하지 않는 자녀 비율에 비해 높는데, 월평균 300만~500만원 미만 소득범주에서는 이용하는 자녀 비율이 13.5%p 높고, 월평균 500만원 이상에서는 13.9%p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에 가구의 소득수준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월



평균 200만원 정도가 기준점이 됨을 알 수 있다.

가구단위 분석에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광역시지역과 도지역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던 거주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단위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예컨대, 가구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에 있어서는 서울지역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서울과 경기, 서울과 광역시, 경기와 광역시의 차이는

〈표 5-7〉 가구특성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단위:%)

	범주	전체 구성비율	이용함	이용 안함
전 체		100.0	63.8	36.2
		100.0	100.0	100.0
재수생 이하 자녀수	1명	33.1	29.4	39.6
	2명	57.8	62.4	49.8
	3명 이상	9.1	8.2	10.6
	평균(명)	1.8	1.8	1.7
가구원수	3명 이하	14.0	10.3	20.7
	4명	58.2	63.1	49.5
	5명	22.0	21.6	22.5
	6명 이상	5.8	5.0	7.3
	평균(명)	4.2	4.2	4.2
가족구성	핵가족	84.6	85.7	82.7
	비핵가족	15.4	14.3	17.3
월평균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	12.4	7.7	20.7
	100만~200만원 미만	26.9	20.8	37.5
	200만~300만원 미만	26.6	27.4	25.1
	300만~500만원 미만	23.9	28.8	15.3
	500만원 이상	10.2	15.3	1.4
	평균(만원)	294.0	346.9	200.6
거주지역	서울	30.2	36.2	19.7
	경기	21.2	23.2	17.4
	광역시	26.8	22.1	35.1
	도	21.8	18.5	27.8

비슷한 수준으로, 다만 도지역과의 차이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녀단위 분석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만 이 이용자녀 비율이 이용하지 않는 자녀 비율보다 높으며, 광역시와 도지역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자녀 비율이 이용자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이용하는 자녀 비율은 서울→경기→광역시→도지역의 순이나,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광역시→도→서울→경기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8>에서는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133명을 제외한 3,256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상태에 따른 이용자집단과 비이용자집단을 비교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2.9세이고 이용자집단과 비이용자집단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용하는 집단에서는 어머니 연령이 30대에서, 이용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어머니의 평균 교육수준은 11.3년이고, 이용자녀 어머니의 평균 교육연수가 12.0년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녀 어머니의 평균 교육연수 10.1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녀 어머니는 대졸 이상의 비율이 15.2%인 데 반해 비이용자녀 어머니의 대졸 이상 비율은 4.3% 수준으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표 5-8> 어머니특성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단위: %)

		범주	전체	이용함	이용안함
전 체			100.0	63.8	36.2
			100.0	100.0	100.0
연령	만 30세 미만		0.2	0.2	0.5
	만 30~39세		13.5	14.6	11.5
	만 40세 이상		86.3	85.2	88.0
	평균(세)		42.9	43.0	42.8
학력	고졸 미만		31.1	21.7	49.5
	고졸		52.3	57.9	41.5
	전문대졸		5.0	5.2	4.7
	대졸 이상		11.6	15.2	4.3
	평균(년)		11.3	12.0	10.1
취업상태	취업		48.5	47.5	50.4
	미취업		51.5	52.5	49.6

대졸 이상 학력과는 달리 고졸 미만의 경우, 이용하지 않는 자녀 어머니가 49.5%이나 이용자녀 어머니의 비율은 21.7%로 27.8%p의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상태를 비교해 보면 가구분석에서와는 달리 이용자녀집단에서는 어머니가 미취업인 비율이 52.5%로 높고, 이용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취업한 어머니의 비율이 50.4%로 높게 나타났다.

<표 5-9>는 자녀연령별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를 제시한 것이다.

<표 5-9> 연령집단별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단위:%)

		이용함	이용 안함	전 체
미취학		57.1	42.9	100.0
	만 2세 미만	9.4	90.6	100.0
	만 2~4세	59.4	40.6	100.0
	만 5세	91.6	8.4	100.0
초등학생		89.0	11.0	100.0
	만 6~8세	90.7	9.3	100.0
	만 9~11세	87.4	12.6	100.0
중학생		81.8	18.2	100.0
	만 12세	83.8	16.2	100.0
	만 13세	81.9	18.1	100.0
	만 14세	79.9	20.1	100.0
고등학생		66.6	33.4	100.0
	만 15세	76.6	23.4	100.0
	만 16세	63.9	36.1	100.0
	만 17세	59.5	40.5	100.0
재수생		53.7	46.3	100.0

학령기를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집단을 ① 미취학(905명), ② 초등학생(1,178명), ③ 중학생(586명), ④ 고등학생(536명), ⑤ 재수생(184명)의 5집단으로 구분하고 연령집단 내에서 각 연령별 이용여부를 파악하였다. 우선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은 초등학생 집단

으로 89.0%가 이용하며, 재수생집단이 53.7%로 가장 낮은 이용비율을 보였다.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취학집단의 평균 이용비율은 57.1%이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용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2세 미만 영아의 이용비율은 9.4%에 불과하지만 만 2~4세 영유아의 경우는 59.4%로 급격히 증가하고, 다시 취학 전 만 5세의 이용비율은 91.6%에 달하였다. 이는 영유아기에 이용하는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 보육성격이 강하고, 만 5세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 및 보육시설은 학령기 시작을 준비하는 사교육 성격으로 이해한다면, 학령기 이전에 보육과 더불어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무상교육 및 보육은 시급히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생집단의 평균 이용비율은 89.0%이고, 만 6~8세 저학년의 이용비율(90.7%)이 만 9~11세인 고학년의 이용비율(8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취학 전인 5세에 정점에 달한 이용비율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고학년 시기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같은 추이는 중등학령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중학생이 81.8%, 고등학생 66.6%, 재수생 53.7%의 이용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비율이 중등학령기에 들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중학생집단의 각 연령별 이용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의 이용비율이 83.8%로 만 9~11세에 비해 3.6%p 감소하였고, 만 13세 81.9%, 만 14세가 79.9%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집단의 이용비율은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5세의 이용비율이 76.6%로,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에 비해 3.3%p 낮다.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6세의 이용비율은 63.9%로, 만 15세의 이용비율에 비해 12.7%p 낮은 것으로 밝혀져, 중등학령기 이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이용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7세의 이용비율은 59.5%로 만 16세에 비해 4.4%p 낮다. 재수생의 이용비율은 학령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제 2 절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비용

### 1. 가구의 총 지출비용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구의 지출비용은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1,999가구와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 1,318가구의 월평균 총 지출비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5-10>과 <표 5-11>은 가구의 총 지출비용을 가구와 어머니특성 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가구특성에 따른 가구의 총 지출비용을 제시한 <표 5-10>을 살펴보면,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1,999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28만 9천원이다. 그러나 이들 가구 중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없는 681가구를 제외하고, 이용하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1,318가구의 지출금액은 40만 6천원으로 가계가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비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특성별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재수생 이하 자녀수로 구분해 볼 때, 전체 분석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재수생 이하 자녀수가 2명인 가구의 지출금액이 33만 9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경우에는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지출금액이 47만 3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가구만을 분석한 결과의 이러한 차이는 가구원수를 구분하여 지출금액을 살펴본 결과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4명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지출금액이 31만 7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이용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5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가 45만 7천원의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교육 및 보육과 관련한 가계의 지출비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와 이용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얻게 되므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과

소 또는 과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자의 주의를 요하며, 관련주제 분석에 있어서 전체대상 가구를 분석한 결과와 구분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5-10〉 가구특성에 따른 가계의 지출비용

(단위: 만원)

	범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	이용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
재수생 이하 자녀수	1명	20.3	31.2
	2명	33.9	44.5
	3명 이상	28.6	47.3
가구원수	3명 이하	20.2	32.4
	4명	31.7	42.3
	5명	31.4	45.7
	6명 이상	23.6	34.7
가족구성	핵가족	29.0	41.2
	비핵가족	28.1	36.9
월평균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	14.1	29.4
	100만~200만원 미만	18.7	31.4
	200만~300만원 미만	25.9	35.6
	300만~500만원 미만	38.6	45.3
	500만원 이상	59.6	68.9
거주지역	서울	38.2	51.0
	경기	31.5	43.2
	광역시	25.8	35.9
	도	20.7	31.8
전 체		28.9	40.6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지출비용의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분석의 결과와 이용가구 분석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지출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된 소득범주별로 나누어 보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전체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14만 1천원이고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59만 6천원으로, 100만원 미만 소득을 갖는 가구의 지출금액의

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차이는 이용가구에서는 다소 줄어들는데,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이용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29만 4천원이고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경우는 68만 9천원으로, 100만원 미만 소득을 갖는 가구보다 지출금액이 2.3배 많다. 결국 소득수준에 따른 지출금액의 차이는 이용가구만을 분석했을 경우가 적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절대 금액에 있어서는 이용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이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전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과 그에 따른 지출비용의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별 가구의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의 월평균 지출금액이 각각 38만 2천원(이용가구: 51만원)과 31만 5천원(이용가구: 43만 2천원)으로 평균 28만 9천원(이용가구: 40만 6천원)을 상회하나, 광역시와 도지역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금액을 지출하였다. 또한 가장 낮은 수준의 금액을 지출하는 도지역과 서울지역의 차이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17만5천원,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19만 2천원으로 지역에 따라 지출금액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특성에 따른 가구의 총 지출비용을 제시한 <표 5-11>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96가구를 제외한 1,903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28만 9천원으로 전체 1,999가구를 분석한 것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1,903가구 중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출금액은 41만원으로 전체 대상가구를 분석한 경우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특성별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지출하는 금액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중·고등학교입학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어머니가 고졸 미만 학력인 경우는 전체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17만 6천원이고 이용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31만 2천원인 반면,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는 전체 가구의 지출금액은 42만 4천원, 이용가구의 지출금액은 55만 7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5-11〉 어머니특성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비용

(단위: 만원)

	범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	이용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
연령	만 30세 미만	8.7	25.6
	만 30~39세	27.5	37.0
	만40세 이상	34.9	47.8
교육수준	고졸 미만	17.6	31.2
	고졸	28.1	38.3
	전문대졸	28.4	41.7
	대졸 이상	42.4	55.7
취업상태	취업	29.9	39.6
	미취업	28.2	42.1
	전 체	28.9	41.0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 고졸 미만과 고졸 사이 10.5%p, 전문대졸과 대졸 사이 14.0%p의 차이가 있고, 고졸과 전문대졸 사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졸 미만과 고졸 사이의 차이가 7.1%p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의 차이보다 낮은 수준이며, 고졸과 전문대졸 사이에는 3.4%p 차이가 있어 비슷한 수준이었던 전체 가구의 분석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 사이는 전체 가구의 분석결과와 같은 14.0%p의 동일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뿐만 아니라 지출비용에서도 어머니의 학력이 영향을 미침을 짐작케 한다.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른 지출비용을 비교해 보면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의 지출금액과 취업하지 않은 가구의 지출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전체 가구의 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그리고 이용가구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에 지출금액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12〉는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1,318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가 월평균 지출하는 금액수준을 가구내 채수생 이하



자녀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그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분석가구의 지출비용 범주의 분포를 살펴보면, 64.1%가 월평균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고 17.4%의 가구가 20만~30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출하여 대부분의 가구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자녀수별로 가구를 나누어 살펴보면, 한 자녀 가구 42.5%, 두 자녀 가구 73.3%, 세 자녀 이상 가구 76.9%가 월평균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출금액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3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에 한 자녀 가구와 두 자녀 가구의 차이가 30.8%p 에 달하는 본 분석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의 문제가 생애 장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자녀보육이나 사교육비에서도 기인한다는 저출산 원인의 진단에 대한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표 5-12〉 자녀수별 가구의 지출금액 분포

(단위: %, 만원)

	전체	한 자녀 가구	두 자녀 가구	세 자녀 이상 가구
10만원 미만	4.3	10.1	1.8	0.5
10만~20만원 미만	14.2	23.3	10.4	8.3
20만~30만원 미만	17.4	24.1	14.5	14.3
30만원 이상	64.1	42.5	73.3	76.9
전체	100.0	100.0	100.0	100.0

〈표 5-13〉은 가구소득 대비 가구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비 지출 비율의 분포이다. 분석가구의 가구총소득 대비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비의 비율은 전체 평균 17.1%이고, 분석가구의 28.5%가 가구총소득의 20% 이상을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수에 따라 구분된 가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 자녀 가구는 가구소득의 평균 13.8%를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비로 지출하고, 34.6%가 가구소득의 5~10% 미만을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 가구는 가구소득의 평

균 18.3%를 지출하고, 이들 가구의 32.1%가 월평균 소득의 20% 이상을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비로 지출하며, 세 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는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가구소득의 평균 21.7%를 차지하고, 42.2%가 월평균 가구소득의 20%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3〉 가구총소득 대비 시설이용비 지출비율 분포

(단위:%)

	전체	한 자녀 가구	두 자녀 가구	세 자녀 이상 가구
5% 미만	10.4	17.2	7.7	4.4
5~10% 미만	22.9	34.6	18.0	14.7
10~15% 미만	22.8	19.5	24.8	19.5
15~20% 미만	15.4	10.5	17.4	19.2
20% 이상	28.5	18.2	32.1	4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평균지출비율(%)	17.1	13.8	18.3	21.7

〈표 5-14〉는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로 가구총소득 대비 지출비율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소득수준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월평균 500만원 이상 가구의 66.6%가 가구총소득의 10% 미만을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비로 지출하는 반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는 가구총소득의 20%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이 77.9%로 높게 나타나, 저소득 가계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비의 부담이 기형적일 만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계의 지출금액이 가구총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져,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경우는 7.0%만이 가구소득의 20%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하여 정부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 5세 이하 어린 자녀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또는 무상보육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계의 보육비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5-14〉 가구 총소득수준별 소득 대비 지출비용의 비율 분포

(단위: %)

지출비용 월평균가구소득	전체	5% 미만	5~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 이상
100만원 미만	100.0	2.7	3.3	6.0	10.1	77.9
100만~200만원 미만	100.0	2.9	12.9	19.2	18.3	46.7
200만~300만원 미만	100.0	8.2	20.6	27.3	19.2	24.7
300만~500만원 미만	100.0	12.1	33.9	27.2	11.9	14.9
500만원 이상	100.0	33.0	33.0	16.4	10.6	7.0
전체	100.0	10.4	22.9	22.8	15.4	28.5

## 2. 연령별 자녀1인당 지출비용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재수생 이하 자녀의 1인당 지출비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2,371명을 4개의 연령집단(① 미취학,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및 재수생)으로 나누고, 각 연령집단별 가구 및 어머니 특성에 따라 자녀1인당 지출하는 평균 비용을 <표 5-16>과 <표 5-17>에 제시하였다.

<표 5-16>에 제시된 연령집단별 가구특성에 따른 1인당 지출비용을 비교해 보면, 재수생 이하 자녀수로 구분해 보았을 때 가구단위에서의 가구 총 지출비용분석과는 달리 모든 연령집단에서 자녀수가 1명일 때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평균 지출금액은 고등학생 및 재수생 집단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구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금액이 많아지는 추이가 모든 연령집단에서 공통적이며, 월평균 300만~500만원 소득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 지출금액과 월평균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자녀 1인당 지출금액 사이의 차이가 다른 소득범주에 비해 큰 것도 모든 연령집단에서 일치하는 결과이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가구의 총 지출금액의 분석에서와 같이 서울지역의 지출금액이 모든 연령집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연령집단별 가구특성에 따른 자녀1인당 지출비용

(단위: 만원)

	범주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재수생
재수생 이하 자녀수	1명	23.6	24.8	26.4	46.2
	2명	18.5	22.1	26.3	38.1
	3명	14.4	16.5	23.5	32.9
월평균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	18.5	11.4	18.3	33.1
	100만~200만원 미만	15.8	16.4	18.9	29.6
	200만~300만원 미만	19.2	19.7	23.6	33.1
	300만~500만원 미만	21.9	25.7	27.5	43.1
	500만원 이상	24.5	34.8	43.7	63.3
거주지역	서울	24.4	24.9	32.4	50.8
	경기	19.4	23.2	27.1	42.3
	광역시	16.9	20.6	22.2	30.9
	도	17.2	18.2	21.3	26.9
	전 체	19.1	21.4	25.8	40.1

〈표 15-17〉은 연령집단별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자녀 1인당 지출비용을 제시한 것이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지출금액의 수준을 살펴보면, 미취학자녀집단은 어머니의 연령이 30대인 경우의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이 19만 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이후 학령기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에 지출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는 어머니가 30대인 경우 자녀가 영유아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고,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학령기일 가능성이 높은 데 기인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자녀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 및 재수생집단의 어머니가 대졸 이상 학력인 경우에는 월평균 자녀 1인당 75만 1천원을 지출하여 대졸 미만 학력수준의 지출금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미취학보다는 학령기에, 그리고 학령기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 1인당 지출비용의 차이에 있어 어머니가 대졸 이상 고학력과 고졸 미만 저학력의 지출금액 차이의 폭이 점차 커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취학자녀집단에서의 대졸 이상과 고졸 미만의 차이

는 7만 3천원인데, 초등학생집단에서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15만 3천원의 차이가 나고, 초등학생집단과 중학생집단의 차이는 2만 3천원이 증가한 17만 6천원, 중학생집단과 고등학생 및 재수생집단의 차이는 2.7배 가량이 증가한 47만 6천원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자녀 1인당 사교육 및 지출비용에 있어서 어머니 학력의 영향은 학령기 이후의 자녀, 그리고 학령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7〉 연령집단별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자녀1인당 지출금액

(단위: 만원)

	범주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재수생
연령	만 30세 미만	17.8	19.9	-	-
	만 30~39세	19.7	21.5	24.2	30.7
	만 40세 이상	17.2	22.3	27.1	41.6
교육수준	고졸 미만	16.5	14.1	18.8	27.5
	고졸	16.7	19.4	24.3	35.7
	전문대졸	21.9	25.1	32.6	40.2
	대졸 이상	23.8	29.4	36.4	75.1
취업상태	취업	22.4	21.0	23.6	34.8
	미취업	17.6	22.0	27.9	44.7
전 체		19.2	21.6	25.9	40.1

한편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른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미취학연령집단에서만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자녀 1인당 지출금액이 많고, 초등학교 이후 연령집단에서는 모두 미취업인 경우에 지출금액이 많았다. 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의 경우는 장시간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취업 여성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이후 학령기 자녀들은 보육시설의 이용이 아닌 사교육 이용에 따른 지출비용이므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보다는 전업주부인 경우에 자녀들이 더 많은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5-18〉 연령별 자녀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

(단위: 만원)

		전체 1인당 월평균 지출금액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지출금액
미취학		10.9	19.1
	만 2세 미만	3.1	33.4
	만 2세~4세	10.7	18.0
	만 5세	17.9	19.6
초등학생		19.1	21.4
	만 6세~8세	19.4	21.4
	만 9세~11세	18.8	21.5
중학생		21.1	25.8
	만 12세	20.0	23.8
	만 13세	23.9	29.2
	만 14세	19.6	24.5
고등학생		23.8	35.8
	만 15세	22.7	29.7
	만 16세	23.9	37.4
	만 17세	25.0	42.0
재수생		27.8	51.8

〈표 5-18〉은 자녀연령별 지출비용을 전체 1인당 월평균 지출금액과 이용하는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자녀 1인당 지출금액으로 나타낸 것이다.

미취학연령집단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만 5세 자녀의 1인당 지출금액이 월평균 17만 9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용하는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만 2세 미만 자녀의 지출비용이 33만 4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만 2세 미만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률은 매우 낮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 영아의 경우는 어머니가 취업모일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집, 놀이방, 직장탁아시설 등과 같은 시설에서 장시간 보육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수준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결과이다. 초등학생집단에서는 만 6~8세의 저학년집단의 1인당 지출비용이 고학년집단에 비해 다소 높고, 중학생집단에서는 만 13세 연령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집단에서는 학

년이 높아질수록 지출금액이 많아지는 추이를 보이는데,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그 추이가 보다 뚜렷하게 보인다. 예컨대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5세 자녀의 월평균 지출비용은 29만 7천원, 만 16세 37만 4천원, 만 17세 42만원으로 점차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수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7세 자녀의 1인당 지출비용을 상회하는 평균 51만 8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지출비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

가계가 지출하는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비에 대해 가계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정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기 위하여 소득수준별, 지출금액수준별, 소득 대비 지출비율별,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5점 척도로 측정된 가계의 부담정도를 분석하였다.

<표 5-19>는 소득수준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에 대한 분포이다.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1,999가구의 74.9%가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비의 지출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담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부담의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 이상이고,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는 그 비율이 29.2%에 달하였다.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84.6%가 부담된다고 하였으며, 월평균 100만~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는 40.9%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하여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가계가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비 지출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표 5-20>은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비로 지출하는 금액수준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월평균 지출금액 1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출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정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10만~20만

원 미만과 20만~30만원 미만의 지출범주에서는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이 각각 43.1%와 42.6%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3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평균 3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는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이 13.9%로 3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들의 응답비율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은 38.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19〉 소득수준별 지출비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

	전 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 안됨	보통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100만원 미만	100.0	1.4	2.6	11.4	44.6	40.0
100~200만원 미만	100.0	0.5	2.4	17.3	38.9	40.9
200~300만원 미만	100.0	0.5	4.3	17.2	44.6	33.4
300~500만원 미만	100.0	0.5	4.5	24.7	49.0	21.3
500만원 이상	100.0	0.9	8.3	29.2	40.0	21.6
전 체	100.0	0.6	4.2	20.3	44.0	30.9

〈표 5-20〉 지출금액 수준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

	전 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 안됨	보통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10만원 미만	100.0	10.1	21.4	31.6	28.5	8.4
10~20만원 미만	100.0	0.6	6.3	32.9	43.1	17.1
20~30만원 미만	100.0	-	6.4	30.9	42.6	20.1
30만원 이상	100.0	0.2	2.0	13.9	45.6	38.3
전 체	100.0	0.6	4.2	20.3	44.0	30.9

소득 대비 지출비율별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표 5-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구총소득의 5%를 기준으로 5% 미만에서는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비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5.8%로 나타났으나, 5% 이상에서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전무하였다. 가계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가구총소



득의 5% 미만을 지출할 때 25.6%의 가구만이 체감할 뿐이다. 지출비용이 가구소득의 5~10%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3.2%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비율이 44.7%로 11.8%p 증가하며,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비율은 17.8%로 가구소득의 5%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의 2.8배나 증가하여 지출비용이 가구총소득의 5%가 넘을 때 절반 이상의 가계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소득 대비 지출비용이 10~15% 미만에서는 부담의 정도가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은 20.6%로 13.7%p 감소하고,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9.7%p 증가하여 54.4%의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가구소득의 15%~20%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의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비율이 41.2%로, 이는 10~15%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에 비해 1.9배 가량 높은 응답비율이다. 이 비율은 2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범주에서 다시 1.2배 증가함을 보여 가구소득의 20% 이상을 사교육 및 보육시설비로 지출하는 가구의 51.8%가 지출금액에 대해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소득 대비 지출비용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

	전 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 안됨	보통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5% 미만	100.0	5.8	19.8	35.2	32.9	6.3
5~10% 미만	100.0	-	3.2	34.3	44.7	17.8
10~15% 미만	100.0	-	3.7	20.6	54.4	21.3
15~20% 미만	100.0	-	2.5	13.0	43.3	41.2
20% 이상	100.0	-	0.9	7.9	39.4	51.8
전 체	100.0	0.6	4.2	20.3	44.0	30.9

〈표 5-22〉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가계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75.5%)나 미취업상태인 가구(74.8%)가 모두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비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머니가 미취업상태인 가구(5.9%)가 취업한 가구(3.4%)에 비해 '부담 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의 경우가 지출금액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 는 응답비율이 32.0%로 29.9%인 미취업가구에 비해 다소 높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표 5-2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

	전 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안됨	보통	조금부담	매우 부담됨
취업	100.0	0.7	2.7	21.1	43.5	32.0
미취업	100.0	0.5	5.4	19.3	44.9	29.9
전 체	100.0	0.6	4.2	20.3	44.0	30.9

## 제 6 장

##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부터 매년 잠재적 생산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고용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조사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03년도 제6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개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의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루어졌으며, 연도간 비교 분석시에는 종단면 가중치를, 2003년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에 사용된 각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는 <표 6-1>에 제시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개인 응답자를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특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표 6-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1998~2003년)

(단위: 명)

		전 체	개인자료	신규자료
1차년도		13,321	13,321	-
2차년도		11,710	11,236	474
3차년도		10,798	10,495	303
4차년도		10,499	10,268	231
5차년도		10,295	10,065	230
6차년도	종단 분석	10,657	10,381	276
	횡단 분석	11,503	10,955	548

제2절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별 및 직업별 분포, 취업 중 구직활동을,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의 구직의사, 구직활동 여부,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제 1 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 1. 경제활동상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는 크게 만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인 경제활동인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인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한다. 이때 취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즉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그리고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sup>30)</sup>.

<표 6-2>는 조사 연도별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취업자는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취업자)”,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은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1998년 조사 당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48.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2002년에 53.9%까지 증가하였다가 2003년에는 소폭 하락한 53.6%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실업자<sup>31)</sup>의 비중은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

30) 노동패널조사는 조사기간이 4~5개월에 이르기 때문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시하는 구분법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는 노동패널조사의 신뢰도를 가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해당 항목을 비교하였다.

31) 현재 공식통계에서 사용되는 실업자의 정의는 크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기준과 OECD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ILO 기준은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한 데 반해, OECD 기준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

락하였으나 2003년에는 전년 대비 0.5%p가 증가한 2.5%를 기록하였다.

〈표 6-2〉 경제활동상태 비교(1998~2003년)

(단위: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998	48.3 (48.3)	7.6 ( 9.4)	44.1 (42.3)
1999	52.0 (52.0)	3.8 ( 4.5)	44.3 (43.5)
2000	51.4 (51.4)	2.4 ( 2.9)	46.2 (45.7)
2001	52.4 (52.4)	2.1 ( 2.6)	45.5 (45.0)
2002	53.9 (53.9)	2.0 ( 2.3)	44.1 (43.8)
2003	53.6 (53.6)	2.5 ( 2.8)	44.0 (43.6)

주: 실업자의 정의는 ILO 기준임. ( )안은 OECD 기준 실업자 정의.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을 정점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1997년 IMF 외환위기 발생 이후 2002년까지는 취업자의 증가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2003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기회복 추세가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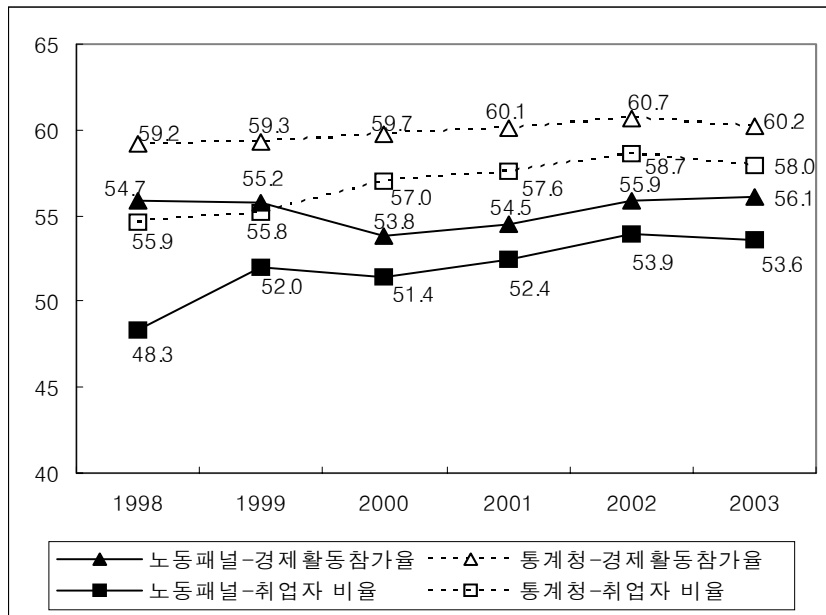
[그림 6-1]과 [그림 6-2]는 지난 6년간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인구비율)과 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과 전반적으로 비교해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은 약 3~4%p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실업률은 1차년도를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의 경우 경활조사와 비교할 때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4.5%p이나 취업인구비율의 격차는 6%p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그림 6-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차년도 실업률에서 경활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격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노동패널의 1차년도 경제활동상태 중에서 실업률은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1차년도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야 할 응답자 중에서 일부가 실업자로 보고한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두 자료

식통계에서 전자를 실업자의 정의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후자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두 지표 모두 이용가능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ILO 기준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차이를 염두에 둘 때 제한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6-1)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 비교(1998~200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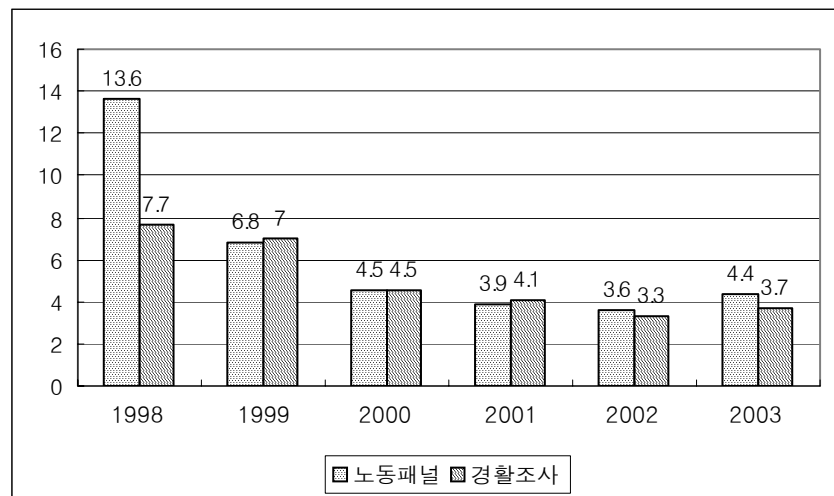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임.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취업인구비율=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두 자료는 가구 조사라는 공통점과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용이하나 경황조사는 매월 진행되는 조사인 데 비해서 노동패널조사는 1년 중 4~5개월간 진행되는 조사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곧, 노동패널은 응답자마다 답변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간 변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률같이 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의 경우 두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더욱이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표본크기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 수와 같이 표본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는 지표들은 해석상의 주의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년도 조사 이후에는 경제

활동참가율과 취업인구비율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실업률의 경우에도 2003년에 다시 약간의 격차가 증가하긴 하였지만 역시 이러한 조사상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일관성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2) 각 연도별 실업률 비교(1998~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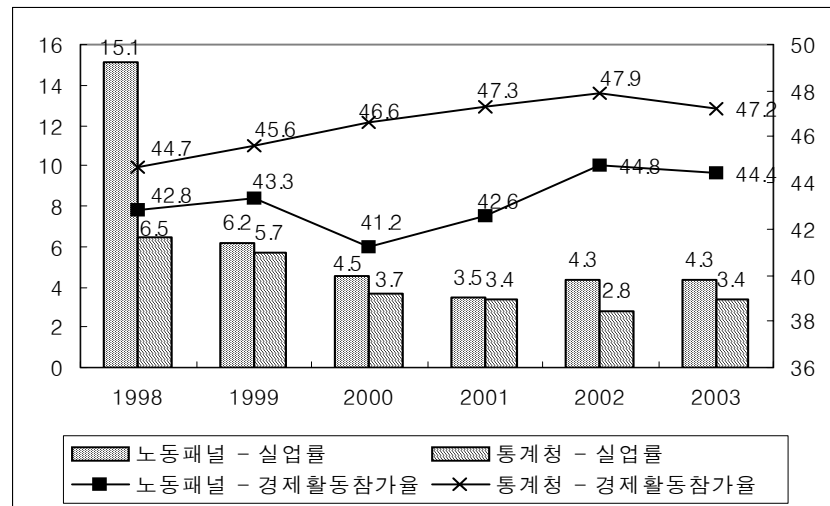
(단위: %)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임.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그림 6-3]은 노동패널의 각 조사 연도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평균에 비해 10%p 이상 낮으나,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까지 증가하다가 2003년에 소폭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업률의 경우에는 경활조사와의 격차가 약 1%p 내외로 전체평균보다는 약간 더 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각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에는 실업률이 15.1%까지 치솟았으나 1999년부터는 경활조사에서 보고되는 수치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실업률 역시 2002년과 2003년에는 2001년에 비해 약 1%p 증가한 4.3%로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6-3] 각 연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비교(1998~2003년)  
(단위: %)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총조사』, 비농가부문임.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다음으로 <표 6-3>은 만 15세에서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앞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격차와 비교해 볼 때, 전체평균 대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15~29세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8년 39.9%를 기록한 이래 2000년까지는 소폭 감소하였다가 이후 반등하여 2003년에는 41.3%까지 증가하였다. 이를 다시 5세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3년 15~1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8년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5.9%를 기록하였으며, 20대 초반 역시 약 5%p 가량 하락하였다. 이에 반해 20대 후반의 연령층은 1998년의 63%에서 약 5%p가 증가한 67.6%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체 청년층인 15~29세의 경우 2001년까지 실업률이 7.9%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3년에는 9.8%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15~19세 연령층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10% 전후를 보이고 있으므로 실업률 수치가 연도별로 큰 변동폭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0대 초반



의 실업률은 2000년에 8.7%까지 감소하였으나 2003년에는 두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대 후반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에는 8.6%까지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데 비해 실업률은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전반적인 비율 자체만을 놓고 볼 때 20세 미만의 경우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이고, 20대 초반 역시 최근 고학력화 현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들어서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최근의 청년층 실업문제가 노동패널조사에서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3〉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1998~2003년)

(단위: %)

	전체(15~29세)	15~19세	20~24세	25~29세
1998	39.9 (22.7)	10.9 (51.0)	49.0 (25.8)	63.0 (15.6)
1999	39.1 (12.0)	11.0 (20.1)	49.1 (15.7)	61.3 ( 7.9)
2000	37.2 ( 8.1)	8.9 (10.0)	43.9 ( 8.7)	61.2 ( 7.5)
2001	38.7 ( 7.9)	8.5 (14.6)	45.7 ( 9.9)	61.6 ( 5.6)
2002	40.2 ( 8.4)	8.1 (19.4)	46.1 ( 8.8)	64.8 ( 6.9)
2003	41.3 ( 9.8)	5.9 (20.8)	44.5 (10.3)	67.6 ( 8.6)

주: ( )안은 실업률.

〈표 6-4〉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1998~2003년)

(단위: %)

	전체(50~64세)	50~54세	55~59세	60~64세
1998	58.7 (13.3)	68.3 (13.9)	59.7 (12.7)	43.7 (12.8)
1999	58.2 ( 5.7)	68.5 ( 4.7)	60.3 ( 6.3)	42.3 ( 7.0)
2000	56.0 ( 3.1)	67.5 ( 2.7)	55.1 ( 3.9)	42.5 ( 2.8)
2001	56.9 ( 2.6)	69.6 ( 1.9)	54.7 ( 4.2)	42.5 ( 2.2)
2002	60.3 ( 1.9)	73.1 ( 1.3)	59.3 ( 3.0)	44.7 ( 1.7)
2003	59.4 ( 1.8)	69.6 ( 1.8)	60.6 ( 2.2)	44.8 ( 1.3)

주: ( )안은 실업률.

다음으로 <표 6-4>는 50~64세 연령층에 해당하는 중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들 연령층은

지난 6년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에 있어서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변화의 정도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중고령자의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보면, 1998년에 58.7%를 나타낸 이후 약간의 증감을 거친 후 2003년에는 59.4%로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 실업률의 경우에는 1998년 13.3%를 나타내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1.8%까지 감소하였다. 중고령자들의 연령구간을 5세마다 나누어 살펴보면, 2003년 5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6%인 데 반해, 50대 후반은 60.6%, 60대 초반은 44.8%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이들 연령층이 노동시장에서 은퇴로 이행하는 과정임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표 6-5>는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의 연도별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고졸과 전문대졸 사이에 문턱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고졸 미만의 2003년 경제활동참가율은 1998년보다 약 3%p가 감소한 40.8%로 나타나고 있는데, 4년제대졸의 경우 2003년에 고졸 미만보다 약 32%p가 높은 73%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실업률의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고졸, 4년제대졸,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력별 경제활동상태의 차이 내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 특히 연령효과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심스런 해석이 따라야 할 것이다.

<표 6-5>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1998~2003년)

(단위: %)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
1998	44.0 (15.0)	79.0 (12.4)	84.3 (12.1)	82.0 ( 7.8)	79.0 ( 7.2)
1999	44.1 ( 6.2)	66.7 ( 7.5)	72.2 ( 6.5)	73.6 ( 4.4)	76.6 ( 3.5)
2000	42.1 ( 3.4)	63.7 ( 3.8)	74.3 ( 7.4)	72.6 ( 4.6)	72.0 ( 4.7)
2001	42.8 ( 3.0)	64.6 ( 4.0)	72.2 ( 5.5)	73.5 ( 3.1)	71.9 ( 1.0)
2002	42.9 ( 2.0)	66.8 ( 3.6)	73.6 ( 6.1)	74.7 ( 3.9)	71.6 ( 2.8)
2003	40.8 ( 3.2)	67.0 ( 4.8)	74.9 ( 4.3)	73.0 ( 4.2)	73.5 ( 2.6)

주: ( )안은 실업률임. 전문대졸과 4년제대졸은 졸업, 혹은 수료한 경우이며, 재학, 휴학, 중퇴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대학원은 졸업, 수료, 재학, 중퇴 등을 모두 포함한 값임.

지금부터 2003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6-6>은 인구학적 특성별로 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 경제활동참가상태를 비교해 보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구성비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의 [그림 6-3]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 약 10%p 가량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차이 자체가 경제활동인구의 구성에 차이를 낳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20~29세 연령층에서 86.1%로 정점을 이루다가 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라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실업자는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근로자에서 고용주나 자영업자 같은 비임금근로자로의 경력이동이 나타나는 생애경력 구조상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표 6-6>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특성(2003년)

(단위:%)

	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전체
남 성	65.1	30.8	4.1	100.0
여 성	65.6	30.4	4.0	100.0
15~19세	79.1	1.8	19.2	100.0
20~29세	86.1	5.0	8.9	100.0
30~39세	73.2	22.9	3.9	100.0
40~49세	59.1	38.2	2.8	100.0
50~59세	53.2	44.9	1.9	100.0
60세 이상	39.5	59.5	1.0	100.0
무학	44.8	53.9	1.3	100.0
고졸 미만	52.9	44.0	3.1	100.0
고졸	63.7	31.9	4.4	100.0
대재 및 중퇴	75.0	15.5	9.5	100.0
전문대졸	77.5	17.9	4.7	100.0
대졸 이상	76.5	20.0	3.5	100.0

〈표 6-7〉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인구의 비율

(단위: %)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인구비율		
	전체	남성	여성
1998	28.1	44.4	19.5
1999	30.7	48.2	21.5
2000	30.3	47.1	21.0
2001	29.5	44.4	21.1
2002	29.9	44.4	21.5
2003	29.7	43.9	21.4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실업자의 비중은 대학재학 및 중퇴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앞의 <표 6-5>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교육수준별로 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이 차이가 나는 데에는 연령에 따른 효과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고졸 미만이나 무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이 많이 분포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효과가 교육수준에 따른 구성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인구의 비율을 남녀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6-7>과 같다. 우선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학생인구의 비중은 2003년 29.7%로 이전 연도와 비교할 때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학생인구의 비중이 43.9%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2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남성의 경우 학업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차후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비학생인구가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학업보다는 가사나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혹은 취업의사는 있지만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구직을 포기한 사례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 제 2 절 취업자의 특성

### 1. 산업·직업·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자의 분포

<표 6-8>과 <표 6-9>는 산업별로 노동패널조사와 경활조사의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동패널조사에서도 경활조사와 마찬가지로 1,2차 산업 비중의 감소와 더불어 3차 서비스 산업 비중의 증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조사 설계 당시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1차년도 당시 이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경활조사보다 약 4%p 정도 낮았지만, 이후 조사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활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6년간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노동패널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03년)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	8.3	22.9	68.8
1999	8.7	22.5	68.8
2000	8.4	22.6	69.0
2001	7.7	21.2	71.1
2002	6.5	21.2	72.3
2003	6.3	20.8	72.9

주: 2002년에 개정된 제7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1차산업: 농업 및 임업, 어업을 포함.

2차산업: 광업 및 제조업.

3차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을 포함.

〈표 6-9〉 경활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03년)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	12.0	19.7	68.2
1999	11.3	19.9	68.7
2000	10.6	20.4	69.0
2001	10.0	19.9	70.2
2002	9.3	19.2	71.5
2003	8.8	19.1	72.1

주: 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6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제7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준함.

광공업의 경우에도 농림어업과 마찬가지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다만 노동패널조사에서는 1998년 22.9%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3년에는 20.8%의 수치를 기록한 데 반해, 경활조사에서는 2000년까지 광공업 종사자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여 20.4%를 기록하였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서 2003년에는 19.1%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은 두 조사 모두 지난 6년간 그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부문 종사자들의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두 조사 사이에 1%p 이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놓고 볼 때 취업자의 산업별 종사자 구성 측면에서 노동패널조사는 매우 높은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농림어업과 광공업 종사자의 비중이 경활조사와 많게는 3~4%p의 격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표집대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두 조사간에는 거의 동일한 산업별 구성을 보여 주었다.

〈표 6-10〉은 노동패널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6년간의 직업별 종사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의 증가 대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의 감소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전문관리직은 1998년 당시 21.5%를 차지하였으나, 이 비중이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3년에는 3.4%p가 증가한 24.9%로 나타났다.

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쪽으로 증가했는데, 1999년 10.7%에서 2003년에는 12.8%까지 증가하였다. 반대로 서비스판매직은 1998년 24.8%에서 감소추세를 보여 2003년에는 22.2%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농림어업직(1998년 8.8% → 2003년 6.2%)과 생산직(1999년 35.6% → 2003년 33.9%)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표 6-10〉 노동패널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03년)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	21.5	11.2	24.8	8.8	33.7
1999	20.7	10.7	24.5	8.5	35.6
2000	21.5	10.9	23.5	8.3	35.9
2001	21.9	12.2	23.8	7.5	34.6
2002	23.2	12.4	23.4	6.4	34.6
2003	24.9	12.8	22.2	6.2	33.9

주: 1) 전문관리직에는 임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을 포함. 서비스판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를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등을 포함.

2) 통계청의 직업분류 변경을 반영하여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모든 수치를 2002년에 개정된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조정함.

한편 직업별 분포에서도 노동패널조사와 경찰조사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11>에 제시된 경찰조사의 직업별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두 조사간에 적게는 0.2%p(생산직)에서 많게는 약 5%p 정도의 격차가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추이면에서는 두 조사간에 약간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전문관리직의 경우 경찰조사에서는 뚜렷한 증가추세가 관찰되지 않으나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전문관리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상대적인 구성면에서는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가 생산직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경찰조사의 경우 전문관리직보다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2003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자의 산업별·직업별 및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자.

〈표 6-11〉 경황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1998~2003년)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	18.8	12.4	23.6	11.5	33.7
1999	19.1	11.3	23.7	10.7	35.1
2000	18.9	11.6	23.8	10.0	35.7
2001	20.9	12.1	25.6	9.2	32.2
2002	21.3	12.4	25.5	8.6	32.2
2003	20.1	14.3	25.2	8.3	32.2

주: 직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준함. 단, 연도별 비교를 위해 제4차 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 중에서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제시함.

〈표 6-12〉 산업별 및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산 업	농 립 어 업	0.8	16.6
	광 공 업	25.0	12.0
	건 설 업	10.5	5.8
	전기·가스·수도사업	7.0	7.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7.5	36.4
	금융 및 부동산업	6.4	4.7
	공공서비스업	32.9	16.9
직 업	전 문 관 리 직	28.0	17.8
	사 무 직	16.5	2.0
	서 비 스 판 매 직	15.0	38.2
	농 어 업 직	0.7	16.5
	생 산 직	39.8	25.5

주: 농림어업에는 농업, 수렵 및 임업, 어업 등을 포함.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을 포함. 금융 및 부동산업에는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을 포함. 공공서비스업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등을 포함. 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2002년에 개정된 제7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준함.



〈표 6-13〉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2003년)

(단위: %)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융, 부동산업	공공 서비스업
성 별	남 성	6.2	23.0	13.6	9.7	18.5	5.2	23.9
	여 성	7.6	18.9	1.5	2.4	33.5	6.6	32.5
연 령	15~29세	0.4	22.9	0.0	1.7	36.0	9.8	29.5
	30~39세	1.1	20.9	4.4	5.3	25.2	15.2	27.9
	40~49세	4.5	25.8	9.1	6.2	26.8	12.8	18.1
	50~59세	11.2	24.6	10.0	7.8	28.3	8.7	16.3
	60세이상	34.4	16.2	11.6	7.1	24.5	9.7	18.2
교 육 수 준	고졸미만	18.7	20.6	11.2	5.1	25.6	1.6	17.3
	고 졸	3.4	25.2	10.2	8.1	27.2	6.1	19.8
	대재중퇴	1.8	18.9	6.3	6.8	23.5	6.9	35.8
	전문대졸	1.1	18.2	5.6	7.4	23.5	8.3	35.9
	대졸이상	0.3	15.5	4.9	6.7	16.2	9.2	47.2

먼저 산업별 및 직업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6-12>와 같다.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종사자 구성은 공공서비스업 종사자가 3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광공업 25.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임금근로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6.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광공업 종사자는 12.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생산직의 비중이 3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전문관리직 28.0%, 사무직이 16.5%, 서비스판매직이 15.0%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서비스판매직이 약 40%를 차지한 반면, 사무직은 2.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취업자의 직업별 및 산업별 분포는 고용형태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3>은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공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나, 그 비중은 여성(32.5%)이 남성(23.9%)보다 8.6%p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광공업(23.0%)에, 여성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3.5%)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

보았을 때, 농림어업에는 50대 이상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광공업에는 50대 이하의 모든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20%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15~29세 종사자가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 및 광공업, 건설업 등에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에, 금융, 부동산업과 공공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6-14>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별 분포(2003년)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성별	남성	25.0	10.0	16.1	6.1	42.7
	여성	22.2	15.9	32.2	7.2	22.6
연령	15~29세	34.9	26.3	18.6	0.4	19.7
	30~39세	31.3	15.0	21.7	1.2	30.9
	40~49세	19.7	8.8	25.6	4.1	41.9
	50~59세	16.6	5.2	25.4	11.1	41.7
	60세 이상	6.7	1.2	19.2	34.3	38.6
교육수준	고졸미만	2.6	1.9	25.6	18.6	51.2
	고졸	13.8	13.0	27.5	3.2	42.5
	대개및중퇴	26.9	20.4	25.2	1.8	25.8
	전문대졸	36.3	23.6	19.7	1.1	19.4
	대졸 이상	61.1	17.6	11.7	0.4	9.2

<표 6-14>는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판매직에서는 여성(32.2%)이 남성(16.1%)보다 2배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생산직의 경우에는 남성(42.7%)이 여성(22.6%)보다 약 2배 가까이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청년층에서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34.9%, 사무직이 2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약 40% 안팎이 생산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앞의 산업별 비중과 유사하게 농림어업직(34.3%)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문관리직의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겨우 2.6%에 불과하지만, 대졸 이상의 경우 이러한 비중이 61.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직의 분포를 보면, 고졸 미만의 경우 50%를 넘는 데 비해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10% 미만을 차지하였다.

### 제 3 절 미취업자의 특성

#### 1. 구직활동 및 취업 가능성, 비구직 이유

<표 6-15>는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각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성별과 상관없이 구직희망자의 비중이 1998년에서 2002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2003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998년 당시 지난주 구직을 했다는 응답 비중이 25.7%에서 2002년 5차 조사의 경우 7.8%로 17.9%p까지 감소하였으나, 2003년에는 다시 10.1%로 증가하였다.

<표 6-15> 성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1998~2003년)

(단위: %)

	남 성			여 성		
	지난주 구직함	지난주 아니지만 1개월 이내 구직함	지난 1개월 이내 구직 안함	지난주 구직함	지난주 아니지만 1개월 이내 구직함	지난 1개월 이내 구직 안함
1998	25.7	5.4	68.9	12.1	4.2	83.7
1999	13.7	2.6	83.7	5.2	1.4	93.4
2000	9.1	1.4	89.4	3.6	1.1	95.3
2001	8.9	1.2	90.0	3.3	1.4	95.3
2002	7.8	1.3	90.8	4.9	1.0	94.1
2003	10.1	2.1	87.8	4.8	1.1	94.1

여성의 경우에도 1998년에는 12.1%가 지난주에 구직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2000년에는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02년에 4.9%, 2003년에 4.8%로 다시 증가하였다. 한편, 구직자의 상대적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6〉 미취업자의 지난주 취업 가능성 여부(1998~2003년)

(단위: %)

	일할 수 있었다	일할 수 없었다
1988	82.3	17.7
1999	88.7	11.3
2000	86.9	13.1
2001	81.3	18.7
2002	70.3	29.7
2003	73.6	26.4

〈표 6-17〉 미취업자의 비구직 이유(2003년)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 여겨져서	8.9	13.4	6.4
임금/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15.2	22.6	11.1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1.1	0	1.8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	11.3	13.7	10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1.9	1.1	2.3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5	3.9	5.7
구직결과를 기다림	1.4	1.3	1.4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	9.6	0	14.8
가사일 때문에	5.7	0	8.8
건강상 이유로	10.5	13	9.2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15.0	12.7	16.3
기타	14.5	18.5	12.3
전체	100.0	100.0	100.0

<표 6-16>은 미취업자의 지난주 취업 가능성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미취업자의 취업 용이성 여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지난주 혹은 지난 1개월간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한 경우,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었다면 지난주에 일할 수 있었는지”를 질문 하였다. 조사 결과, ‘일할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미취업자의 비중은 1998년 17.7%에서 1999년 11.3%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 13.1%, 2001년에 18.7%, 2002년도에는 29.7%로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6차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26.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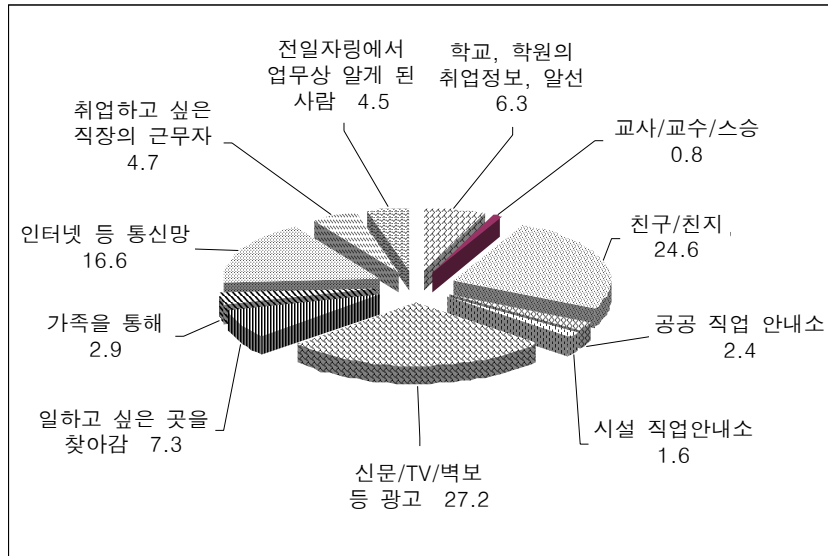
다음으로 <표 6-17>은 2003년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비구직 이유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라는 응답이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자리가 없어서 포기’했다는 응답 비중도 11.3%에 이르렀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남성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이유와 더불어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 여겨서 구직을 포기한 응답자의 비중이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경기적 요인이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들로 추정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일거리가 없었다는 응답 이외에 ‘어린아이를 돌보거나 가사일 때문에’, 그리고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구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남녀별로 상이한 내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객관적 상황에 민감한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사문제나 노동시장 차별 등의 이유에 더욱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구직방법 및 구직기간, 구직시 어려움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탐색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와 연관된다. 2003년 노동패널조사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사용한 구직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구직방법

중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중심으로 미취업자의 구직행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6-4] 미취업자의 구직 방법(2003년)



[그림 6-4]는 미취업자의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미취업자의 경우 비공식적인 방법인 신문 및 TV, 벽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27.2%로 가장 높고, 친구, 친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2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16.6%, 일하고 싶은 곳을 찾아감이 7.3%,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나 알선을 통한 경우가 6.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공 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비중은 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좀더 분석적으로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구분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공식적 구직방법, 비공식적 구직방법, 직접 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32)</sup>.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

32) 이 외에도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사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제도적 연결망을 이용

으로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신문·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 방법으로는 ‘가족, 친구, 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직접접촉’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이다.

[그림 6-5]에서 [그림 6-7]까지는 이러한 구분법에 따라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구직방법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관계없이 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어서 비공식적 방법, 직접접촉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공식적 방법을 이용하는 비중이 61.8%로 남성의 49.9%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비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비중이 10%p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접촉은 남녀 모두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 혹은 사회적 자본의 크기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기회가 적다는 점에 기인할 수 있는데, 비공식적 방법이 취업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6]을 통해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일정한 성별 결과에 비해서 뚜렷한 패턴을 찾기는 힘들다. 다만 50대를 제외하고 볼 때,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인 20대와 30대에서는 공식적 방법에 의한 구직이 약 6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구직이 53.7%를 차지하였다. 다만, 직접접촉의 경우 10대 후반과 60세 이상에서 각각 25.3%와 15.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특히 10대의 경우에는 비공식적 연결망조차도 갖추기 어려운 연령층이므로 직접접촉의 비중이 더 높은 반면,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비공식적 방법이라는 축적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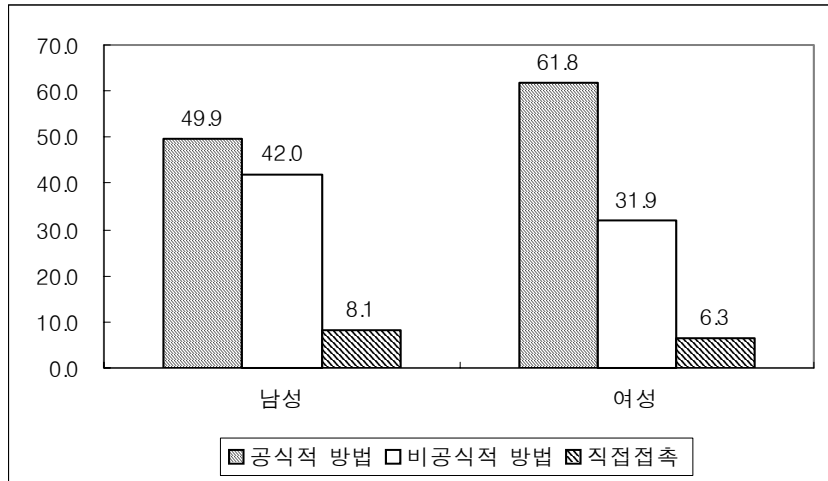
---

한 방법, 직접지원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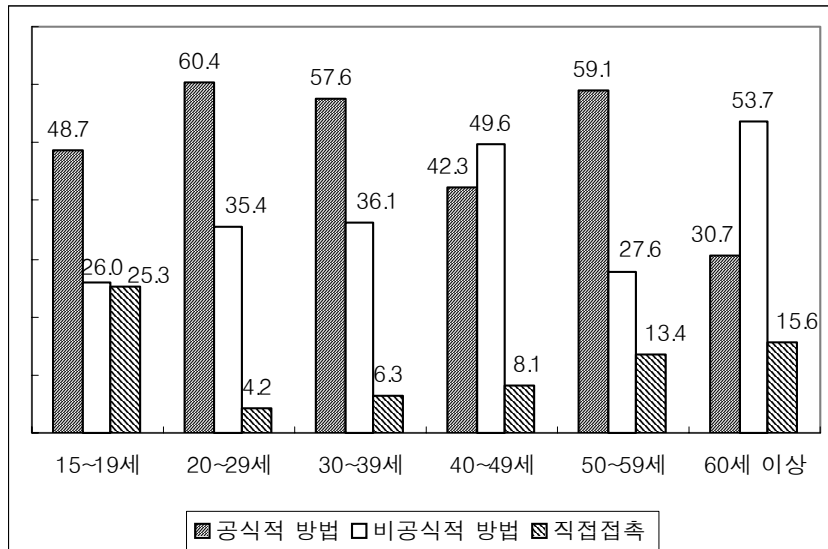
[그림 6-5] 성별 미취업자의 구직방법(2003년)

(단위: %)



[그림 6-6] 연령별 구직방법(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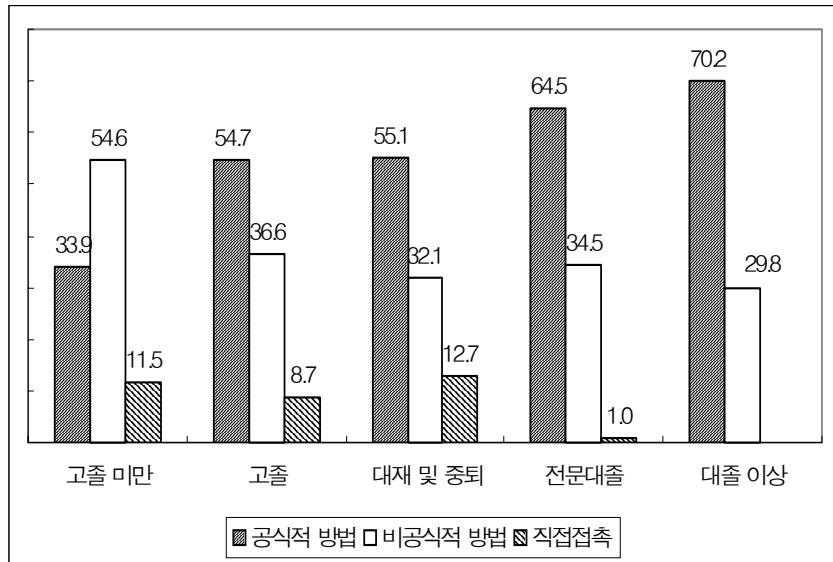
(단위: %)





(그림 6-7) 교육수준별 구직방법(2003년)

(단위: %)



마지막으로, 교육수준별 구직방법을 살펴보면 [그림 6-7]과 같다.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식적인 구직방법이 많이 이용된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졸자는 공식적 방법에 의한 구직이 70.2%로 고졸 미만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고졸 미만은 절반 이상이 비공식적 방법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수준과 연령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3.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미취업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형태, 희망임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표 6-18>과 같다. 지난 6년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추세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1998년에 비해 1999년과 2000년에 약 10%p 정도 낮게 추정되고 있으나 2001년부터는 88%를 넘어서 2003년에는 8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일 경우,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를 질문하였다. <표 6-19>를 통해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를 제외하고 80% 이상이 전일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의 경우 미취업 구직자의 30% 가량이 시간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되며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미취업 구직자의 1/3 가량은 전일제 일자리 취업을 고집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6-18>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1998~2003년)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1998	88.8	11.2
1999	79.2	20.6
2000	81.7	18.3
2001	88.2	11.1
2002	88.5	11.5
2003	89.5	10.5

주: 희망하는 고용형태 중에서 가족종사자는 제외함. 1999년 0.2%를 제외하고 가족종사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표 6-19>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1998~2003년)  
(단위: %)

	전일제	시간제
1998	69.7	30.3
1999	83.8	16.2
2000	84.8	15.2
2001	83.7	16.3
2002	84.3	15.7
2003	85.9	14.1

〈표 6-20〉 인구학적 특성별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고용 형태(2003년)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성 별	남 성	87.5	12.5
	여 성	93.8	6.2
연 령	15~19세	92.3	7.7
	20~29세	94.8	5.2
	30~39세	90.0	10.0
	40~49세	79.2	20.8
	50~59세	89.7	10.3
	60세 이상	100.0	0.0
교육 수 준	고졸 미만	88.2	11.8
	고졸	87.8	12.2
	대재 및 중퇴	95.5	4.5
	전문대졸	83.0	17.0
	대졸 이상	98.8	1.2

〈표 6-20〉은 인구학적 특성별로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 고용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약 6%p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령이 적을수록 임금근로자를 더욱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의 연령층의 경우 90% 이상이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반면, 40대 연령층의 경우 이러한 비중이 79.2%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과 대재 및 중퇴자가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6-21〉은 인구학적 특성별로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2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가사나 아동문제 등이 비구직 이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을 돌보는 문제가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형태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시간제를 선호하는 비중이 10대와 60대 이상에서 각각 43.4%와 21.4%로 높게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학업과 일의 병행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은

퇴 후 소일거리나 여가와의 병행 등 주관적 이유와 객관적인 노동시장 여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도 대재 및 중퇴의 경우 50.5%가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과 일의 문제가 근로시간 형태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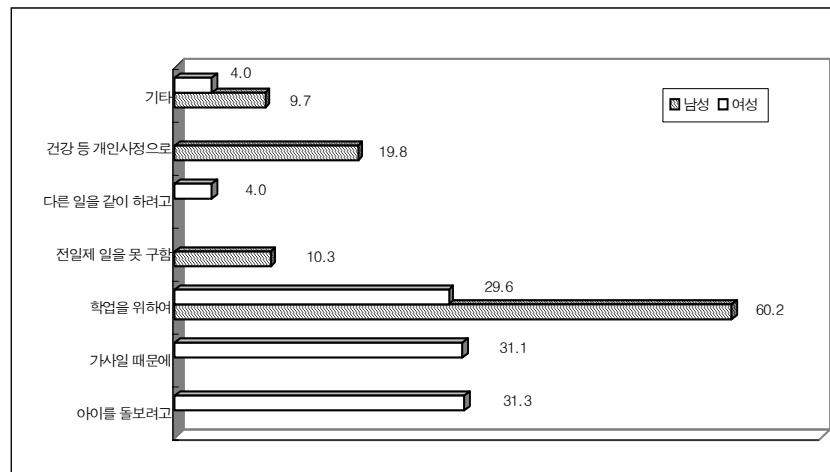
〈표 6-21〉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단위 : %)

		전일제	시간제
성 별	남 성	92.1	7.9
	여 성	77.0	23.0
연 령	15~19세	56.6	43.4
	20~29세	86.1	13.9
	30~39세	88.9	11.1
	40~49세	82.0	18.0
	50~59세	100.0	0.0
	60세 이상	78.6	21.4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83.2	16.8
	고졸	93.2	6.8
	대재 및 중퇴	49.5	50.5
	전문대졸	82.7	17.3
	대졸 이상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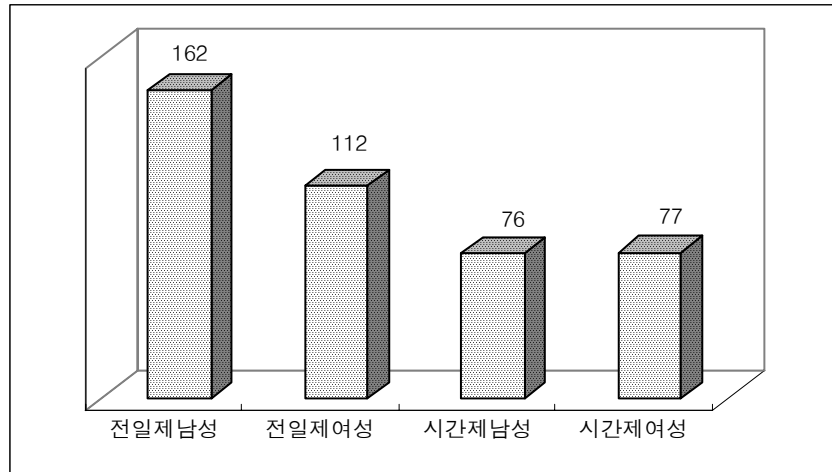
〔그림 6-8〕 시간제 근로 희망 이유

(단위 : %)



[그림 6-9] 성별·근로시간형태별 평균희망임금

(단위: 만원)



[그림 6-8]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 학업을 위하여가 6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 학업이나 건강 등 개인 사정보다는 육아나 가사 때문이라는 응답 비중이 각각 31.3%, 31.1%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희망하는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형태별 및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림 6-9]에서 볼 수 있듯이, 전일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162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일제를 선호하는 여성이 112만원을 희망하였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남녀에 상관없이 약 76만~77만원 정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취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다. <표 6-21>에는 이와 관련된 10가지 항목의 내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평균점수는 ‘(1) 매우 그렇다’부터 ‘(5)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로부터 산출되었으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라는 항목이 평균 1.8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일자리의 수입’(2.3점)이나 ‘취업 또는 창업정보의 부족’(2.5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연령이나 성별, 학력 등과 같은 차별요인에 대해서는 구직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간에도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도 성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보다는 일자리의 수입이나 근로조건, 혹은 취업 또는 창업 등의 정보부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 미취업자가 구직시 주로 겪는 어려움

(단위: 점)

	전체	남성	여성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1.8	1.7	1.9
2. 취업 또는 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2.5	2.5	2.5
3.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3.1	3.2	3.0
4. 경험이 부족하다	2.9	2.9	2.8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2.3	2.3	2.3
6.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다	2.8	2.9	2.6
7. 나이가 너무 많다	3.4	3.5	3.2
8.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3.0	2.9	3.1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3.8	4.6	3.2
10.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4.5	4.4	4.7

주: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평균점수임. 설문지상의 응답항목 구성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 제 7 장

##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지난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시작 시기 및 종료 시기, 산업·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수급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고 있다.

<표 7-1>에서는 1~6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본 조사에서 파악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수가 제시되어 있다. 6차년도에는 전체 4,213명이 조사되었다.

<표 7-1> 각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1998~2003년)

(단위: 명, %)

	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	여성	
1차년도	4,012	62.9	37.1	62.4
2차년도	3,975	60.4	39.6	64.2
3차년도	3,741	61.5	38.5	65.3
4차년도	3,845	60.8	39.2	67.3
5차년도	3,975	60.3	39.7	68.1
6차년도	4,213	60.0	40.0	69.4

주: 1)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시계열 가중치 적용.

2) 1차년도는 'p01573' 기준으로 계산. 나머지는 개인데이터의 'jobclass'와 신규 데이터의 '문3. 주된일자리'를 합쳐서 계산.

취업자 대비로 볼 때, 임금근로자는 1차년도(1998년)의 62.4%에서 꾸준히 늘어 6차년도에는 69.4%로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998년 61.7%, 2003년 65.1%에 비해 다소 높지만, 1998년 이후 꾸준히 총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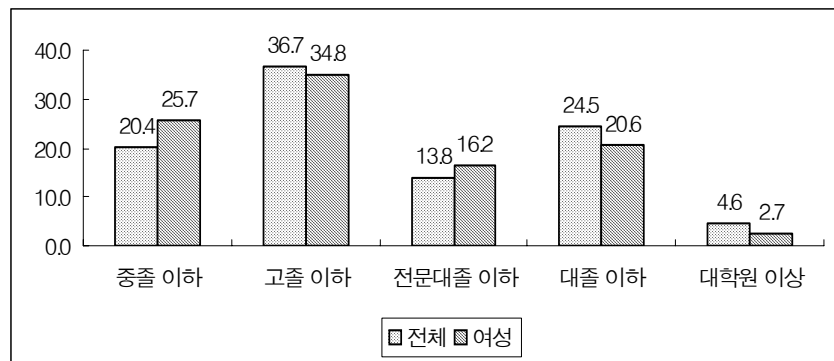
### 제 1 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절에서는 6차년도(2003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의 모든 분포는 임금근로자 샘플 4,213명을 대상으로 횡단면 가중치(w6\_pc)를 부여해 계산한 것이다.

먼저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졸 이하가 3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대졸 이하가 24.5%였다. 여성의 경우는 중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하에서 전체 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림 7-1] 임금근로자의 학력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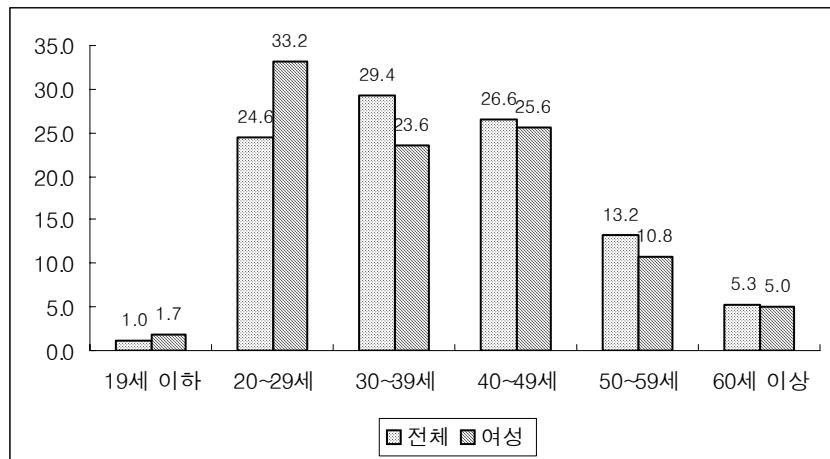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2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40대가 26.6%였다. 여성의 경우는 10대와 20대에서 전체보다 높



(그림 7-2) 임금근로자의 연령분포

(단위: %)



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여성의 경우 출산, 육아 등으로 일시적으로 노동공급이 중단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공공서비스업이 3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광공업이 25%였다. 여성도 공공서비스업에 가장 많은 36%가 분포해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산업은 광공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4.6%)이었다.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39.7%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이 그 다음이었다. 여성의 경우 전체 분포에 비해 사무직(20.3%), 서비스직(23.1%)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이 3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00인 이상(19.9%)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전체 분포에 비해 10인 미만(37.8%)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기업형태별로는 대다수가 민간회사(76.6%)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부기관(8.3%)이 그 다음이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제가 있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9.5%였으며, 남성(12.2%)이 여성(5.5%)보다 많았다. 교대제를 할 경우 대부분이 맞교대제(2조2교대제) 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

(단위: 명, %)

		전체	남성	여성
업종	농림어업	0.8	0.6	1.0
	광공업	25.0	27.3	21.6
	건설업	10.5	16.5	1.8
	전기·가스 및 수도업	0.6	0.9	0.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7.4	12.6	24.6
	운수통신업	6.4	8.6	3.2
	금융, 부동산업	6.4	5.2	8.2
	공공서비스업	31.3	28.1	36.0
	가사서비스업	1.5	0.2	3.4
직종	전문관리직	28.0	28.1	27.8
	사무직	16.5	13.9	20.3
	서비스직	15.0	9.4	23.1
	농림어업직	0.7	0.6	0.9
	생산직	39.7	47.9	27.9
종업 원규 모	10인 미만	32.4	28.7	37.8
	10~29인	17.4	18.2	16.2
	30~99인	16.6	17.6	15.2
	100~299인	9.9	11.0	8.4
	300~499인	3.7	3.9	3.6
	500인 이상	19.9	20.7	18.8
기업 형태	민간회사	76.6	77.1	75.9
	외국인회사	1.1	1.1	1.1
	공기업	4.0	4.5	3.4
	법인단체	4.0	3.4	4.9
	정부기관	8.3	9.0	7.3
	비소속	5.0	4.2	6.2
	기타	1.0	0.8	1.2
교대 제 유무 및 형태	교대제 안함	90.5	87.8	94.5
	2조 2교대제	5.8	8.0	2.6
	3조 3교대제	2.3	2.3	2.2
	4조 4교대제	0.5	0.6	0.2
	5조 5교대제	0.5	0.6	0.2
	기타 교대제	0.5	0.7	0.2
종사 상 지위	상용직	79.0	82.1	74.4
	임시직	10.7	6.9	16.0
	일용직	10.4	11.0	9.5

주: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79.0%였고, 임시·일용직은 21.1%였다.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50% 대 안팎이 나오지만, 이는 조사기준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퇴직금의 유무 등 부가급여를 받는지 등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구분하는 다른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KLIPS의 경우는 기간 이외의 다른 것을 분류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상용직과 일용직에서, 여성은 임시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무래도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장에 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용직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건설업의 경우 산업특성상 남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보인다.

## 제 2 절 근로시간

제5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및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함으로써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은 종료되며,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규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무시간 및 주당 근로일수를 질문하게 된다. 또한, 초과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 1. 평균근로시간

우선 평균근로시간의 연도별 추이부터 살펴보자. 여기서 평균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근로자는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합쳐서 계산하였다.

<표 7-3>을 보면 1998년 임금근로자들은 53.0시간을 근무하였으나, 6차년도인 2003년에는 50.6시간만을 근무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평균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비하여 수준으로는 약 5시간 가량 긴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매월노동통계조사』가 5인 이상 상용직의 근로시간만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sup>33)</sup>

<표 7-3>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1998~2003년)

(단위: 시간, %)

조사시점	평균근로시간	전년 대비 증가율
1차년도	53.0(17.8)	-
2차년도	52.8(16.6)	0.4
3차년도	52.3(15.9)	0.9
4차년도	51.0(16.3)	2.5
5차년도	50.8(15.3)	0.4
6차년도	50.6(15.8)	0.4

주: 1) 가중치 부여 후 계산. ( )안은 표준오차.

2) 증가율은 ((해당년도-전년도)/전년도)×100으로 계산.

<표 7-4>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53.1시간)이 여성(46.8시간)에 비해 평균적으로 주당 6.3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1.5시간으로 가장 길며, 10대가 43.4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은 10대와 60대처럼 노동시장 참가가 그리 높지 않은 연령대를 제외하고 보면, 30대에서 가장 격차가 컸는데, 여성의 육아 부담 등이 그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근로시간은 50대에서 가장 길었고, 남성은 30대에서 가장 길었다.

33) 다른 예로, OECD 집계에 따르면 1999년 한국의 평균근로시간은 50시간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동일년도 KLIPS보다는 2.8시간 짧지만, 『매월노동통계조사』의 47.9시간 보다는 2.1시간 긴 것이다.

〈표 7-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주당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전 체		50.5 (15.8)	53.1 (15.2)	46.8 (15.9)
연령별	19세 미만	43.4 (22.3)	52.9 (23.2)	38.8 (20.4)
	20~29세	49.2 (13.7)	51.6 (13.9)	47.2 (13.3)
	30~39세	51.1 (15.1)	54.3 (14.5)	44.5 (14.1)
	40~49세	50.8 (15.0)	52.6 (13.8)	48.1 (16.3)
	50~59세	51.5 (18.3)	51.9 (16.6)	50.9 (21.2)
	60세 이상	50.8 (21.9)	56.1 (21.9)	42.2 (18.9)
학력별	중졸 이하	51.5 (19.0)	54.1 (17.7)	49.1 (19.8)
	고졸 이하	52.4 (15.2)	55.4 (15.0)	47.6 (14.4)
	전문대졸 이하	50.8 (11.8)	53.6 (11.8)	47.8 (10.9)
	대졸 이하	48.4 (14.7)	50.9 (13.9)	43.5 (14.9)
	대학원 이상	41.6 (16.3)	43.7 (15.2)	34.7 (17.6)

주:1) ( )안은 표준오차.

2) <표 7-3>의 6차년도 주당 평균근로시간과의 차이는 가중치 차이 때문임. <표 7-3>에서는 종단면 가중치를, <표 7-4>에서는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음.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졸 이하와 고졸 이하는 주당 근무시간이 각각 51.5시간과 52.4시간인 데 반해 대재 이상 대졸 이하는 48.4시간, 대학원 이상은 41.6시간으로, 많게는 10시간 가까이 평균근로시간이 길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가장 긴 52.4시간이었다. 성별로 보아도 상용직이 남성 54.6시간, 여성 48.9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임시직은 남녀 모두 상용직보다 7시간 정도 짧은 47.4시간, 41.3시간이었다.

〈표 7-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주당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상용직	52.4 (14.1)	54.6 (14.1)	48.9 (13.3)
임시직	43.7 (19.6)	47.4 (19.6)	41.3 (19.1)
일용직	43.5 (19.1)	45.3 (16.1)	40.3 (23.0)

주:( )안은 표준오차.

<표 7-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종별·종업원 규모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할 경우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6.3시간으로 가장 짧은 반면에, 운수통신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5.8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직이 55시간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가장 짧은 직종은 농림어업직을 제외하면 전문관리직(47시간)

<표 7-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주당평균 근로시간	남성	여성
직종별	전문관리직	47.0 (14.7)	49.8 (14.3)	42.8 (14.3)
	사무직	48.1 (10.7)	50.2 (10.9)	46.0 (10.0)
	서비스직	55.0 (18.3)	58.0 (16.9)	53.2 (18.9)
	농림어업직	44.6 (20.5)	55.0 (16.1)	33.4 (18.6)
	생산직	52.5 (16.5)	54.9 (15.9)	46.6 (16.3)
업종별	농림어업	44.3 (21.2)	55.6 (17.6)	33.9 (18.8)
	광공업	52.6 (12.1)	54.2 (11.1)	49.7 (13.2)
	건설업	48.9 (14.3)	49.4 (14.3)	41.8 (12.2)
	전기·가스 및 수도업	46.3 (9.2)	47.6 (8.0)	32.6 (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3.7 (16.9)	56.0 (14.8)	52.0 (18.1)
	운수통신업	55.8 (15.2)	58.0 (15.6)	47.1 (9.4)
	금융, 부동산업	46.4 (11.0)	50.2 (11.7)	42.8 (9.1)
	공공서비스업	48.5 (17.3)	52.2 (18.4)	44.1 (14.7)
가사서비스업	37.2 (25.6)	28.0 (18.7)	38.2 (26.0)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51.9 (17.4)	54.9 (16.2)	48.6 (18.1)
	10~29인	51.1 (14.8)	53.4 (15.0)	47.3 (13.7)
	30~99인	52.8 (14.5)	55.3 (15.0)	48.5 (12.3)
	100~299인	54.7 (14.6)	56.7 (15.0)	50.8 (13.0)
	300~499인	51.3 (14.3)	53.1 (15.5)	48.5 (11.4)
	500인 이상	49.2 (12.8)	51.4 (12.0)	45.6 (13.2)

주:( )안은 표준오차.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299인이 54.7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500인 이상이 49.2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초과근로시간

다음으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등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표 7-7>에 제시되어 있듯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24.0%로 나타나 KLIPS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순서대로 늘어세웠을 때 중간값에 해당하는 사분위수 50%(즉, 중위값)는 6시간으로 2차년도 조사 이후 동일한 수준

<표 7-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단위: %, 시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초과근로를 안함		59.9	67.0	66.6	69.0	67.4	76.0
초과근로를 함		40.1	33.0	33.4	31.0	32.5	24.0
사분위수 (시간)	25%	4	4	4	4	4	4
	50%	8	6	6	6	6	6
	75%	12	10	10	10	10	10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		11.0	8.5	8.6	8.2	7.8	8.5
초과급여 지급 안함		54.5	54.2	45.7	43.4	42.1	43.4
초과급여 지급함		45.5	45.8	54.3	56.6	57.9	56.6
초과급여 지급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74.2	80.0	83.6	78.6	78.2	85.7
	일정 금액	21.9	16.2	11.5	13.4	15.3	10.8
	기준 없음	3.6	3.3	4.9	7.5	6.6	3.5
	모름/ 무응답	0.3	0.6	-	0.6	-	-
시간당 평균초과급여(천원)		4.5	4.5	5.2	5.5	5.9	5.2

을 유지하고 있으며, 25%, 75% 역시 각각 4시간, 10시간으로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지난해보다는 0.7시간 늘어났다.

초과급여에 대해 살펴보면, 초과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이 응답자 중 56.6%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다. 한편, 초과급여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간에 따라 결정(85.7%)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10.8%로 나타났다. 시간당 초과급여는 5,200원으로 5차 조사에 비해 700원 정도 감소하였다.

### 제 3 절 임금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주기, 임금산정방식, 임금수준, 성과급적용 여부와 해당 성과급제, 그리고 임금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여러 내용에 대하여 종사상 지위별·인구학적 특성별·사업체 특성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임금지급주기 및 임금산정방식

<표 7-8>을 통해 임금지급주기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93.4% 정도가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시로 지급받는다’와 ‘매일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각각 3.1%, 2.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지급주기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3.0%)과 여성(94.0%)의 대부분이 ‘한 달’ 주기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임금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연봉계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5.4%)보다 2.1%p 증가한 7.5%로 나타나고 있으며, 월급제의 비중은 7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6.5%)과 여성



〈표 7-8〉 임금지급주기 및 임금지급방법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임금지급주기	한달	93.4	93.0	94.0
	보름/주	0.7	0.5	0.9
	매일	2.4	2.0	3.0
	수시	3.1	4.1	1.6
	기타	0.4	0.3	0.5
임금지급방법	연봉계약제	7.5	9.9	4.0
	월급	77.5	76.5	78.9
	주급/격주	0.1	-	0.2
	일당	8.5	9.8	6.7
	시간급제	1.8	1.1	2.9
	도급제	0.8	0.3	1.5
	실적급	3.3	1.9	5.2
	기타	0.5	0.5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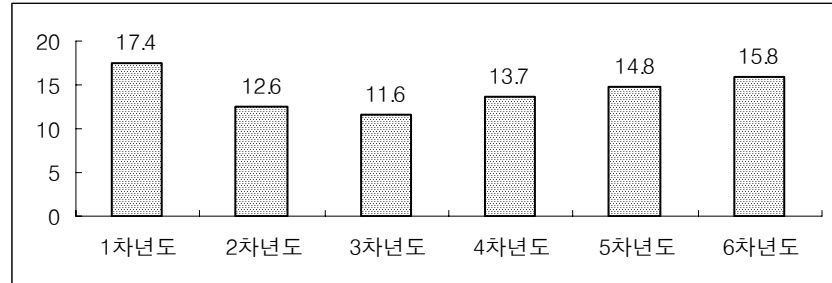
(78.9%) 모두 월급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연봉제는 남성(9.9%)이 여성(4.0%)보다 두 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KLIPS에서는 직장에서 임금 결정시에 성과급제를 사용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그림 7-3]은 성과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8년(17.4%)부터 2000년(11.6%)까지는 성과급제의 적용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2003년(15.8%)까지는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는 성과급제 실시여부를 임금근로자 특성별로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은 성별로는 별 차이 없었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금융, 부동산업이 43.9%인 반면, 건설업은 5.1% 등으로 차이가 상당했으며, 직종별로도 전문관리직은 22%가 적용받는 반면, 생산직은 전문관리직의 절반에 못 미치는 10.7%에 불과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예상 가능한 것처럼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은 성과급제 적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그림 7-3) 임금근로자 중 성과급 받는 사람 비중 추이

(단위: %)



주: 모름은 제외.

(표 7-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여부

(단위: %)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성별	남성	15.5	84.5
	여성	16.1	83.9
업종	농림어업	15.4	84.6
	광공업	16.1	83.9
	건설업	5.1	94.9
	전기·가스 및 수도업	10.2	89.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5	83.5
	운수통신업	23.2	76.8
	금융, 부동산업	43.9	56.1
	공공서비스업	12.4	87.6
직종	전문관리직	22.0	78.0
	사무직	14.9	85.1
	서비스직	18.2	81.8
	농림어업직	15.5	84.5
	생산직	10.7	89.3
종사상 지위	상용직	18.0	82.0
	임시직	9.8	90.2
	일용직	5.1	94.9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5.6	94.4
	10~29인	7.8	92.2
	30~99인	9.9	90.1
	100~299인	18.2	81.8
	300~499인	24.1	75.9
	500인 이상	40.2	59.8

## 2. 월평균임금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임금산정방식에 따른 항목별 임금수준 이외에도 “현재 이 일자리에서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월평균임금(세후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7-10>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지난 6년간 KLIPS에서 조사하고 있는 월평균 실질임금은 1차년도 조사(114만 7천원)에 비해 2차년도 조사(105만 7천원)에서 9만원이 감소하였으나, 3차년도 109만 9천원, 4차년도 116만 7천원, 5차년도 123만 5천원, 6차년도 130만 9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105만원으로 남성의 61.2%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임금의 변동은 『매월노동통계조사』<sup>34)</sup>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다.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하면, 2003년 월평균임금액은 233만 8천원인데, KLIPS는 145만원으로 나타난다.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더라도 1999년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1.1%로 증가했지만, KLIPS의 경우 -7.8%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KLIPS에서 추정하고 있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주요한 것은 조사대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LIPS의 경우는 가구조사로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개인의 임금을 조사하므로 1인 이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반해 『매월노동통계조사』는 기업체 조사로 비농부문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sup>35)</sup>의 상용근로자가 조사대상이며, 1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는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조건에 처해 있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중 상당수가 조사대상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다.

34)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35)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999년 이전에는 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가 조사대상이었으나, 1999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10인 이상 자료를 수록한 한국노동연구원, 『2003 KLI 노동통계』의 결과를 참조하였다.

<표 7-11>에서는 임금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했다. 3차년도를 제외하고는 지니계수가 꾸준히 상승해, 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0> 연도별 월평균임금 비교

(단위: 만원, %)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년도	111.2	114.7	131.1	135.1	77.5	79.9
2차년도	103.4 (-7.0)	105.7 (-7.8)	123.6 (-5.7)	126.4 (-6.4)	72.5 (-6.4)	74.2 (-7.2)
3차년도	109.9 (6.2)	109.9 (3.9)	130.5 (5.5)	130.5 (3.2)	77.0 (6.1)	77.0 (3.8)
4차년도	121.5 (10.6)	116.7 (6.2)	144.6 (10.8)	138.9 (6.4)	85.7 (11.3)	82.3 (6.9)
5차년도	132.1 (8.7)	123.5 (5.9)	156.7 (8.4)	146.6 (5.6)	94.5 (10.3)	88.4 (7.4)
6차년도	145.0 (9.8)	130.9 (6.0)	171.7 (9.5)	155.1 (5.8)	105.0 (11.0)	94.8 (7.2)

주: 1) 실질임금=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2)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표 7-11> 임금소득분배 추이

(단위: %)

	지니계수	P90/50	P50/10	P90/10	중위값
1차년도	0.304	2.00	2.00	4.00	100
2차년도	0.309	2.00	2.21	4.42	90
3차년도	0.300	1.90	2.00	3.80	100
4차년도	0.308	2.00	2.00	4.00	100
5차년도	0.310	2.09	2.12	4.42	110
6차년도	0.322	2.08	2.00	4.17	120

주: 1) 중위값=P50=임금수준의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맨 가운데에 위치한 근로자의 임금수준.  
 2) 지니계수: 소득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의미.  
 3) P90/50은 임금수준을 순서대로 배열하였을 때 가운데(50%)인 근로자의 임금보다 9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몇 배 더 많은지를 표현. P50/10, P90/10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하면 됨.

이를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추이와 비교해 보면<sup>36)</sup>, 지니계수의 수준 자체는 KLIPS가 다소 높지만, 3차년도 지니계수가 하락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꾸준히 두 조사에서 모두 지니계수가 악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7-12>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임금을 연령별·교육수준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7-12>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  
(단위: 만원)

		전 체		남 성		여 성	
		평균임금	상대임금	평균임금	상대임금	평균임금	상대임금
연령	19세 이하	64.3 (27.0)	56.1	73.0 (18.1)	59.3	60.1 (29.6)	55.8
	20~29세	114.7 (67.2)	100.0	123.3 (54.6)	100.0	107.7 (75.3)	100.0
	30~39세	165.7 (83.8)	144.5	186.7 (79.1)	151.5	122.9 (76.4)	114.1
	40~49세	158.8 (102.3)	138.5	197.3 (101.5)	160.1	98.9 (69.5)	91.9
	50~59세	159.5 (122.4)	139.1	190.6 (128.6)	154.7	97.4 (78.2)	90.5
	60세 이상	77.3 (56.1)	67.4	93.9 (63.2)	76.2	50.3 (24.5)	46.7
학력	중졸 이하	93.9 (60.6)	69.4	117.9 (68.4)	74.3	71.1 (40.8)	72.4
	고졸 이하	135.3 (82.9)	100.0	158.6 (73.2)	100.0	98.2 (83.8)	100.0
	전문대졸 이하	138.9 (70.3)	102.6	162.6 (72.9)	102.5	113.2 (57.1)	115.2
	대졸 이하	187.0 (106.5)	138.2	211.3 (113.1)	133.2	139.9 (72.0)	142.5
	대학원 이상	239.9 (124.1)	177.3	260.1 (120.9)	164.0	174.5 (110.9)	177.7

주: 1)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2) 상대임금은 연령은 20대, 학력은 고졸을 100으로 하여 계산.  
 3) ( )안은 표준오차.

3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지니계수는 1998년부터 0.282, 0.286, 0.299, 0.300, 0.303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한국노동연구원, 『2004 KLI 노동통계』에서 재인용).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0대에 월평균임금이 197만 3천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30대에 122만 9천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19세 이하 집단에서 월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임금은 교육수준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중퇴 또는 대졸자의 경우 고졸보다 138.2%(187만원)의 임금을 받는 반면, 중졸은 고졸의 69.4%(93만 9천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고용형태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3>에 제시되어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임금은 159만 7천원으로 임시직은 상용직의 52%, 일용직은 60%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임시직의 월평균임금이 일용직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시직으로 분류되는 퇴직금 등 부가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KLIPS에서는 상용직으로 분류되고, 이와 같은 조사의 차이 때문에 임시직 중 임금이 비교적 높은 집단이 KLIPS에서는 상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표 7-13>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단위 : 만원)

		월평균임금	
		평균액	상대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직	159.7 (97.2)	100.0
	임시직	82.4 (49.8)	51.6
	일용직	95.9 (53.9)	60.0

주: 1)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에 관한 질문에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

2) ( )안은 표준오차.

다음으로 <표 7-14>는 산업별·직업별 및 기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260만 6천원)의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부동산업(192만 2천원)과 운수통신업(162만 2천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광공업 월평균임금의 83.3%(118만 3천원)로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4〉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단위: 만원)

		전 체		남 성		여 성	
		월평균임금	상대 임금	월평균임금	상대 임금	월평균임금	상대 임금
직 종	전문관리직	191.2 (113.8)	119.6	225.2 (120.7)	115.1	141.7 ( 80.3)	113.8
	사무직	159.9 ( 99.5)	100.0	195.7 ( 88.2)	100.0	124.6 ( 97.4)	100.0
	서비스직	116.2 ( 75.2)	72.7	162.2 ( 87.8)	82.9	89.0 ( 49.4)	71.5
	농림어업직	91.5 ( 69.4)	57.2	142.1 ( 61.1)	72.6	37.5 ( 17.9)	30.1
	생산직	117.2 ( 64.3)	73.3	137.4 ( 63.2)	70.2	67.3 ( 30.8)	54.1
산 업	농림어업	86.7 ( 71.4)	61.1	138.4 ( 69.4)	79.8	39.9 ( 27.1)	47.5
	광공업	142.0 ( 93.8)	100.0	173.5 ( 90.4)	100.0	84.0 ( 69.1)	100.0
	건설업	142.9 ( 67.4)	100.6	146.7 ( 67.5)	84.6	92.4 ( 39.3)	110.1
	전기·가스 및 수도업	260.6 ( 97.6)	183.5	272.9 ( 91.5)	157.2	134.5 ( 62.4)	160.1
	도소매 음식숙박업	118.3 ( 79.3)	83.4	156.0 ( 97.3)	89.9	90.4 ( 45.6)	107.6
	운수통신업	162.2 ( 83.3)	114.2	166.6 ( 84.6)	96.0	144.9 ( 75.2)	172.5
	금융, 부동산업	192.2 (117.2)	135.4	233.5 (122.6)	134.6	153.7 ( 97.2)	183.0
	공공 서비스업	153.9 (100.5)	108.4	184.3 (105.6)	106.2	119.0 ( 81.3)	141.7
	가사 서비스업	60.7 ( 31.4)	42.8	80.8 ( 45.7)	46.6	58.7 ( 28.8)	69.9
종 업 원 규 모	10인 미만	106.5 (56.1)	80.4	129.3 (55.8)	82.8	81.5 ( 44.5)	86.6
	10~29인	132.5 (80.4)	100.0	156.0 (75.0)	100.0	94.1 ( 73.9)	100.0
	30~99인	142.6 (84.1)	107.6	166.6 (87.9)	106.8	102.7 ( 58.7)	109.1
	100~299인	150.9 (92.6)	113.8	175.2 (97.0)	112.3	104.0 ( 60.4)	110.5
	300~499인	197.4 (128.7)	149.0	234.7 (139.3)	150.4	138.8 ( 80.4)	147.5
	500인 이상	198.2 (117.5)	149.6	238.4 (119.4)	152.8	133.9 ( 79.9)	142.2
기 업 형 태 별	민간회사	135.5 (87.2)	67.9	162.3 (91.9)	72.3	96.1 ( 61.4)	58.7
	외국인회사	199.5 (115.5)	100.0	224.4 (111.3)	100.0	163.9 (112.1)	100.0
	공기업	202.3 (107.4)	101.4	238.5 (102.1)	106.3	130.9 ( 77.8)	79.9
	법인단체	180.4 (110.8)	90.4	216.1 (116.8)	96.3	143.8 ( 90.7)	87.7
	정부기관	213.9 (99.9)	107.2	231.8 (82.7)	103.3	181.3 (118.5)	110.6
	기타	94.8 (66.6)	47.5	124.4 (73.3)	55.4	65.8 ( 42.7)	40.2

주: 1)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2) 상대임금은 직종은 사무직, 산업은 광공업, 규모는 10~29인, 기업형태는 외국인 회사를 100으로 하여 계산.

3) ( )안은 표준오차.

임금수준은 직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관리직의 월평균임금은 191만 2천원으로 사무직의 120%이며, 생산직과 서비스업은 사무직의 73.3%, 7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별로 보면, 정부기관이 가장 높은 213만 9천원이었으며, 공기업은 그 다음이었다. 외국인회사는 199만 5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민간회사는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135만 5천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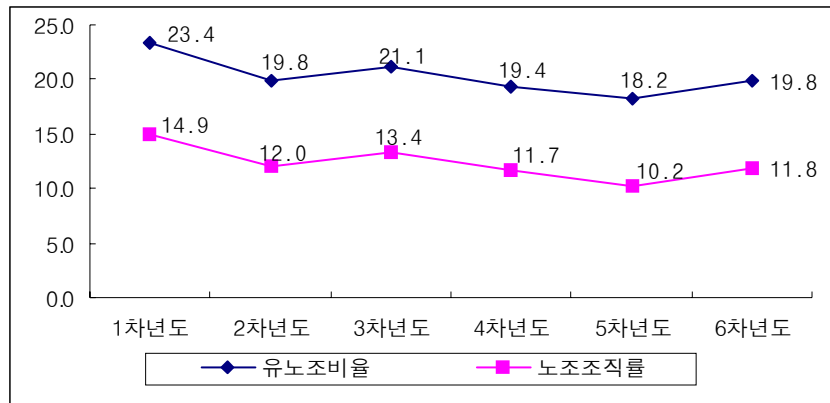
종업원 규모별 임금수준은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임금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500인 이상은 10~29인보다 149.6% 정도 더 높았지만, 10인 미만은 10~29인의 80.4%에 지나지 않았다.

#### 제 4 절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관련된 조사내용으로는 사업체내 노동조합 유무 및 본인의 가입 여부 등이 있다. [그림 7-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 중 자신이 일하는 사업체 내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이하 '유노조비율') 및 본인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이하 '노조조직률') 모두 전년도보다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유노조비율이 23.4%로 나타나고 있으나, 3차년도에는 21.1%, 4차년도에는 19.4%, 5차년도에는 18.2%까지 감소하였지만, 6차년도에는 19.8%로 소폭 상승하였다. 노조조직률의 경우에도 1차년도는 14.9%에 이르고 있으나, 5차년에는 10.2%까지 하락하였으며, 다시 6차년도에 11.8%로 소폭 반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노조조직률의 추이는 유노조비율의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별 노동조합 전통 아래서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KLIPS의 노조조직률은 노동부 발표 조직률인 2003년 11.6%와 비슷한 수준이며, 조합원수를 전체 임금근로자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노조조직률 11.3%와도 엇비슷한 것이다.



(그림 7-4) 임금근로자의 유노조비율 및 노조조직률(1998~2003년) (단위: %)



한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가입 이유를 물은 결과, 가장 많은 43.4%가 노조가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7.8%가 가입자격이 없어서 가입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사용자 만류와 노조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4.0%로 낮게 나타났다. 가입자격이 없어서 가입하지 못했다는 사람의 비중은 5차년도와 비교할 때 크게 준 반면, 노동조합이 필요 없어서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람의 비중은 4차년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크게 늘어난 것이다. 1, 2개년도의 현상을 놓고 어떤 해석을 하긴 힘들지만,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는 가입자격이 비정규직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의 현실적 영향력은 다소간 줄어든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15>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비노조 가입자의 노조 비가입 이유 (단위: %)

	가입자격 없음	노조에 불만	주위의 만류	사용자의 만류	노조 필요없음	기 타	전 체
4차년도	41.3	5.8	1.9	4.4	30.4	16.3	100.0
5차년도	45.5	3.3	0.6	2.9	42.4	5.4	100.0
6차년도	37.8	4.0	1.0	4.0	43.4	9.8	100.0

## 제 5 절 비정규직 근로자

한국노동패널조사는 5차년도부터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정교하게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먼저, 1~6차년도 조사까지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조사항목으로는 임금근로자용 유형설문에서 조사되어 오던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및 자기 판단에 기초한 정규-비정규 여부, 근로계약기간의 유무 등이 있다. 이 외에 5차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유형설문에서 조사되고 있는 호출근로(혹은 일용대기근로) 외에 취업자용 설문 중 문8~문13에서 조사된 근로의 지속가능성 여부, 향후 지속가능기간, 근로지속 불가능 이유, 파견 및 용역근로 여부, 독립도급근로 여부, 가내근로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사항목들을 이용하여 아래에서는 다양한 고용유형을 판별하고 각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비정규직의 규모

다음으로 <표 7-16>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고용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독립도급근로(35.2%)이며, 시간제근로(28.9%)와 일용대기근로(14.2%)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는 3.5%와 7.9%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기준별로 살펴볼 때 KLIPS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5]에서 볼 수 있듯이, KLIPS에서 임시·일용직 기준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1%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49.5%와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하는 조작적 정의를 이용할 때(기준 2)에는 26.2%로 경활조사와의 격

차가 감소하며,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에 속하거나 다양한 고용 형태에 속하는 경우(기준 1 혹은 기준 2) KLIPS에서 추정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34.6%까지 증가한다. 여기에 장기임시직을 포함할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거의 같은 비정규직 규모가 추산된다. 결국 두 조사간 조사방법상의 차이점<sup>37)</sup>을 감안하면 양 조사에서의 비정규직 규모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16〉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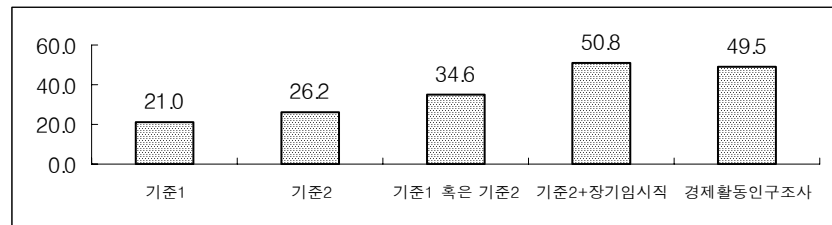
(단위: %)

	정규직	일용 대기	파견	용역	독립 도급	가내	시간제	단기 계약	전 체
전체	73.8	3.7	0.9	2.1	9.2	1.5	7.6	1.2	100.0
		14.2	3.5	7.9	35.2	5.6	28.9	4.7	100.0
남성	78.3	4.6	1.0	2.1	8.6	0.6	3.7	1.2	100.0
		21.0	4.8	9.6	39.6	2.6	17.0	5.5	100.0
여성	67.3	2.5	0.8	2.0	10.1	2.8	13.3	1.3	100.0
		7.7	2.3	6.2	31.0	8.4	40.5	3.8	100.0

주: 1) 각 고용형태는 개별 기준에 의해 정의되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표에서 제시된 항목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류된 결과임.  
 2) 단기계약직이란, 근속이 1년 안된 사람들 중 향후 계속 근무 가능한 기간이 1년 이하인 노동자를 의미함.

(그림 7-5)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단위: %)



주: 기준 1은 KLIPS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 비중, 기준 2는 위의 고용형태별 정의를 이용. 기준 2+장기임시직에서 장기임시직은 부가급여를 받는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지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가능한데, 여기서는 퇴직금을 받는지 여부로 통제했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3년도 비농가부문 임시·일용직 비중임.

37) KLIPS에서는 각종 사회보험 및 퇴직금 가입 여부와 수령 가능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상여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상여금이나 각종 부가급여 제공 등을 감안하여 조사요원이 직접 종사상 지위를 판별하여 기입한다.

##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여기서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한 비정규직의 조작적 정의(기준 2)를 기준으로 이들의 임금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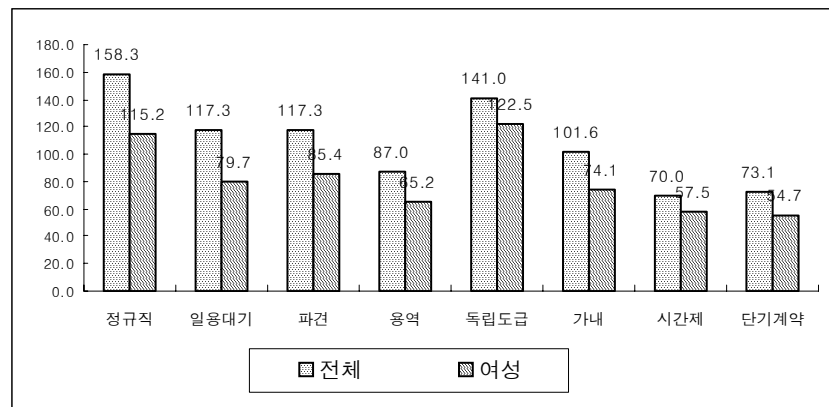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06만 7천원으로 정규직(158만 3천원) 근로자의 약 67.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 매우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도급 근로(141만원)일 때의 임금은 정규직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일용대기(117만 3천원), 파견(117만 3천원) 근로는 비정규직의 평균임금보다는 높지만 정규직의 74.1%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용역(87만원), 가내 근로(101만 6천원), 시간제(70만원), 단기계약(73만 1천원) 등에서 더 심해졌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독립도급일 경우 122만 5천원으로, 정규직 115만 2천원을 상회할 정도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비정규 고용형태에서는 여성 정규직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7-6)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 임금액

(단위: 만원)



주: 임금수준은 명목임금임.

## 제 8 장

##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임금근로자에게도 매년 유형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특성들이 조사되고 있다. 특히 5차년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1~6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KLIPS에서 파악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표 8-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표 8-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1998~2003년)

(단위: 명,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비중	여성비중	
1차년도	2,415	58.6	41.4	37.6
2차년도	2,258	59.4	40.6	35.8
3차년도	2,072	60.5	39.5	34.7
4차년도	1,982	59.8	40.2	32.7
5차년도	1,980	61.0	39.0	31.9
6차년도	2,000	61.4	38.6	30.6

## 제 1 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이때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이르며,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이 없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로 각각 정의된다.

먼저 <표 8-2>를 통해 6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7.5%, 자영업자 51.7%, 그리고 가족종사자는 20.8%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가족종사자의 경우 1차년도에 24.1%였으나 점차 줄어 6차년도 20.8%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KLIPS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21.9%이므로,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2> 1~5차년도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년도	20.8	55.1	24.1
2차년도	22.4	54.3	23.3
3차년도	23.9	53.0	23.1
4차년도	26.3	53.0	20.8
5차년도	27.7	50.9	21.5
6차년도	27.5	51.7	20.8

<표 8-3>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59.8%), 고용주(36.1%), 가족종사자(4.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종사자(47.0%)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38.1%), 고용주(14.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이후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영업자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44.0%로 20대에 비해 3.5%p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0대와 50대는 각각 46.8%와 54.5%를 차지하다가 60대에 이르르면 65.7%에 이르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분포는 교육 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sup>38)</sup>로는 광공업(40.8%), 건설업(40.2%), 공공서비스업(38.1%)에서 고용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8-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성별	남성	36.1	59.8	4.0
	여성	14.9	38.1	47.0
연령	19세 미만	0.0	0.0	100.0
	20~29세	27.8	40.5	31.7
	30~39세	36.9	44.0	19.0
	40~49세	31.0	46.8	22.1
	50~59세	26.2	54.5	19.3
	60세 이상	11.7	65.7	22.7
학력	중졸 이하	11.1	58.9	30.0
	고졸 이하	30.3	50.5	19.2
	전문대졸 이하	36.1	50.1	13.7
	대졸 이하	56.9	33.7	9.4
	대학원 이상	58.1	41.9	0.0
산업	농림어업	6.4	61.7	31.8
	광공업	40.8	37.7	21.5
	건설업	40.2	53.7	6.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0.7	46.1	23.3
	운수통신업	12.3	80.5	7.1
	금융, 부동산업	19.9	64.6	15.5
	공공서비스업	38.1	46.1	15.9
	가사서비스업	0.0	100.0	0.0

38) 2000년 개정 산업표준분류.

## 제 2 절 근로시간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근로일수, 주당 평균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 일자리에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 함은 사업 또는 일 자체를 ‘하다 안하다’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로 다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련하여서는 “이 일자리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고 각각 조사하고 있다.

###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및 주평균 근로일수의 분포는 <표 8-4>와 같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77.4%, 불규칙적인 경우가 22.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 계절의 영향을 받아 불규칙한 경우(17.8%)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약 4배 가량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의 규칙성에 대해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응답이 고용주가 91.7%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는 70.2%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중이 고용주(6.2%)보다는 자영업자(23.5%)와 가족종사자(18.9%)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종사자의 48.6%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3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단위: %, 일)

		규칙적	불규칙적		주평균 근로일수(일)
			계절영향 없음	계절영향 있음	
전 체		77.4	4.8	17.8	6.1
종사상 지위	고용주	91.7	2.1	6.2	6.2
	자영업자	70.2	6.4	23.5	5.9
	가족종사자	76.7	4.4	18.9	6.2
산업	농림어업	41.8	5.1	53.1	6.0
	광공업	93.1	2.9	4.0	5.9
	건설업	51.4	9.7	38.9	5.5
	전기·가스 및 수도업	96.4	0.0	3.6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3.2	3.3	3.5	6.4
	운수통신업	87.3	4.4	8.3	5.5
	금융, 부동산업	95.0	3.2	1.8	5.8
	공공서비스업	94.4	3.3	2.3	5.9
	가사서비스업	48.1	40.5	11.4	5.0

한편, 6차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주평균 근로일수는 6.1일이며 종사상 지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산업별로 살펴볼 때에는 가사서비스업(5.0일)과 건설업(5.5일)이 주평균 근로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6.4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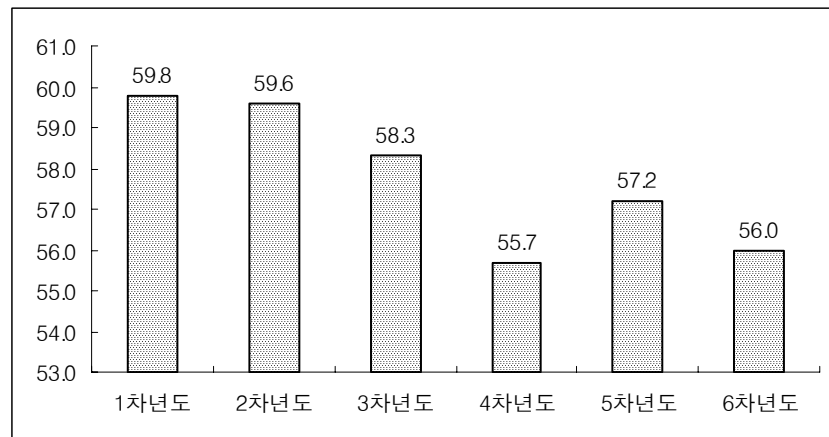
## 2. 주당 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1~4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5차년도 조사에서 소폭 상승한 후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1]에서 볼 수 있듯이, 1차년도(59.8시간)와 2차년도(59.6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은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3차년도에 58.3시간, 4차년도에는 55.7시간까지 감소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57.2시간으로 1.5시간 가량 증가하였고, 다시 6차년도에 56.0시간으로 1.2시간 감소하였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1차년도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고용주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6차년도의 경우, 고용주는 주당 평균 58.7시간, 자영업자는 55.4시간, 가족종사자는 53.8시간을 근로하였다.

[그림 8-1] 1~6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표 8-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평균 근로시간

(단위: %, 일)

	전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년도	59.8	59.1	59.7	60.7
2차년도	59.6	63.1	58.7	58.2
3차년도	58.3	60.2	57.8	57.5
4차년도	55.7	57.4	55.4	54.8
5차년도	57.2	58.6	56.7	56.5
6차년도	56.0	58.7	55.4	53.8

<표 8-6>은 주당 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비임금근로자의 73.0%가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 또한 56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임금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약 51시간)보다 약 5시간 정도 더 긴 수치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주당 71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26.3%)이 남성보다 5.3%p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성차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남성 비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주당 3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에 비해,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9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8-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평균 근로시간
전 체		6.9	12.5	7.6	18.0	31.9	23.1	56
성 별	남성	6.4	10.0	7.7	20.8	34.1	21.0	56
	여성	7.8	16.2	7.4	13.8	28.5	26.3	56
연 령	19세 미만	-	-	-	-	100.0	-	70
	20~29세	6.1	12.9	8.4	12.5	33.4	26.7	56
	30~39세	4.6	12.3	6.3	22.2	35.6	19.1	56
	40~49세	5.0	7.9	8.0	18.9	33.3	27.0	59
	50~59세	7.3	12.7	7.0	16.3	32.0	24.7	57
	60세 이상	13.6	22.3	8.9	14.6	23.9	16.7	48
학 력	중졸 이하	8.2	16.5	8.0	12.3	29.1	25.9	56
	고졸 이하	5.7	8.3	8.3	19.2	34.1	24.4	58
	전문대졸 이하	4.8	13.4	4.3	20.3	39.6	17.7	55
	대졸 이하	7.1	12.1	5.4	29.7	29.9	15.8	52
	대학원 이상	17.2	16.6	17.7	6.4	29.2	13.0	49

연령별로는 10대를 제외하면 40~49세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9시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연령대는 48시간의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58시간)가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대학원 이상(49시간)의 근로시간과의 차이는 주당 평균 9시간이었다. 같은 교육 수준의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전체적

으로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최소 6시간 이상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7>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특히 7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 응답자가 이 산업에서 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가 59시간으로 가장 길었지만, 규모별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평균 근로시간
산 업	농림어업	14.6	26.6	11.6	11.9	25.0	10.2	45
	광공업	6.8	7.0	5.1	39.6	29.0	12.6	52
	건설업	4.8	11.3	13.8	29.6	31.3	9.3	5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9	6.8	4.3	12.0	36.1	37.0	65
	운수통신업	5.9	7.7	12.2	20.9	35.9	17.5	55
	금융, 부동산업	9.0	6.9	13.2	15.8	36.5	18.7	54
	공공서비스업	5.6	15.0	7.3	19.1	30.4	22.6	55
	가사서비스업	-	51.4	24.7	-	23.8	-	37
종업원 규모	1~4인	4.7	7.2	5.7	24.9	32.5	25.1	59
	5~9인	0.9	7.1	7.0	32.9	32.5	19.7	58
	10인 이상	-	9.4	2.3	33.9	42.2	12.2	58

### 제 3 절 근로소득

<표 8-8>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명목소득(이하 월평균소득)과 월평균실질소득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난 6년간 월평균명목소득

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8년 126만 9천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212만 3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소득증가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2003년에 (-) 성장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간 소득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6차년도(2005년)의 여성 월평균명목소득은 139만 7천원으로 남성(236만 8천원)의 5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증가율을 보면, 6차년도에 남성의 경우 명목임금은 증가하였으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명목, 실질임금 모두 감소하였다.

〈표 8-8〉 비임금근로자의 연도별 월평균소득 비교

(단위: 만원)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1차년도	126.9	130.8	146.5	151.0	79.5	82.0
2차년도	128.4 (1.2)	131.3 (0.4)	143.0 (-2.4)	146.2 (-3.2)	85.2 (7.2)	87.1 (6.3)
3차년도	140.7 (9.6)	140.7 (7.2)	157.8 (10.3)	157.8 (7.9)	90.5 (6.2)	90.5 (3.9)
4차년도	177.9 (26.4)	170.9 (21.5)	199.3 (26.3)	191.5 (21.3)	121.1 (33.8)	116.3 (28.5)
5차년도	209.9 (18.0)	196.4 (14.9)	231.9 (16.4)	216.9 (13.3)	141.4 (16.8)	132.3 (13.7)
6차년도	212.3 (1.1)	191.8 (-2.3)	236.8 (2.1)	213.9 (-1.4)	139.7 (-1.2)	126.2 (-4.6)

주: 1)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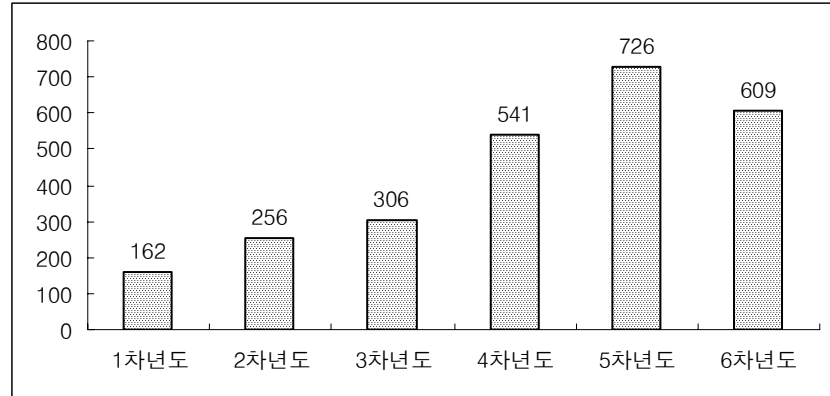
2)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실질소득을 비교한 결과가 [그림 8-2]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높으며, 그 격차는 1차년도 16만 2천원에서 2차년도 25만 6천원, 3차년도 30만 6천원, 4차년도 54만 1천원, 5차년도 72만 6천원으로 확대되다가 6차년도 60만 9천원으로 주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9>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연령별 및 교육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8-2]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실질소득 차액 비교

(단위: 천원)



주: 소득차액=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실질소득-임금근로자의 월평균실질임금

<표 8-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별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소득

(단위: %, 만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원)
		적자	100만원 미만	100만~ 200만원 미만	200만~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 체		7.7	23.1	28.0	19.8	21.5	212.1
연령	20~29세	15.8	26.6	31.8	16.2	9.6	164.9
	30~39세	7.7	10.4	31.5	25.6	24.8	256.8
	40~49세	7.9	11.9	27.1	24.7	28.4	263.9
	50~59세	5.7	24.4	32.2	17.4	20.3	183.3
	60세 이상	8.7	59.6	19.1	6.1	6.5	94.8
학 력	중졸 이하	7.7	43.6	28.4	12.2	8.1	123.5
	고졸 이하	7.5	14.2	32.0	23.4	22.9	206.0
	전문대졸 이하	6.6	13.5	30.8	22.5	26.6	314.8
	대졸 이하	8.6	8.4	17.4	25.2	40.3	344.3
	대학원 이상	3.8	6.0	15.0	19.9	55.4	406.6

주: 월평균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우선 연령별 월평균 소득액을 보면 40대에서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에는 300만원 이상에 분포하는 사람이 28.4%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사이에 가장 많은 31.5%가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50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소득 및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월평균 300만원 이상에 55.4%가 위치하고 있었던 반면, 중졸 이하의 단지 8.1%만이 300만원 이상에 분포하고 있었다.

<표 8-10>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에 대해 사업체 특성별 및 매출액 규모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광공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291만 8천원)이 가장 높

<표 8-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소득

(단위: %, 만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적자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산업	농림어업	10.7	57.8	19.2	6.1	6.2	111.0
	광공업	7.3	11.9	24.8	19.5	36.5	291.8
	건설업	7.2	10.0	32.2	19.6	31.0	266.3
	도소매및음식숙박업	7.9	19.3	28.0	21.8	23.0	212.2
	운수통신업	5.0	9.1	41.6	33.9	10.4	206.5
	금융, 부동산업	6.9	16.5	39.6	10.1	26.9	184.2
	공공서비스업	6.4	15.9	28.3	26.1	23.4	245.5
	가사서비스업	0.0	100.0	0.0	0.0	0.0	57.7
종업원 규모	0명(자영업자)	7.6	32.7	31.0	17.9	10.9	151.6
	1~4인	9.5	4.7	25.1	25.6	35.1	287.5
	5~9인	2.1	1.1	20.7	17.7	58.4	393.4
	10인 이상	2.6	0.0	1.9	17.2	78.3	571.4

주: 월평균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으며, 건설업(266만 3천원) 및 공공서비스업(245만 5천원)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수가 0(자영업자)인 경우 월평균소득은 151만 6천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사업체 규모가 1~4인일 경우에는 자영업의 1.9배, 5~9인 경우에는 2.6배,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3.8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 4 절 사업체의 창업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293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작한 사업체의 창업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표 8-11>를 통해 창업주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보다는 90% 이상이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주의 경우가 자영업자보다 창업비율이 다소간 더 높았다.

<표 8-11>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

(단위: %)

	전체	고용주	자영업자
창업	90.5	94.2	88.1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려받음	4.9	3.7	5.7
기타	4.6	2.1	6.2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는 응답자에게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가를 <표 8-12>를 보면, 응답대상자의 74.0%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사업비용을 조달하였으며, 정부의 보조 및 지원은 전체 사업비 구성에서 0.6%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한 자본금 조달비중이 70.4%,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용자가 17.5%를 차지하며, 정부의 보조 및 지원은 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는 가족, 친지를 통한 자본금 조달 비율이 76.6%로 고용주에 비해 6.2%p 정도 높은 데 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 으로부터의 용자는 11.6%로 고용주보다 약 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2〉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

(단위: %)

	전체	고용주	자영업자
본인 또는 가족, 친지	74.0	70.4	76.6
동업자	4.2	4.0	4.4
은행 등의 용자	14.0	17.5	11.6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3.9	4.4	3.4
사채업자	1.2	1.5	1.0
정부의 보조	0.6	0.4	0.8
기타	2.0	1.8	2.2

제 9 장

생활 · 직무 만족도 및 건강과 생활

본 장에서는 15세 이상 개인 응답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 직업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둘째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 셋째 개인의 건강 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다루어 왔다면, 이 장은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다.

제1절에서는 직업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들로 1차년도 조사부터 포함된 직무 만족도, 직무 불일치도 등을 다루고자 한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1차년도부터 취업자의 일자리에 관해서 임금, 취업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를, 특히 임금근로자의 경우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복리후생제도에 관한 만족도를 묻고 있으며, 3차년도 조사부터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교육이나 기술(기능) 수준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 혹은 기술(기능) 수준 간의 불일치도를 1차년도 조사부터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본인의 기술(기능)의 유용성에 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제2절에서는 생활 전반과 관련하여 생활 만족도를 다루고자 한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있다.

제3절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개인의 건강에 대한 문항들은 지난 4차년도 부가조사<sup>39)</sup>에서 자세하게 질문하였으며, 6차년도 조사에서 핵심적인 문항을 중심으로 본 조사(개인용 설문과 신규용 설문)에 추가하여 질문하였다. 6차년도에 추가된 건강관련 문항은 현재의 건강상태, 육체적 장애 여부, 질병에 대한 진단경험 등이다.

## 제 1 절 직무만족도 및 불일치도

### 1. 직무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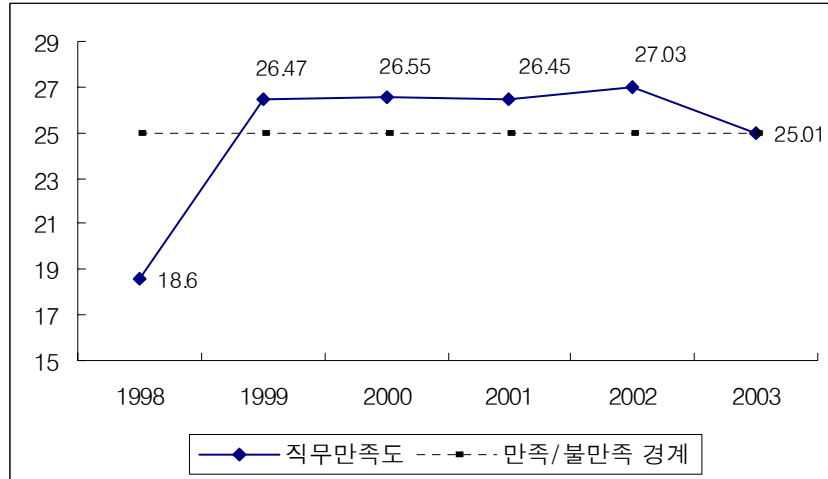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먼저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조사된 응답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다루고자 한다. 노동패널조사는 1차년도 조사부터 임금, 취업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복리후생제도 등 9개 항목에 관한 직무만족도를 문항에 포함하고 있으며, 3차년도 조사부터는 전반적인 직무만족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노동패널조사에서 직무만족 문항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9-1]을 통해서 연도별로 전반적인 직무만족 점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별도로 질문하고 있으나, 이 문항이 3차년도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에 1차년도부터 문항이 포함된 9개 항목을 합산하여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1998년 당시에는 당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직무만족에 관한 평균 점수가 만족보다는 불만족의 응답비중이 높아 만족/불만족 경계를 밑돌았으나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만족/불만족 경계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만족도 평균이 낮아져,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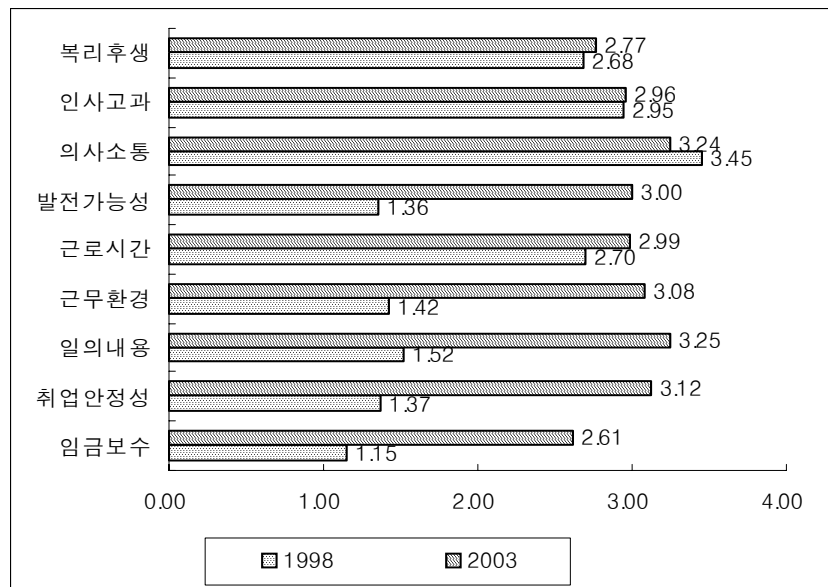
39) 4차년도 부가조사는 '건강과 은퇴'로 개인의 건강상태와 질병진단 여부,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림 9-1)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점수 추이(1998~2003년)



주: 제시된 결과는 9개 직무만족 항목의 평균점수의 합임(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45).

(그림 9-2) 각 항목별 직무만족도 점수 비교(1998년/2003년)



주: 제시된 결과는 평균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

[그림 9-2]에서는 각 항목별로 직무만족도 점수를 1998년과 2003년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의사소통 항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항목별 직무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98년에는 상대적으로 임금/보수나 취업안정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나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리후생 등에 관한 불만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03년에는 항목간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나는 편이었으나, 여전히 임금/보수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 점수가 6년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취업안정성(1998 → 2003 = 1.37점 → 3.12점)과 일의 내용(1.52 → 3.2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무만족 점수가 낮아진 경우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3.45 → 3.24)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2003년을 중심으로 직무 만족의 항목별 차이와 인구학적 특성, 산업·직업별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9-1>은 직무 만족의 각 항목별로 응답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중(매우 만족+만족)이 높은 항목은 일의 내용(35.8%),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31.6%)였으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중(불만족+매우 불만족)은 임금/보수(46.2%), 복리후생제도(30.1%) 등이었다.

<표 9-1> 항목별 직업만족도 분포(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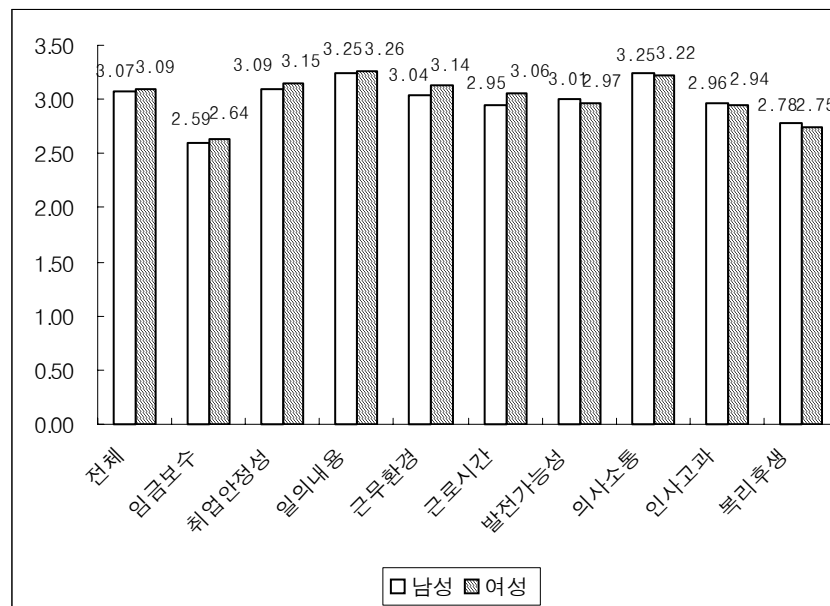
(단위: %)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임금/보수	0.4	12.5	41.0	40.2	6.0
취업안정성	1.6	30.3	48.3	17.9	1.9
일의 내용	2.4	33.4	52.0	11.5	0.7
근무환경	1.1	25.9	54.5	17.2	1.3
근로시간	0.8	26.2	46.8	24.0	2.3
발전가능성	1.3	20.4	57.4	18.7	2.3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2.1	29.5	59.5	8.1	0.8
인사고과의 공정성	0.7	13.6	69.1	13.8	2.9
복리후생	0.7	12.7	56.5	23.0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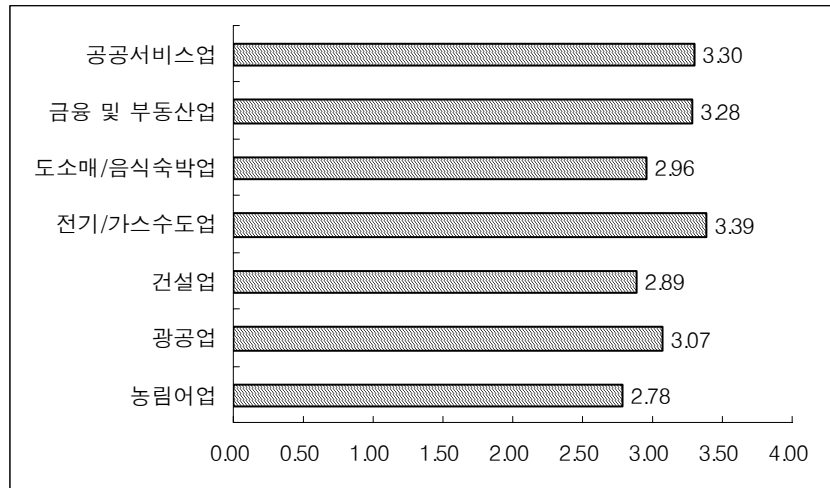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9-3]은 성별로 각 항목에 대한 직무만족 점수를 보여 준다. 먼저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남성(3.07점)보다는 여성(3.09)의 직무만족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만족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 항목은 개인의 발전가능성(남성 : 여성=3.01 : 2.97)과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3.25 : 3.22), 인사고과의 공정성(2.96 : 2.94), 복리후생(2.78 : 2.74) 등이다. 한편 그림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고용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3.12점)가 비임금근로자(3.0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임금근로자만 응답한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리후생을 제외하고 전 항목에서 임금근로자의 만족도가 비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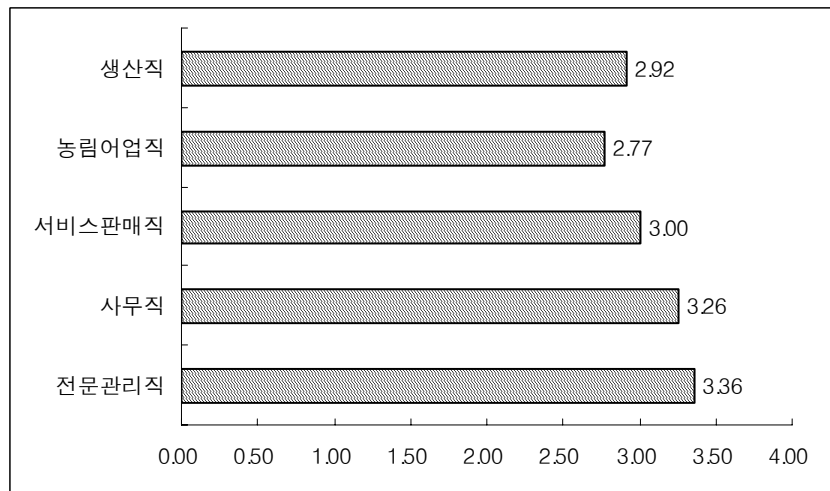
[그림 9-3] 성별직무만족도 점수 - 항목별(2003년)



[그림 9-4]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점수 - 산업별(2003년)



[그림 9-5]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점수 - 직업별(2003년)



[그림 9-4]와 [그림 9-5]는 산업별 및 직업별로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점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 결과를 살펴보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직무만족도가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직무만족 점수(3.30점)도 높

은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점수는 2.78로 다른 산업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직업별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의 직무만족 점수가 평균 3.36으로 보통이다(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직의 직무만족 점수는 2.77점으로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직무불일치와 기술(기능)의 유용성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인력 수급의 질적 불일치 실태와 관련하여 직무불일치와 기술(기능)의 유용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직무불일치는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의 수준(level)간의 차이나 내용(type)간의 차이에 따라 통상 구분되는데, 수준간의 차이와 관련하여 교육불일치를 측정하는 문항과 기술(기능)불일치를 측정하는 문항을 묻고 있다. 교육불일치는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과 공급 측면에서 본인의 교육수준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본인의 교육수준이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를 가리켜 하향취업 혹은 과잉교육이라고 부른다. 기술(기능) 불일치는 수요 측면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과 본인의 기술수준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만약 본인의 수준이 일자리의 수준보다 높다면 과잉(over)으로, 본인의 수준과 일자리의 요구수준이 동일할 경우 적합(fit)으로, 일자리의 요구수준이 오히려 높을 경우 과소(under)로 정의한다. 이에 관한 질문은 “현재의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능)수준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3항으로 구성된 2차년도를 제외하고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다시 3점 척도로 변경하여 과잉(수준이 매우 낮다, 수준이 낮은 편이다), 적합(수준이 맞다), 과소(수준이 높은 편이다,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로 표기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패널조사에는 2000년 조사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기능)의 유용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질문은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하시면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기술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직장에 들어갈 경우 얼마나 유용합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① 현 직장에서의 거의 똑같이 유용하다, ② 부



분적으로만 유용하다, ③ 거의 쓸모가 없다, ④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표 9-2>와 <표 9-3>은 2003년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과 기술(기능) 수준의 직무 불일치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표 9-2>를 통해 교육불일치를 살펴보면, 취업자 10명 중 2명 정도(22.8%)가 하향 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남성(23.5%)이 여성(21.9%)에 비해 과잉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과잉교육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재 및 중퇴를 제외하고 전문대졸자의 하향 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9-2> 인구학적 특성별 교육불일치 결과(2003년)

(단위: %)

		과잉(over)	적합(fit)	과소(under)
전 체		22.8	76.1	1.1
성 별	남 성	23.5	75.5	0.9
	여 성	21.9	76.9	1.2
연 령	20~29세	27.3	71.5	1.2
	30~39세	22.1	76.8	1.1
	40~49세	21.6	77.1	1.3
	50~59세	21.2	77.9	0.9
	60세 이상	21.2	78.5	0.3
교 육 수 준	고졸미만	18.0	81.5	0.5
	고졸	24.2	74.6	1.2
	대재 및 중퇴	41.4	57.7	0.9
	전문대졸	27.5	71.6	0.9
	대졸 이상	20.8	77.5	1.7

이어서 <표 9-3>을 통해 기술(기능) 불일치를 살펴보면, 취업자 중 21.6%가 과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교육불일치와 유사하게 남성(22.1%)이 여성(21.0%)보다 더 과잉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교육수준별 응답 유형 역시 교육불일치와 유사하게 젊을수록, 대재 및 중퇴이거나 전문대졸인 경우 과잉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9-3〉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불일치 결과(2003년)

(단위: %)

		과잉(over)	적합(fit)	과소(under)
전 체		21.6	77.5	0.9
성 별	남 성	22.1	77.1	0.8
	여 성	21.0	78.1	1.0
연 령	20~29세	26.3	72.9	0.8
	30~39세	21.5	77.6	0.9
	40~49세	19.7	79.2	1.1
	50~59세	20.1	79.3	0.7
	60세 이상	15.3	79.7	0.5
교육 수 준	고졸 미만	16.9	82.4	0.7
	고졸	22.4	76.8	0.8
	대재밋중퇴	39.2	59.0	1.8
	전문대졸	26.9	72.6	0.5
	대졸 이상	20.3	78.4	1.2

교육불일치 결과와 관련하여 젊은층의 하향취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일자리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대졸자의 하향취업이 높다는 것은 전문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점차 협소해지고 있으며 전문대졸자들의 교육투자 수익률도 고졸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기술(기능) 유용성에 관한 인구학적 특성별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9-4 참조). 성별로 보면, 본인의 기술(기능)이 유용하다는 응답 비중(똑같이 유용+부분 유용)의 경우 남성(83.9%)이 여성(76.4%)보다 7.5%p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의 경우 유용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의 경우 93.1%가 유용하다고 응답한 데 반해, 학력이 낮아질수록 본인의 기술(기능)이 유용하다는 응답의 비중도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9-6]과 [그림 9-7]은 산업별 및 직종별로 직무불일치와 기술(기능)유용성의 분포<sup>40)</sup>를 보여준다. 먼저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40) 직무불일치 비중은 '교육 혹은 기술 수준이 직무보다 높을 때(과잉)의 비중'을 의미하며, 기술유용성은 '똑같이 유용+부분 유용의 비중'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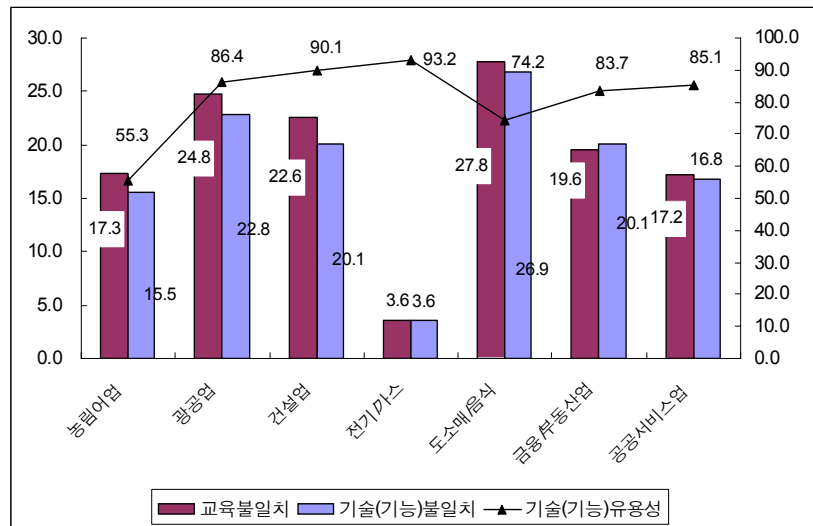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교육과 기술(기능) 과잉 비중이 각각 27.8%와 26.9%로 직무불일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표 9-4〉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 유용성 결과(2003년)

(단위: %)

		똑같이 유용	부분 유용	거의 쓸모 없음	특별한 기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아님
전 체		51.0	29.9	10.6	8.5
성 별	남 성	53.9	30.0	9.5	6.6
	여 성	46.6	29.8	12.3	11.3
연 령	20~29세	55.3	31.2	8.1	5.3
	30~39세	54.2	32.7	7.8	5.4
	40~49세	51.3	31.5	10.5	6.8
	50~59세	49.1	25.8	12.1	13.0
	60세 이상	36.6	21.4	21.2	20.8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43.7	25.7	15.2	15.4
	고 졸	47.7	33.2	11.6	7.5
	대재및중퇴	39.9	35.1	14.9	10.2
	전문대졸	58.9	29.1	7.4	4.5
	대졸 이상	63.9	29.2	4.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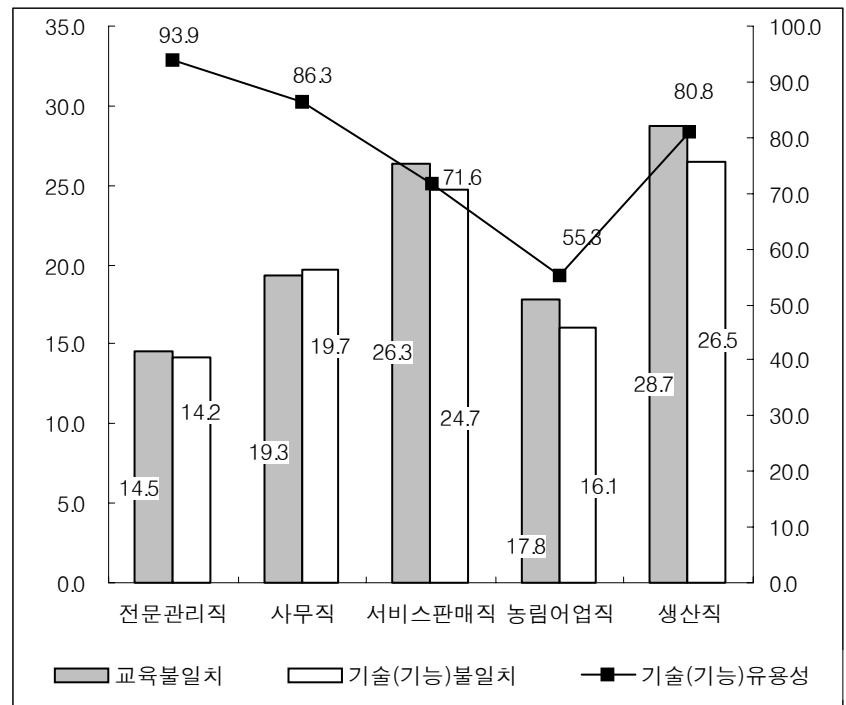
〔그림 9-6〕 산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2003년)



또한 기술(기능) 유용성의 비중은 농림어업(55.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직무불일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74.2%)이 기술(기능) 유용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직무불일치 비중이 3.6%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와 동시에 기술(기능) 유용성 정도(93.2%)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직무일치도가 매우 높은 산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그림 9-7]을 통해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의 경우 직무불일치는 가장 낮게, 기술(기능)의 유용성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생산직과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교육불일치 비중이나 기술(기능)불일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기술(기능) 유용성이 가장 낮은 직종은 농림어업으로 55.3%만이 현재 일자리의 기술이 다른 일자리에 들어갈 경우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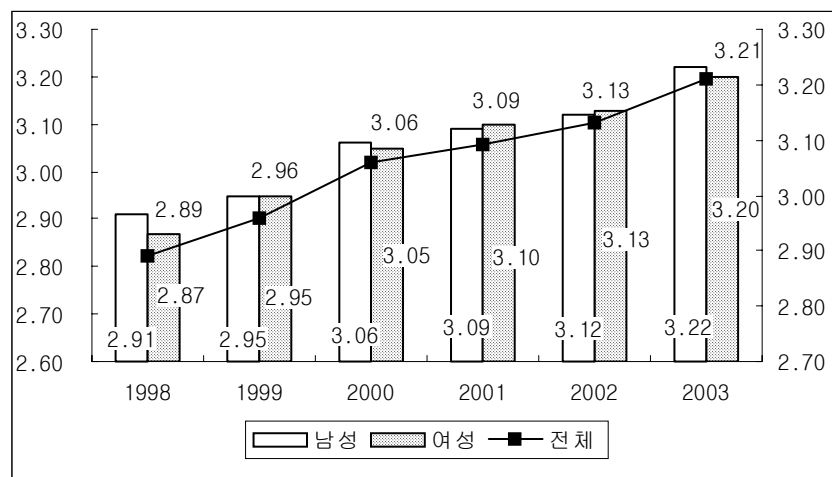
(그림 9-7) 직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2003년)



## 제 2 절 생활만족도

본 절에서는 생활 전반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림 9-8]은 지난 6년 동안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응답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1998년에 2.89점이던 생활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3.21점까지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유사한 응답 유형을 보여주었다. 다만, 연도별 추이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2.91 → 3.22)보다는 여성의 경우(2.87 → 3.20)가 약간 더 빠르게 생활에 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9-8]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점수(1998~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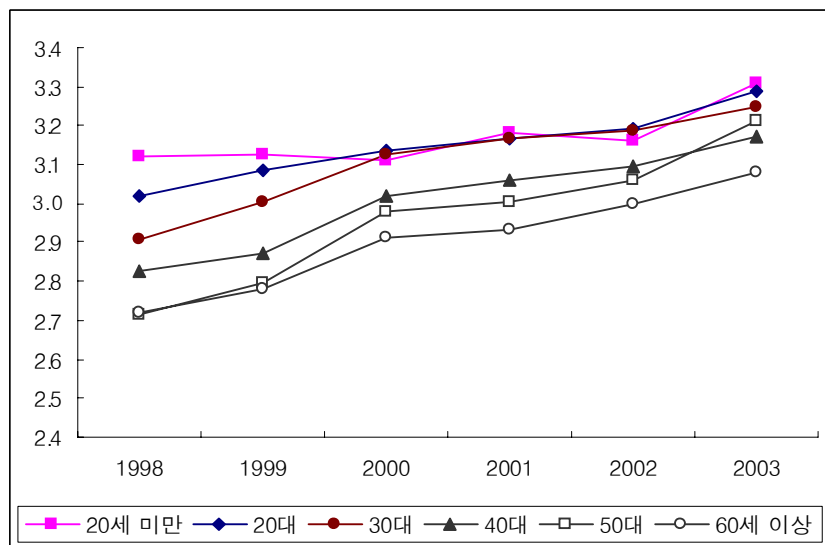
주: 제시된 결과는 평균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

[그림 9-9]는 연령별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연령별로는 큰 변별력이 없으나 젊은층일수록 생활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2003년 당시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해 보면, 20대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가 66.2점으로 가

장 높고, 60세 이상은 61.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30대 이하의 연령층의 경우 평균적으로 65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40대의 만족도는 63.4점에 머물렀다. 또 1998년에는 40대의 만족도가 50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 간격이 점차 좁아져 2003년에는 오히려 50대의 만족도가 40대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젊은층보다는 고령층일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이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50대의 경우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관측됐다. 20세 미만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가 1998년 당시 3.12점에서 2003년 당시 3.31점으로 0.19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대의 경우 0.27점(3.02 → 3.29), 30대의 경우 0.34점(2.91 → 3.25), 40대의 경우 0.34점(2.83 → 3.17), 50대는 0.49점(2.72 → 3.21), 60대 이상은 0.36점(2.72 → 3.08)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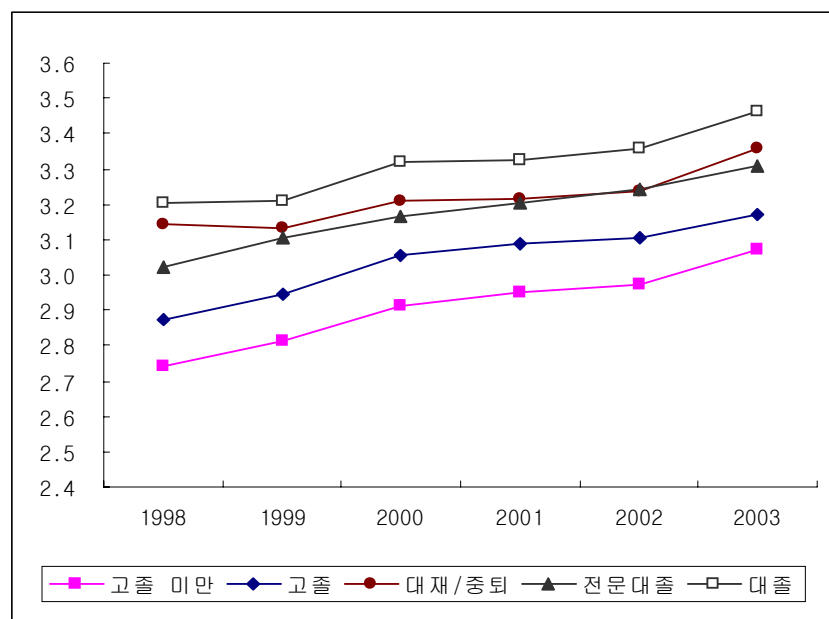
[그림 9-9]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점수 연령별 추이(1998~2003년)



[그림 9-10]은 교육수준별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도 평균 생활만족도 점수를 100점으로

로 환산했을 때 고졸 미만의 경우 61.4점인 데 비해서 대졸자는 69.2점으로 7.8점 가량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연도간 추이에 있어서는 저학력자일수록 좀더 빠르게 만족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고졸 미만이나 고졸자의 경우 1998년과 2003년 점수는 각각 0.33점, 0.30점 가량 증가했으나, 대재 및 중퇴는 0.22점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대졸자들도 0.25점 상승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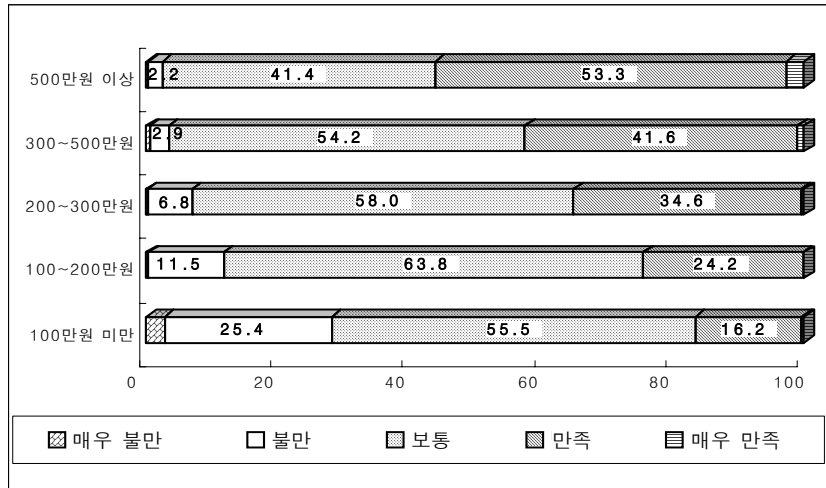
[그림 9-10]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점수 교육수준별 추이(1998~2003년)



다음으로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그림 9-11]과 같다. 그림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매우만족 + 만족)는 응답이 56%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6.5%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소득계층은 가구소득이 100~200만원인 가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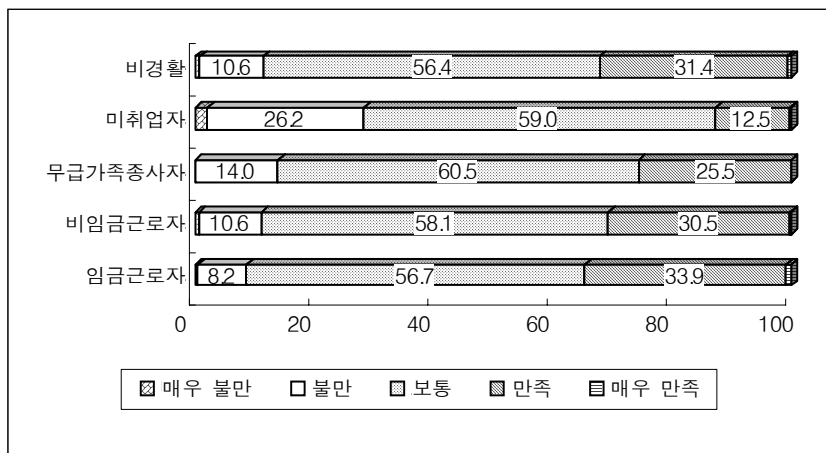
[그림 9-11] 소득수준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단위: %)



[그림 9-12] 경제활동상태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단위: %)



[그림 9-12]를 통해서 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별로 생활만족도를 알아 보았는데,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34.7%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비경활인구가 32.1%로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냈다.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불만)는 응답이 전체의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도 14.0%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생활만족도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혹은 가구의 소득수준 등과 같은 경제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5〉 항목별 생활만족도 분포(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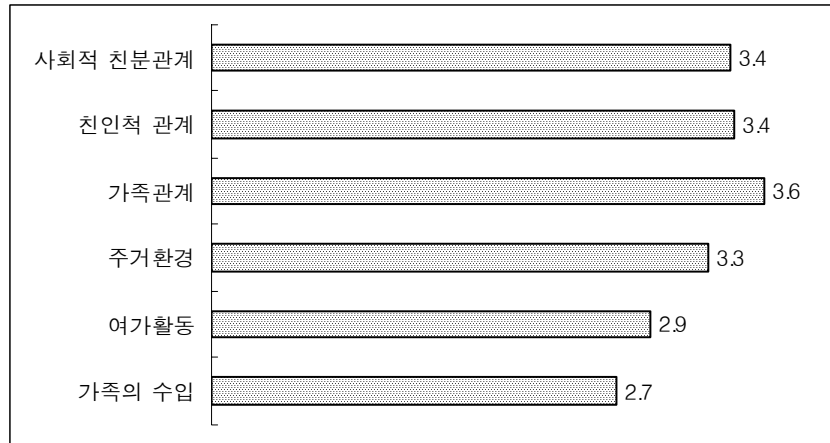
(단위: %)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 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가족의 수입	0.4	12.4	46.5	34.7	6.0
여가활동	0.5	21.6	47.0	28.3	2.6
주거환경	1.5	38.7	45.5	13.1	1.2
가족관계	5.1	57.2	34.0	3.2	0.4
친인척 관계	1.8	43.8	49.8	4.2	0.3
사회적 친분관계	2.3	40.7	52.6	4.1	0.3

마지막으로 <표 9-5>와 [그림 9-13]을 통해 항목별로 생활만족도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2003년도에 생활만족도를 묻는 일곱 가지 항목 중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은 가족의 수입(40.7%)과 여가(30.9%)로 나타났고, 만족스럽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가족관계(62.3%), 친인척관계(45.6%), 사회적 친분관계(43.0%)로 나타났다. 결국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불만족이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의 만족과 상쇄되어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13]은 각 항목별 생활만족도의 평균점수를 제시한 것으로, 이 역시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3.6점)이 가장 높고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2.7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각 항목의 만족도를 구해 보면, 소득이 낮은 가구는 단지 가구의 수입이나 주거환경과 같은 항목에서만 만족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모든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9-13] 항목별 생활만족도 점수 비교(2003년)



### 제 3 절 건강과 생활

이 절에서는 개인의 건강 생활에 관련된 문항들을 다루고자 한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4차년도 조사에서 건강과 은퇴에 관한 부가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후 5차년도에는 건강 생활에 관한 문항들을 질문하지 않았으나, 6차년도에 다시 건강 관련 문항들을 조사하였다. 노동패널조사가 포함하고 있는 건강관련 문항들은 ① 전반적인 건강상태 ② 장애 및 육체적 제약 여부 ③ 질병 진단경험 여부 등이며, 질병 진단경험 여부를 제외하고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패널조사에서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관련된 문항은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등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표 9-6>을 통해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54.6%가 건강한 편이다(아주 건강 + 건강)고 응답했으며, 건강하지 않다(건강하지 않음 + 건강이 아주 안 좋음)는 응답은 17.1%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강상태에 관한 평균점수는 3.4점이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일 경우에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60.4%에 이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그보다 11.2%p 낮은 49.2%에 그쳤다. 또한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하다는 응답의 비중(20세 미만 82.7% → 60세 이상 19.9%)은 현격하게 감소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자(20세 미만 1.9% → 60세 이상 49.5%)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인 경우에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32.8%)이 가장 높았고, 대학재학 및 중퇴자일 경우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78.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대학재학 및 중퇴자일 경우 청년층의 비중이 높고 고졸 미만인 경우에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학력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연령으로 인한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

<표 9-6> 인구학적 특성별 전반적 건강상태(2003년)

(단위 : %)

		건강함	보통임	건강하지 않음
전 체		54.6	28.2	17.1
성 별	남 성	60.4	26.1	13.5
	여 성	49.2	30.3	20.5
연 령	20세 미만	82.7	15.4	1.9
	20~29세	76.9	19.9	3.2
	30~39세	65.5	27.0	7.5
	40~49세	51.6	35.2	13.2
	50~59세	38.9	35.6	25.6
	60세 이상	19.9	30.7	49.5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37.7	29.6	32.8
	고졸	58.3	30.2	11.5
	대재 및 중퇴	78.6	18.6	2.8
	전문대졸	68.6	24.5	6.9
	대졸 이상	66.0	28.6	5.4

<표 9-7>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와 객관적인 지표인 실제 병원진단 경험<sup>41)</sup>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건강

41) 노동패널에서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들은 암, 관절염, 요통, 위염, 만성간염, 당뇨 등 16개 항목의 질병에 해당되며, 이 중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라도 병원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진단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현재 투병중<sup>42)</sup>이라는 응답이 0.3% 가량 있었다. 반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현재 투병중일 확률은 8.1%로, 건강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서는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나, 진단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도 91.3%에 달해 개인이 느끼는 건강상태가 병원의 진단 여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중 한 가지 이상의 장애/육체적 제약<sup>43)</sup>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46.9%로 높게 나타났으나, 건강하다고 응답한 개인의 경우에는 0.6%만이 장애/육체적 제약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이상에서 개인이 느끼는 건강상태는 병원의 진단 경험보다는 감각기관 장애 혹은 육체적 제약, 활동 제약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표 9-7〉 건강상태별 진단경험 및 장애/육체적 제약 여부(2003년)

(단위: %)

	진단경험			장애/육체적 제약	
	완치	투병중	없음	있음	없음
건강함	0.2	0.3	99.5	0.6	99.4
보통	0.6	1.1	98.4	4.1	95.9
건강하지 않음	0.6	8.1	91.3	46.9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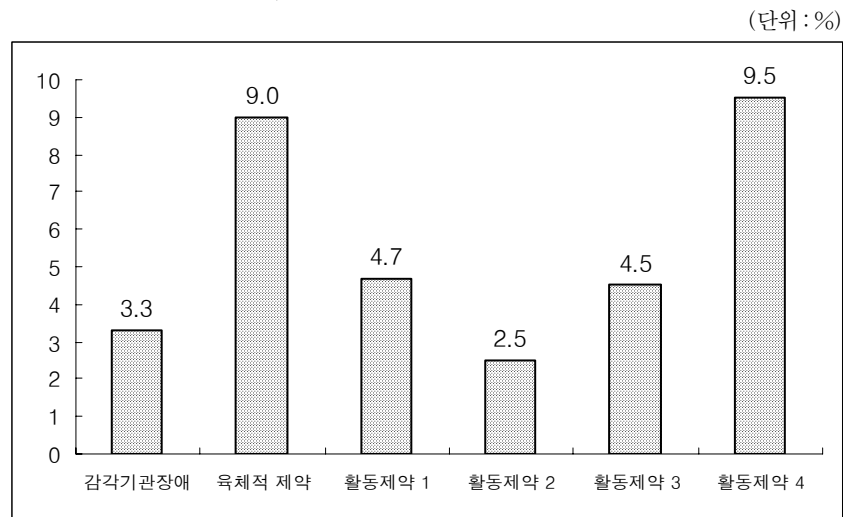
장애/육체적 제약 여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그림 9-14]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신체의 장애/제약 여부 중 직업 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옷 입기, 목욕하기 등과 같이 집안에서의 활동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

42) 진단경험은 ① 있지만 완치되었다. ② 있어서 치료중이다. ③ 있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④ 없다. 등 4가지 응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투병중이란 ②번과 ③번, 즉 진단 받은 적이 있어서 치료중이거나, 진단을 받은 적은 있지만 치료는 받지 않았다는 응답에 해당한다.

43) 노동패널조사에서 장애/육체적제약과 관련하여 묻고 있는 항목은 총 6가지 항목으로 ① 시각, 청각 등 감각기관 장애 ② 걷기, 계단오르기 등 육체적 제약 ③ 배우기, 기억하기 등이 어려움 ④ 옷입기, 목욕하기 등이 어려움 ⑤ 쇼핑하기, 병원가기 등이 어려움 ⑥ 직업 활동을 하기 어려움 등이다. 이때 해당 장애 혹은 제약 지속적인 현상일 때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③~⑥의 경우에는 해당 활동을 6개월 이상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답은 2.5% 정도에 그쳤고, 걷기·계단오르기·물건운반하기 등의 육체적 활동에 제약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도 3.3%에 지나지 않았다.

[그림 9-14] 항목별 장애/육체적 제약



주: 활동제약 1 :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에 어려움 있음.  
 활동제약 2 : 옷입기, 목욕하기 등 집안을 돌아다니는 데 어려움 있음.  
 활동제약 3 : 쇼핑하기, 병원가기 등 집 밖을 돌아다니는 데 어려움 있음.  
 활동제약 4 : 직업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도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41.1%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데 반해,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지 7.5%만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단 경험 유무의 비중 또한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장애 혹은 육체적 제약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26.4%가 그렇다고 응답해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 9-15]와 [그림 9-16]은 산업별과 직종별로 건강상태를 살펴본 것이다. 그림에 의하면 농림어업직일 경우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37.5%에 불과했으며, 병원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비중이 2.8%,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7%로 가장 건강상태

가 안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기·가스 및 수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중(53.9%)은 높지 않았으나,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나 제약을 느낀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금융, 부동산업(67.0%)이었으며, 공공서비스업은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비중(1.2%)이 가장 낮게 나타난 산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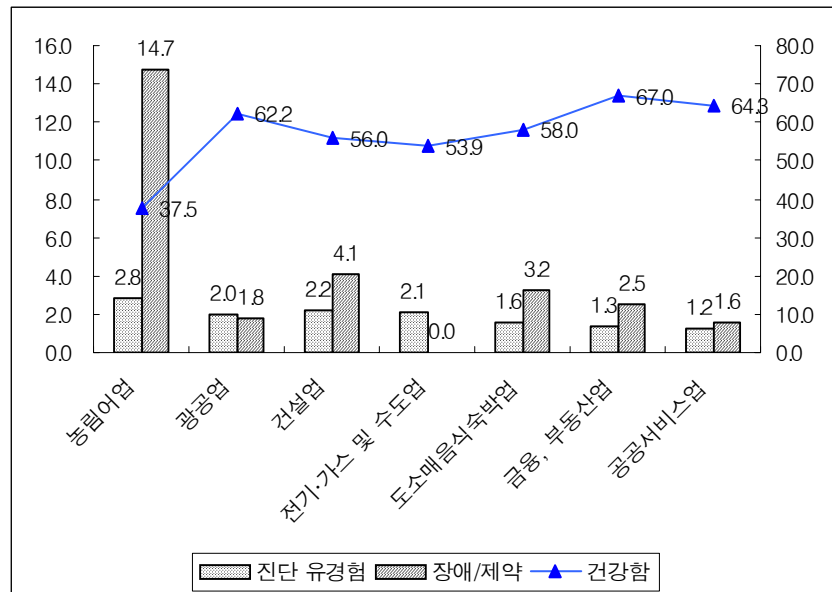
〈표 9-8〉 가구소득수준별 건강상태 비교(2003년)

(단위: %)

	전반적 건강상태			진단경험 유무		장애/제약 유무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00만원 미만	32.5	26.4	41.1	4.8	95.2	26.4	76.6
100~200만원	54.6	29.5	15.9	2.3	97.7	8.1	92.0
200~500만원	61.7	28.3	10.0	1.4	98.6	4.7	95.3
500만원 이상	64.6	27.9	7.5	1.0	99.0	3.6	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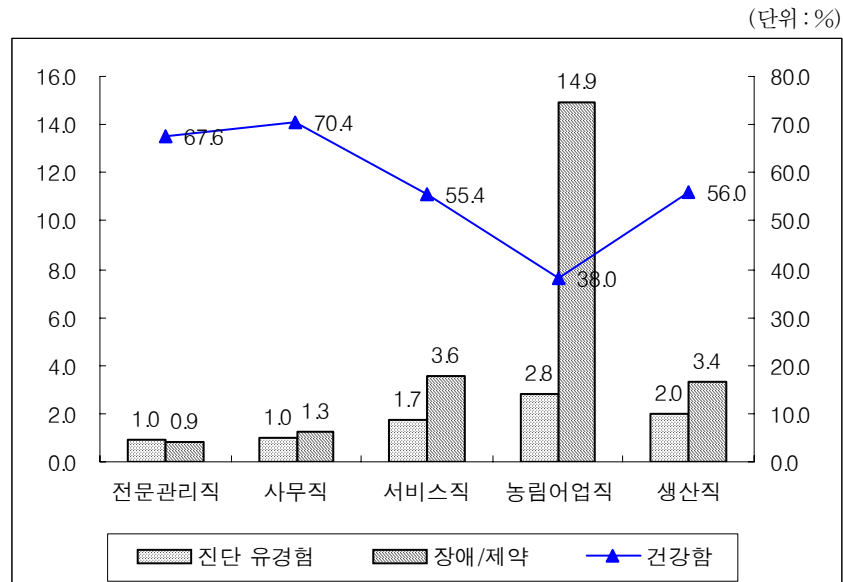
(그림 9-15) 산업별 건강상태 비교(2003년)

(단위: %)



직종별로도 농림어업직의 경우가 다른 직종에 비해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농림어업직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단지 38.0%에 그쳤으며, 14.9%가 일상적인 활동에 장애를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전문관리직의 경우 진단을 받은 경험과 장애/육체적 제약이 경험한 비중은 각각 1.0%, 0.9%로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직종은 사무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대체로 이들이 강한 육체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종사자의 상당 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9-16] 직종별 건강상태 비교(2003년)



제 10 장

중 · 고령자 부가조사

한국노동패널(KLIPS)에서는 당해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조사로서 부가조사를 하고 있다. 3차년도(2000년)에는 만 30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경제활동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졌고, 4차년도(2001년)에는 ‘건강과 은퇴’의 주제로 만 15세 이상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노동시장의 활동과 연계된 내용이 다루어졌으며, 만 45세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을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개인과 은퇴하지 않은 개인으로 나누어 은퇴생활 및 은퇴계획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건강과 은퇴’에 이어 6차년도(2003년)에는 만 50세 이상의 ‘중 · 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자의 은퇴생활과 비은퇴자의 은퇴계획 및 노후생활 준비, 그리고 가족관계 및 경제적 부양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6차년도 ‘중 · 고령자’ 부가조사에 응답한 만 50세 이상의 개인은 모두 3,530명이고, 이들은 완전은퇴자 1,171명,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기는 했으나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자 65명, 비은퇴자 1,530명, 생애 취업경험이 없는 자 76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노동패널 4차년도 ‘건강과 은퇴’와 6차년도 ‘중 · 고령자’ 부가조사에서는 은퇴를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조사 당시 시점에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개념화하고, 은퇴상태에 있는 개인을 은퇴자로 정의하였다. 이 같은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현재의 주된 경제활동참가 여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반영된 가장



적절한 정의로 평가될 수 있겠다.

본 장에서는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은퇴자와 비은퇴자로 구분하였는데, 완전은퇴자와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는 1,023명을 ‘은퇴자’로 설정하고,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은퇴하지 않은 자 1,530명을 ‘비은퇴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은퇴자의 은퇴시기 및 은퇴사유를 성별로 나누어 비교하고, 이들의 은퇴 전 생애일 자리의 특성과 은퇴 이후의 소득수준을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비은퇴자가 계획하고 있는 은퇴연령과 현재의 경제활동의 내용, 그리고 노후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의 경제적 준비를 파악하였다. 제3절에서는 전체 중·고령자의 가족관계와 사회활동을 분석하였다.

## 제 1 절 은퇴자

### 1. 은퇴시기 및 은퇴사유

여기에서는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중 일자리에서 완전히 은퇴하였거나,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1,023명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시기와 은퇴사유를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체 은퇴자 중 완전은퇴자는 982명이고, 성별로 나누었을 때 남자 492명, 여자 490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는 은퇴자의 수는 총 41명 중 남자 28명, 여자 13명으로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두 배 가량 된다.

<표 10-1>은 분석대상자인 은퇴자를 조사 당시 소일거리 여부를 기준으로 ‘완전은퇴자’와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는 자’로 나누고 그 비율과 평균연령을 성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전체 은퇴자의 평균연령은 67.1세이고, 완전은퇴자의 경우(67.3세)가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는 은퇴자(63.3세)보다 평균연령이 4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연령수준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표 10-1> 은퇴자 구분

	전 체		남 자		여 자	
	비율	평균연령(세)	비율	평균연령(세)	비율	평균연령(세)
완전 은퇴	96.0	67.3	94.6	68.2	97.4	66.3
은퇴 후 소일거리	4.0	63.3	5.4	63.2	2.6	63.5
전 체	100.0	67.1	100.0	67.9	100.0	66.2

한국노동패널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는 은퇴자의 은퇴사유를 1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 은퇴사유를 <표 10-2>와 같이 ① 정년퇴직으로, ② 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 ③ 본인건강상의 이유로, ④ 가계의 여유 또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 ⑤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등 5가지로 범주화하였다.

<표 10-2> 구체적 은퇴사유의 분류

	구체적 은퇴 사유
① 정년퇴직	· 정년퇴직으로 인해
② 권고사직/명예퇴직	·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인해 · 해고/일시해고 등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 고용주나 일로부터의 압박감 때문에
③ 본인건강	· 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④ 가계여유 또는 여가	· 본인의 수입이 은퇴를 해도 될 만큼 여유가 있어서 · 배우자의 수입이 은퇴를 해도 될 만큼 여유가 있어서 ·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 더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⑤ 가족원 돌보기	·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서 ·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 결혼/출산/육아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에 입각하여 <표 10-3>에서는 은퇴사유의 분포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주된 은퇴사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가 4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권고사직/명예퇴직(16.4%)과 정년퇴직(14.5%)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에 따른 은퇴가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52.5%)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의 건강 이외의 사유로는 남성과 여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는 정년퇴직(25.4%)과 권고사직/명예퇴직(20.0%)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성의 경우는 가족원 돌보기(17.7%), 가계의 여유 또는 여가(13.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은퇴가 일자리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여건에 기인하는 결과의 성격이 강하고, 여성의 은퇴는 가족여건에 기인하는 것임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자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성별의 차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3〉 성별 은퇴사유

(단위: %)

	전 체	남 자	여 자
정년퇴직	14.5	25.4	3.2
권고사직/명예퇴직	16.4	20.0	12.7
본인건강	46.9	41.5	52.5
가계여유 또는 여가	11.5	9.2	13.9
가족원 돌보기	10.7	3.9	17.7
전 체	100.0	100.0	100.0

〈표 10-4〉는 은퇴사유에 따라 평균 은퇴연령을 성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우선 은퇴자 전체의 평균 은퇴연령은 56.8세이고, 정년퇴직으로 은퇴한 은퇴자의 은퇴연령이 59.6세로 가장 늦은 시기에 은퇴하며, 본인의 건강(57.9세), 권고사직/명예퇴직(56.7세) 순으로 늦게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정년퇴직→본인의 건강→가계여유 또는 여가의 순으로 은퇴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족원 돌보기’의 사유로 은퇴한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 은퇴연령의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성의 경우는 가족원을 돌보기 위하여 은퇴하더라도 은퇴연령(57.3세)이 권고사직/명예퇴직(57.1세)이나 가계여유 또는 여가(57.5세)로 인한 은퇴사유를 갖는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여성의 경우는 평균 은퇴연령이 46.5세로 권고사직/명예퇴직(56.2세)이나 가계여유 또는 여가(57.1세)로 인한 은퇴의 경우와 매우 큰 차이

를 보였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이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1차적으로 여성이 그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성의 조기은퇴에 대한 논의는 자녀의 양육서비스 지원체계 또는 가사서비스 지원체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4〉 은퇴사유별 은퇴연령

(단위: 세)

	전 체	남 자	여 자
전체 평균	56.8	58.3	55.2
정년퇴직	59.6	59.6	59.6
권고사직/명예퇴직	56.7	57.1	56.2
본인건강	57.9	58.2	57.7
가계여유 또는 여가	54.9	57.5	57.1
가족원 돌보기	48.5	57.3	46.5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평균 은퇴연령이 감소하였고 조기 은퇴율이 증가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은퇴자의 은퇴사유는 은퇴시기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은퇴사유를 은퇴시기별로 나누어 <표 10-5>와 같이 제시하였다. 5가지 범주의 은퇴사유의 비중이 은퇴시기의 분포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은퇴한 경우가 1997년과 1999년 사이에 가장 높은 비율(27.9%)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는 달리 본인의 건강으로 인한 은퇴가 1997년 이전에 비해 1997년과 1999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고, 가계의 여유 또는 여가로 인한 은퇴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여성의 주된 은퇴사유가 되는 가족원 돌봄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 그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3년 동안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조기은퇴자가 양산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은퇴는 감소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해당되는 대상자 수가 매우 적기는 하나 가족원을 돌보기 위한 여성의 은퇴

가 상대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의 은퇴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석 안에서 그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5〉 은퇴사유와 은퇴시기

(단위: %)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본인건강	가계여유/ 여가	가족원 돌봄	전 체
1991 이전	17.6	17.9	26.3	34.8	46.8	26.8
1991~96	32.4	26.8	28.5	32.2	17.4	28.1
1997~99	30.4	27.9	14.8	17.9	12.8	19.2
2000~2003	19.6	27.4	30.4	16.1	23.0	25.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은퇴사유별 사례수가 적으므로 1997년 이전은 6년 간격으로, 1997년 이후 시기는 3년 간격으로 묶어서 제시하였음.

## 2. 은퇴자의 성별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과 현재 소득

은퇴 이전의 생애 주된 일자리가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가에 따라 은퇴 이후 경제적 복지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은퇴 및 노후생활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다. 즉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자본의 특성은 생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활동의 경험과 생애노동시장의 경력 및 임금 등은 은퇴 이후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은퇴자의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직업, 종사상 지위, 근속연수, 월평균 근로소득과 같은 생애 주된 일자리의 특성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은퇴자의 총 소득의 정도도 성별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표 10-6〉은 인구학적특성과 생애 주된 일자리특성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각 특성별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인구학적 특성의 하나인 연령에 있어서 전체의 50.8%를 차지하는 남성의 평균연령은 67.9세로 66.2세인 여성보다 1.7세 높고,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여성의 무학비율이 남성보다 3배 가량 높은 반면에 대졸 이상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6배 정도 높아 4년의 평균 교육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교

육수준의 차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지위에도 영향을 미쳐 남성보다는 여성이 낮은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10-6〉 성별 인구학적 특성 및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단위: %)

	특성	범주	전체	남자	여자
			100.0	50.8	49.2
전체			100.0	100.0	100.0
인구 학적 특성	연령	50~59세	20.9	15.0	27.0
		60~69세	40.6	43.6	37.4
		70~79세	29.3	32.7	25.8
		80세 이상	9.2	8.7	9.8
		평균(세)	67.1	67.9	66.2
	교육수준	무학	24.6	12.7	36.9
		초졸 이하	29.5	23.3	36.1
		초졸 이상~고졸 미만	18.6	23.8	13.2
		고졸~대졸 미만	17.8	24.4	10.9
		대졸 이상	9.5	15.8	2.9
평균(년)	7.0	9.0	5.0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65.9	85.4	45.7	
	무배우자	34.1	14.6	54.3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직업	전문·사무직	24.4	34.6	13.9
		판매서비스직	19.9	12.1	28.0
		농림어업직	22.6	16.4	29.1
		생산직	18.8	25.2	12.1
		단순노문·기타직	14.3	11.7	16.9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41.9	51.2	32.4
		임시·일용 임금근로자	15.3	12.9	17.7
		고용주·자영업자	28.4	33.6	22.9
		무급가족종사자	14.5	2.3	27.0
	근속연수	10년 미만	30.5	21.7	39.6
		10~20년 미만	26.7	28.1	25.3
		20~30년 미만	18.1	25.2	10.7
		30년 이상	24.7	25.0	24.4
		평균(년)	18.9	20.3	17.5
	월평균 근로소득	50만원 미만	37.3	22.7	52.5
		50만~100만원 미만	26.0	21.5	30.6
		100만~200만원 미만	17.1	25.2	8.7
		200만~300만원 미만	10.0	15.8	4.0
300만원 이상		9.6	14.8	4.2	
평균(만원)	136.0	180.4	90.1		

또한 여성의 무배우자비율이 남성보다 3.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은퇴 이전 생애 주된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직업이 전문·사무직(34.6%)이나 생산직(25.2%)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여성은 판매서비스직(28.0%)이나 농림어업직(29.1%)의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남성의 절반 이상(51.2%)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일한 것과는 달리, 여성은 32.4%만이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일한 것과도 연계된다. 무엇보다도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에 있어 여성(27.0%)이 남성(2.3%)에 비해 12배 정도 높다는 것은 중·고령자 여성의 노동이 부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일자리에서의 근속연수는 남성이 20.3년 여성이 17.5년으로, 예측했던 것보다는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하기 전에 일자리를 통해 얻은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는데, 남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80만 4천원으로 여성(90만 1천원)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지 않은 비율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해 온 것에 기인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차이가 은퇴 이후의 소득수준에도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에서는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 9가지 항목으로 측정된 소득원천을 <표 10-7>과 같이 5가지 범주(① 근로소득, ② 연금소득, ③ 자산소득, ④ 이전소득, ⑤ 기타소득)로 나누어 은퇴 후 소득원천과 소득수준을 살펴보았다.

<표 10-8>에서는 위의 9가지 항목의 소득원천이 모두 없다고 응답한 247명을 제외한 776명을 대상으로 성별 소득원천을 비교한 것이다. 기타소득에 응답한 세부내용의 93.1% 정도가 자녀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소득원천이 없다고 응답한 247명의 경우도 자녀 및 친인척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들의 응답을 기타항목으로 간주하여 분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각 소득원천별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소득액수가 조사되지 않아 이들을 포함하여 은퇴 후 소득정도를 파악할 경우 편의(bias)가 생길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들을 제외한 776명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소득원천과 월평균 소득액수를 분석하였다.

〈표 10-7〉 소득원천의 분류

	구체적 소득원천
① 근로소득	· 본인의 근로소득(임금, 사업소득 등) · 배우자의 근로소득(임금, 사업소득 등)
②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 개인연금소득(은행, 보험회사 등에 개인이 가입한 연금)
③ 자산소득	· 금융자산소득(저축, 주식, 보험 등) · 부동산소득(임대수입 등)
④ 이전소득	· 사회보험소득(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등) ·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⑤ 기타소득	· 그 외 기타 소득(가족원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 등)

〈표 10-8〉 성별 소득원천

(단위: %)

	소득원천	전체	남자	여자
근로소득	본인	5.1	5.2	4.8
	배우자	21.5	19.2	24.7
연금소득	공적연금	11.7	16.8	5.1
	개인연금	0.3	0.2	0.3
자산소득	금융	4.1	5.7	2.1
	부동산	10.1	12.9	6.2
이전소득	사회보험	2.4	2.7	2.1
	정부/사회단체보조금	14.8	11.6	19.0
기타소득	기타 소득원	30.0	25.7	35.7
	자녀소득/자녀가주는 용돈	74.2	76.1	72.5
	친지보조금	18.9	17.7	20.0
	그 외	0.9	0.9	0.8
	무응답	6.0	5.3	6.7
	소 계	100.0	100.0	100.0
전 체		100.0	100.0	100.0



<표 10-8>에 제시한 은퇴 이후의 성별 소득원천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타소득(30.0%)의 소득원천을 갖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배우자의 근로소득(21.5%), 정부나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14.8%)이 그 다음 순이다. 기타의 소득원천을 갖는 비율이 적지 않은 것은 은퇴자가 자녀를 비롯한 친인척의 사적이전소득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양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오랫동안 유교문화권하에서 가족원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의 덕목으로 자리잡아 온 우리의 역사·문화적 배경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찍이 공적연금제도가 정착된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노년기의 주된 소득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사회의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고령층에 대한 부양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타소득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소득원천은 근로소득 중 배우자의 소득으로, 여성(24.7%)이 남성(19.2%)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원천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16.8%)이고, 여성의 경우는 이전소득 중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비(19.0%)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금을 비롯한 공적소득보장체계가 경제활동참가자 및 노동시장의 경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남성의 경우는 은퇴 이후 소득원천으로 공적연금을 가지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은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비를 받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사적이전소득이나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부양이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은퇴 후 소득의 상당부분이 사적이전자원의 형태이든 동거를 통한 부양이든 간에 자녀를 비롯한 가족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곧 은퇴 후 소득원천이 가족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 10-9>에서는 가족형태를 ① 1인 단독, ② 부부, ③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 ④ 한 부모와 그의 자녀, ⑤ 비핵가족으로 나누고, 소득원천의 5가지 범주가 아닌, 구체적인 소

특항목 9가지에 따른 은퇴 후 소득원천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1인 단독 은퇴자의 경우는 가족 및 친지의 사적이전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응답이 60.2%로 나타났고, 이를 제외하고는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는 비율(21.2%)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가족과 부부 및 그들의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경우는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원천으로 밝혀졌다. 한 부모 자녀의 가족이나 비핵가족의 경우는 1인 단독 은퇴자의 경우와 같이 기타소득(각각 42.5%, 37.8%)과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금(각각 25.0%, 24.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적자원이전을 통한 경제적 부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9> 가족형태와 은퇴 후 주 소득원천

(단위: %)

	1인	부부	부부+미혼 자녀	한 부모+자녀	비핵가족
본인 근로	2.7	4.5	7.6	2.5	4.7
배우자 근로	0.9	24.2	41.7	-	13.9
공적연금	4.4	18.3	12.3	5.0	9.5
개인연금	-	-	-	-	1.0
금융자산	1.8	5.9	5.2	5.0	2.2
부동산자산	7.9	11.9	12.3	17.5	5.2
사회보험	0.9	2.3	3.8	2.5	2.2
정부/사회단체보조금	21.2	8.7	6.6	25.0	24.4
기타	60.2	24.2	10.5	42.5	37.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0-10>은 은퇴자의 은퇴사유별 평균 소득원천의 수 및 월평균 소득액을 성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전체 은퇴자는 은퇴 후 월평균 80만 1천원의 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월평균 소득액(94만 7천원)이 여성(61만원)보다 33만 7천원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은퇴사유에 따른 월평균 소득액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정년퇴직으로 은퇴한 경우가 116만 2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은퇴한 경우는 월평균 소득액에 있어서는 83만 8천원으로, 가계의 여유 또는 여가로 은퇴한 경우에 이어 세 번째의 순위를 나타내었다. 이는 은퇴 이후의 소득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의 경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으로 은퇴한 경우가 월평균 119만 2천원으로, 가계의 여유 또는 여가의 사유로 은퇴한 경우 137만 4천원에 이어 두 번째의 순위를 나타내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가족원을 돌보기 위한 사유로 은퇴한 경우(95만 1천원), 가계여유 또는 여가(93만 2천원), 정년퇴직(83만 3천원)의 순으로 많은 소득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도 분석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46.9%) 은퇴사유가 본인 건강으로 은퇴한 경우이고, 이 사유로 은퇴한 은퇴자가 성별에 상관없이 은퇴 후 가장 낮은 소득을 갖는다는 것은, 이들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일정수준의 경제적 복지를 유지하기 힘든 집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은퇴자들을 취약집단으로 고려하여 절대빈곤층이 아니더라도 이들에 대한 별도의 소득보장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10〉 은퇴사유별 평균 소득원천의 수 및 월평균 소득액

(단위: 만원)

	전 체	남 자	여 자
전체 평균	80.1	94.7	61.0
정년퇴직	116.2	119.2	83.3
권고사직/명예퇴직	83.8	95.1	61.4
본인건강	54.8	68.0	42.1
가계여유 또는 여가	113.7	137.4	93.2
가족원 돌보기	95.5	96.8	95.1

## 제 2 절 비은퇴자

### 1. 경제활동 및 은퇴계획 연령

조사 당시에 경제활동상태에 있었던 비은퇴자들의 일자리 특성과 은퇴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은퇴상태 측정에서 '은퇴하지 않았다'에 응답한 1,530명을 분석하였다. 먼저 <표 10-11>에 제시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만 50세 이상이면서 은퇴하지 않은 비은퇴자들의 62.6%가 남성이고 37.4%가 여성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가 대략 6 대 4 정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58.1세이고, 60세 이상자가 36.0%로 높게 나타나, 고령자의 경제활동비율이 적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교육연수는 8.8년으로

<표 10-11> 비은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범 주	비 율
	전 체	100.0
성 별	남 자	62.6
	여 자	37.4
연 령	50~54세	35.8
	55~59세	28.2
	60세 이상	36.0
	평균(세)	58.1
교육수준	초졸 미만	12.3
	초졸~고졸 미만	50.7
	고졸	25.2
	초대졸 이상	11.8
	평균(년)	8.8
취업형태	임금	50.2
	비임금	49.8

중등학력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졸 미만 학력을 갖는 비율이 63.0%에 이르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고령 비은퇴자의 취업형태는 임금 50.2%, 그리고 비임금 49.8%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비은퇴자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직업에 있어서는 판매서비스직(22.2%)과 생산직(21.8%)의 분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고용주·자영업자의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근속연수에 있어서는 평균 근속연수가 14.9년이나 5년 미만 일한 비율이 35.2%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월평균 소득도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비율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 당시의 일자리가 이들의 생애 주된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비은퇴자들의 일자리특성은 성별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컨대, 직업분포에 있어서 남성은 생산직(28.4%)과 전문·사무직(23.2%)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판매서비스직(34.3%)과 농림어업직(24.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도 남성은 고용주·자영업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8.0%,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35.2%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여성은 고용주·자영업자(27.5%), 무급가족종사자(27.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근속연수에 있어서는 남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이고 여성이 14.6년으로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5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갖는 비율이 여성이 38.6%로 33.2%인 남성에 비해 5.4%p 가량 높았다. 직업과 종사상지위분포, 그리고 근속연수 범주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는 근로소득에서 보다 큰 차이로 확연하게 나타났다. 즉 남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66만 9천원, 여성은 82만 9천원으로 금액차가 84만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남성 소득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우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비율이 65.1%이나, 200만~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비율은 7.8%로 남성(15.8%)의 절반 수준이고,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비율은 4.6%로 17.3%인 남성이 여성에 비해 3.7배 가량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여성 중·고령자들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로서 판매서비스나 농림어업직 등 낮은 근로소득을 얻는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노동시장 내에서 매우 낮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퇴하지 않은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은퇴계획연령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은퇴자들의 은퇴계획 유무와 계획하고 있는 은퇴연령을 살펴보았다. <표 10-14>에 제시된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은퇴계획연령을 살펴보기에 앞서, 비은퇴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에 정년제도가 있는가의 유무와 정년연령을 분석하였다. <표 10-13>은 비은퇴자의 현재 일

<표 10-12> 비은퇴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단위: %)

범 주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100.0	62.6	37.4
		100.0	100.0	100.0
직업	전문·사무직	11.8	23.2	11.2
	판매서비스직	22.2	15.1	34.3
	농림어업직	19.5	16.4	24.6
	생산직	21.8	28.4	10.8
	단순노무·기타직	17.7	16.8	19.1
종사상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32.0	35.2	26.7
	임시·일용 임금근로자	16.4	14.9	18.8
	고용주·자영업자	40.3	48.0	27.5
	무급가족종사자	11.3	1.9	27.0
근속연수	5년 미만	35.2	33.2	38.6
	5~10년 미만	15.6	15.2	16.3
	10~20년 미만	15.9	17.0	14.0
	20~30년 미만	15.4	18.4	10.4
	30년 이상	17.9	16.2	20.7
	평균(년)	14.9	15.0	14.6
월평균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	42.6	35.6	65.1
	100~200만원미만	29.2	31.3	22.5
	200~300만원 미만	13.9	15.8	7.8
	300만원 이상	14.3	17.3	4.6
	평균(년)	146.7	166.9	82.9

자리에서의 정년 유무와 평균 정년연령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비은퇴자의 15.3%만이 현재 일자리에 정년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표 10-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반 이상의 비은퇴자가 고용주·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로 비임금근로자이고, 임시·일용의 임금근로자의 비율도 16.4%로 적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자리에 정년이 있는 경우 평균 정년연령은 60.3세이고, 남성(59.9세)이 여성(61.1세)보다 정년시기가 다소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3> 현재 일자리의 정년 유무와 정년연령

	비율	성별	비율	평균 정년(세)
전체	100.0			60.3
있다	15.3	남자	79.7	59.9
		여자	20.3	61.1
없다	84.7	남자	56.6	-
		여자	43.4	

<표 10-14>는 비은퇴자의 은퇴계획 유무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계획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77.5%는 은퇴계획이 없고, 22.5%만이 은퇴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일자리의 정년 유무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자발적으로 은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은퇴계획이 있는 비은퇴자가 계획하고 있는 평균 은퇴연령은 62.9세이다. 이는 제1절에서 분석한 은퇴자의 실제 은퇴연령 56.8세와 비교해 보았을 때 6년 가량 늦은 시기로, 현실적인 은퇴시기와 계획 또는 희망하고 있는 은퇴시기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은퇴자의 은퇴계획연령을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성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성별(남성:62.7세, 여성:63.5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연령범주별로 나누어 보면 현재의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계획하고 있는 은퇴연령은 50~54세 집단 59.9세, 55~59세 집단 61.1세,

60세 이상 68.9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계획하고 있는 은퇴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초졸 미만의 경우가 67.0세, 초대졸 이상의 경우가 61.5세이다. 취업형태로 구분해 보았을 때에는 임금근로자(62.8세)보다는 비임금근로자(66.8세)의 계획연령이 더 늦은 시기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금근로자의 은퇴는 자발적이기보다는 비자발적일 가능성이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10-14〉 비은퇴자의 은퇴계획 유무와 은퇴계획연령

(단위: 세)

특 성	비율/범주	은퇴계획연령
은퇴할 계획이 전혀 없다	77.5%	
은퇴계획이 있다	22.5%	
성 별	남자	62.7
	여자	63.5
연 령	50~54세	59.9
	55~59세	61.1
	60세 이상	68.9
교육수준	초졸 미만	67.0
	초졸~고졸 미만	63.7
	고졸	61.2
	초대졸 이상	61.5
취업형태	임금	62.8
	비임금	66.8
전체 평균		62.9

## 2.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적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연금), 예금·적금, 저축성 보험 등의 납부와 주식 등의 투자 등을 중심으로 한 노후생활 준비와 관련된 항목을 납부(투자)여부와 납부(투자)금액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은퇴하지 않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노후의 경제적 생활을 위하여 측정 항목들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10-15>는 비은퇴자들의 연금과 저축, 그리고 주식투자 여부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각 항목별로 납부 및 투자 여부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항목에 납부하고 있는 비율이 36.2%로 가장 높고, 여성(19.0%)보다 남성(46.4%) 납부자 비율이 2.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의 경우가 여성들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과는 달리,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통하여 별도의 연금 상품에 납부를 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비은퇴자의 6.3%에 불과하였다. 예금·적금과 저축성 보험과 같은 경우는 납부비율이 12.7%로 금융권의 연금 상품보다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은퇴하지 않은 중·고령자들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연금 이외에는 별도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0-15> 노후생활과 관련 연금, 예·적금, 주식투자 여부

(단위: %)

	전 체		남 자		여 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공적연금	36.2	63.8	46.4	53.6	19.0	81.0
사적연금	6.3	93.7	7.7	92.3	4.0	96.0
예금·적금, 저축성보험	12.7	87.3	15.3	84.7	8.4	91.6
주식, 유가증권	0.9	99.1	1.1	98.9	0.4	99.6

<표 10-16>은 위의 4개 항목에 납부 및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시한 것이다.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공적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비은퇴자들의 월평균 납부금액은 전체 평균 9만 7천원이고,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성(10만 3천원)이 여성(7만원)에 비해 3만 3천원 가량 더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평균 23만 4천원으로 나타난 사적연금의 납부금액에 있어서는 남성(23만 4천원)과 여성(23만 2

천원)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예금·적금과 저축성 보험 항목은 월납부액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 밝혀졌는데, 월평균 47만 8천원을 납부하며,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남성(48만 9천원)이 여성(45만 2천원)보다 3만 7천원 더 많았다. 미미한 비율의 비은퇴자들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난 주식 및 유가증권의 연간 총 투자금액은 전체가 7,589만원이고,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남성(8,594만원)의 경우가 여성(2,443만원)의 3.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6〉 노후생활과 관련 연금 또는 예금의 월납부액과 주식의 총 투자액  
(단위: 만원)

	전 체	남 자	여 자
공적연금(월)	9.7	10.3	7.0
사적연금(월)	23.4	23.4	23.2
예금·적금, 저축성보험(월)	47.8	48.9	45.2
주식, 유가증권(년)	7,589	8,594	2,443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비은퇴자들의 경제적 준비 정도가 이와 같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배우자와 본인의 노후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소득수준과 노후 생활을 위한 적정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표 10-17>은 비은퇴자들이 생각하는 최소소득수준과 적정소득수준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제시하고 성별로 비교한 것이다. 먼저 전체 비은퇴자가 생각하는 노후 생계를 위한 최소소득은 평균 108만 7천원이고, 노후 생활을 위한 적정소득은 이보다 37만 8천원 많은 146만 5천원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연령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 때 최소소득수준과 적정소득수준의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의 평균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50~54세 집단의 최소소득은 126만 4천원이고 적정소득은 171만원으로, 적정소득과 최소소득이 44만 6천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는 여성(38만 5천원)보다 남성(48만 6천원)의 경우가 더 많으며, 60세 이상(33만 4천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 차이를 나타냈다. 교육수준별로

는 최소소득과 적정소득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격차가 상당하며, 그 격차는 남성보다는 여성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전체 초졸 미만과 초대졸 이상의 최소소득의 차이는 112만 8천원이고, 적정소득의 차이는 156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 집단의 초졸과 초대졸 이상의 최소소득수준의 차이는 99만 1천원이고 적정소득수준의 차이는 142만 1천원이나, 여성은 이보다 더 많아 각각 141만 5천원과 216만 4천원의 차이를 보여, 비은퇴자가 생각하는 최소소득과 적정소득의 수준이 학력수준별로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업형태로 구분했을 때에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17〉 비은퇴자의 노후 생계를 위한 최소소득 및 적정소득

(단위: 만원)

	범 주	전 체		남 자		여 자	
		최소 소득	적정 소득	최소 소득	적정 소득	최소 소득	적정 소득
연 령	50~54세	126.4	171.0	135.7	184.3	111.6	150.1
	55~59세	112.4	150.7	121.0	161.3	92.7	126.5
	60세 이상	85.5	118.9	97.1	129.7	76.4	103.6
교육수준	초졸 미만	64.9	89.0	75.7	96.4	61.1	86.4
	초졸~고졸 미만	96.0	128.5	97.9	132.6	93.5	122.9
	고졸	123.2	164.2	124.3	164.5	119.5	163.2
	초대졸 이상	177.7	245.4	174.8	238.5	202.6	302.8
취업형태	임금	108.8	146.0	117.7	156.2	92.5	156.3
	비임금	108.6	147.0	118.4	161.2	93.7	161.2
전체 평균		108.7	146.5	118.0	158.6	93.2	126.1

〈표 10-18〉은 은퇴자와 비은퇴자의 최소소득수준과 적정소득수준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은퇴자와 비은퇴자가 생각하는 전체평균 최소소득과 적정소득 금액을 비교해 보면, 은퇴자보다는 비은퇴자가 생각하는 최소소득과 적정소득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은퇴자의 최소소득은 90만 4천원인데 비은퇴자의 경우

는 이보다 18만 3천원이 더 많은 108만 7천원이고, 적정소득은 은퇴자가 121만 8천원인데 비은퇴자는 이보다 24만 6천원이 많은 146만 4천원으로 응답하였다. 각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과 취업형태로 구분했을 경우는 은퇴자와 비은퇴자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른 은퇴자와 비은퇴자를 비교해 보면 비은퇴자가 모든 교육수준 범주에서 최소소득과 적정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8〉 은퇴여부에 따른 최소소득 및 적정소득 비교

(단위: 만원)

	범 주	전 체		은퇴자		비은퇴자	
		최소 소득	적정 소득	최소 소득	적정 소득	최소 소득	적정 소득
연 령	50~54세	126.4	171.0	126.1	167.6	126.4	171.0
	55~59세	112.4	150.7	110.2	154.8	112.4	150.0
	60세 이상	85.5	118.9	81.8	109.5	88.5	118.9
교육수준	초졸 미만	64.9	89.0	57.5	78.5	64.9	89.0
	초졸~고졸 미만	96.0	128.5	81.9	111.9	96.0	128.5
	고졸	123.2	164.2	116.8	154.3	123.2	164.2
	초대졸 이상	177.7	245.4	151.5	201.5	177.7	245.4
취업형태	임금	108.8	146.0	89.7	121.3	108.8	145.9
	비임금	108.6	147.0	130.6	157.6	108.6	146.9
전체 평균		108.7	146.5	90.4	121.8	108.7	146.4

### 제 3 절 경제적 교류 및 사회활동

#### 1.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및 부양

여기에서는 중·고령자가 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거나 주고 있는지의 여부와, 받거나 주고 있다면 누구로부터 어느 정도를 도움 받거나 주는가를 살펴보고, 부모님의 부양여부를 은퇴여부와 현재

의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은퇴자, 비은퇴자, 비경제활동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10-19>는 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은퇴자, 비은퇴자, 비경제활동자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체 중·고령자의 20.3%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은퇴자가 31.9%로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비경제활동자는 22.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비은퇴자는 9.0%만이 도움을 받는 것으로 밝혀져,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의 수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가?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된 각 가족원으로부터의 도움 여부를 살펴보면, 장남 또는 맏며느리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5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딸과 사위는 45.2%, 장남 이외의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38.0% 순이다. 각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장남·며느리'→'딸·사위'→'그 외의 아들·며느리' 순의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은퇴자의 경우는 장남과 맏며느리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64.9%로 전체평균 58.3%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아들과 며느리의 도움을 받는 비율도 전체평균 38.0%보다 다소 높은 40.1%를 나타냈다. 그러나 비은퇴자의 경우는 장남이나 맏며느리에게 도움 받는 비율이 은퇴자보다 16.4%p 낮은 48.5%이고, 장남 이외의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도움 받는 비율이 은퇴자의 경우보다 12.2%p 낮은 27.9%를 보였으며, 딸과 사위에게 도움 받는 비율도 은퇴자보다 3.1%p 낮은 42.1%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혼자녀에게 도움 받는 비율은 15.0%로 은퇴자(7.1%)나 비경제활동자(4.2%)에 비해 각각 2배, 3.5배 높았다. 한편 비경제활동자 집단의 경우는 은퇴자(43.6%)나 비은퇴자(42.1%) 집단에 비해 딸과 사위(50.9%)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남 이외의 아들과 며느리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41.1%로 은퇴자(40.1%)나 비은퇴자(27.9%)에 비해 높았다. 이 외 손자녀와 그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9>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수혜여부

(단위: %)

		전 체		은퇴자		비은퇴자		비경제활동자		전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20.3	79.7	31.9	68.1	9.0	91.1	22.7	76.3	100.0
도움 주는 가족	장남·며느리	58.3	41.7	64.9	35.1	48.5	51.5	51.4	48.6	100.0
	그 외 아들·며느리	38.0	62.0	40.1	59.9	27.9	72.1	41.1	58.8	100.0
	딸·사위	45.2	54.8	43.6	56.4	42.1	57.9	50.9	49.1	100.0
	미혼자녀	7.9	92.1	7.1	92.9	15.0	85.0	4.2	95.8	100.0
	손자녀· 배우자	0.8	99.2	1.2	98.8	0.0	100.0	0.6	99.4	100.0
	부모	0.3	99.7	0.0	100.0	1.5	98.5	0.0	100.0	100.0
	형제자매	0.8	99.2	1.2	98.8	0.8	99.2	0.0	100.0	100.0
	기타	1.6	98.4	2.3	97.7	0.6	99.4	0.8	99.2	100.0

<표 10-20>에는 가족에게 받는 지원금액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지원금액은 33만 5천원이고, 집단별로도 큰 차이가 없으나 은퇴자 34만 3천원, 비은퇴자 31만 4천원, 그리고 비경제활동자 33만 5천 원으로 은퇴자의 경우가 약간 많았다.

<표 10-20> 가족으로부터 받는 월평균 지원금액

(단위: 만원)

		전 체	은퇴자	비은퇴자	비경제활동자
전체 평균		33.5	34.3	31.4	33.5
도움 주는 가족	장남·며느리	24.5	25.0	22.7	24.3
	그 외의 아들·며느리	19.3	19.1	14.2	22.1
	딸·사위	17.5	15.9	18.2	19.9
	미혼자녀	43.4	38.6	54.1	32.4
	손자녀·배우자	17.5	12.6	-	40.0
	부모	20.0	-	20.0	-
	형제자매	9.8	7.4	20.0	-
	기타	21.4	20.1	30.1	24.8

이와 같은 월평균 지원금액을 도와주는 가족원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장남과 며느리로부터 도움 받는 금액은 전체 평균 24만 5천원이고, 집단 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개로 측정된 가족원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보이는 경우는 미혼자녀의 지원인데, 미혼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전체 월평균 43만 4천원 정도이고, 비은퇴자의 경우가 월평균 54만 1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비경제활동자의 경우는 장남 이외의 아들이나 며느리로부터 도움 받는 금액이 22만 1천원으로 은퇴자(19만 1천원)나 비은퇴자(14만 2천원)보다 많으며, 딸이나 사위에게서 받는 금액도 19만 9천원으로 은퇴자(15만 9천원)나 비은퇴자(18만 2천원)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중·고령자가 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면, 반대로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도 할 것이다. 이에 <표 10-21>과 <표 10-22>에서는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의 여부와 금액을 분석하였다. <표 10-21>은 중·고령자가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의 여부와 도움을 준다면 어떤 가족원에게 주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비율 20.3%에 못 미치는 전체의 5.6%만이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은퇴자의 경우가 9.1%로 가장 높았다. 도움을 누구에게 주는가를 살펴보면, 장남이나 맏며느리에게 도움을 주는 비율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은퇴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자가 장남이나 맏며느리에게 도움을 주는 비율이 5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중·고령자의 현재의 경제활동 여부가 자녀들에게 소득을 이전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비은퇴자의 경우는 딸이나 사위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비율이 37.1%로, 은퇴자(26.0%)나 비경제활동자(35.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은퇴자의 경우는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비율(33.6%)이 비은퇴자(23.2%)나 비경제활동자(19.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0-21〉 가족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

(단위: %)

		전 체		은퇴자		비은퇴자		비경제활동자		전 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5.6	94.4	3.8	96.2	9.1	90.9	1.7	98.3	100.0
도움 받는 가족	장남· 며느리	48.9	51.1	35.7	64.3	53.8	46.2	57.9	42.1	100.0
	그 외 아들·며느리	28.1	71.9	25.2	74.8	30.8	69.2	22.4	77.6	100.0
	딸·사위	33.6	66.4	26.0	74.0	37.1	62.9	35.3	64.7	100.0
	미혼자녀	25.9	74.1	33.6	66.4	23.2	76.8	19.8	80.3	100.0
	손자녀· 배우자	12.2	87.8	9.3	90.7	11.6	88.4	22.6	77.4	100.0
	부모	12.6	87.4	7.7	92.3	17.8	82.2	0.0	100.0	100.0
	형제자매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100.0
	기타	2.0	98.0	6.7	97.3	0.0	100.0	0.0	100.0	100.0

그렇다면 중·고령자가 가족에게 주는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표 10-22>에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월평균 금액을 제시하였다. 가족에게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은 전체 평균 41만 1천원이고, 비은퇴자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금액이 평균 46만 3천원으로 은퇴자(26만 5천원)나 비경제활동자(37만 3천원)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원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장남이나 며느리에게 지원하는 경우나 딸이나 사위에게 지원하는 경우는 비경제활동자의 월평균 지원금액이 각각 40만 9천원과 26만 4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지원하는 경우는 은퇴자의 월평균 지원금액이 28만 6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는 달리 미혼자녀에게 지원하는 경우나 손자녀와 그의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경우는 비은퇴자의 월평균 지원금액이 각각 77만원과 49만 8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혼자녀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경제활동자가 지원하는 금액도 월평균 50만 2천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반면,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월평균 19만 3천원 정도이고, 비은퇴자의 지원금액이 월평균 19만 8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다른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금액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10-22〉 가족에게 주는 월평균 경제적 지원금액

(단위: 만원)

		전 체	은퇴자	비은퇴자	비경제활동자
전체 평균		41.1	26.5	46.3	37.3
도움 주는 가족	장남·며느리	27.4	17.0	29.5	40.9
	그 외의 아들·며느리	20.1	28.6	15.3	9.0
	딸·사위	14.9	5.5	16.1	26.4
	미혼자녀	62.3	26.4	77.0	50.2
	손자녀·배우자	34.0	15.6	49.8	2.0
	부모	19.3	17.6	19.8	14.6
	형제자매	40.0	-	40.0	-
	기타	17.2	4.0	22.6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금액에 있어서는 미혼자녀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지라도 중·고령자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거나 혹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장남과 맏며느리이다. 전통사회에서 규범처럼 여겨 왔던 장남의 부모 부양의 의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족문화에 잔존해 있다. 다른 자녀들에 앞서 장남과 맏며느리에게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단적인 증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가?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는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부모님께서 현재 살아 계시는지의 여부와 살아 계시다면 생전하는 부모를 누가 부양하는지, 그리고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부모는 생전에 누가 부양했었는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에 결혼한 주부의 경우에는 시대 부모님을 제외하고 본인의 친정 부모님만을 고려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표 10-23〉과 〈표 10-24〉는 부모님 부양여부와 부양자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표 10-23〉을 살펴보면 23.6%의 중·고령자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장남과 맏며느리가 생존하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비율이 전체의 44.2%로 가장 높으며, 노부모 자신 34.2%, 장남 이외의 아들과 며느리 1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장남·며느리’→‘노부모 자신’→‘그 외아들·며느리’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표 10-23〉 부모님의 생존 여부와 부양자

(단위: %)

		전 체	남 자	여 자
부모 생존여부	살아 계시지 않다	76.4	72.9	79.4
	살아 계시다	23.6	27.1	20.6
부모님 부양자	노부모 자신	34.2	38.1	29.9
	장남·며느리	44.2	39.8	49.1
	그 외의 아들·며느리	13.9	16.2	11.3
	딸·사위	4.1	1.7	6.9
	자녀 모두 공동으로	2.6	3.3	1.7
	기타	1.0	0.8	1.0
전 체		100.0	100.0	100.0

〈표 10-24〉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양자

(단위: %)

		전 체	남 자	여 자
부모님 부양자	노부모 자신	18.2	19.5	17.1
	장남·며느리	66.7	63.9	69.0
	그 외의 아들·며느리	6.4	9.1	4.4
	딸·사위	2.6	0.6	4.2
	자녀 모두 공동으로	1.5	1.8	1.2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음	3.7	4.0	3.5
	기 타	0.9	1.1	0.6
전 체		100.0	100.0	100.0

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딸이나 사위가 부양하는 비율이 6.9%로 남자(1.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장남의 높은 부모님부양 비율은 생존하는 부모님보다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양에 있어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0-24>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누가 부양했는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장남과 맏며느리가 부모님을 부양한 비율이 전체의 66.7%이고, 여성의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은 69.0%를 차지하였다. 생존하는 부모님의 부양을 나타낸 <표 10-23>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장남과 맏며느리가 부양하는 비율은 현 시점에서 낮아졌으나, 노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부양하는 비율은 상당수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사회의 발달과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오랜 시간동안 가족 내에서 해결되어 왔던 노인부양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동거와 경제적 부양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가정 또는 가족 내에서 일정부분 해소되어 왔던 부양의 기능이 우리 사회의 공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새롭게 추가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2. 사회활동

여기에서는 친인척과의 교류 및 취미활동, 그리고 친목모임 등을 비롯한 중·고령자의 사회활동을 참여횟수와 참여 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10-25>는 친구나 이웃 또는 친척과 어느 정도 빈번하게 만나고 있는가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전체의 40.2%가 ‘거의 매일’ 만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37.0%)보다는 여성(43.0%)의 응답비율이 6%p 높았다. 일주일에 1회 이상 만난다는 비율은 전체의 30.1% 정도이고, 성별에 따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중·고령자의 60% 이상이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은 친구나 이웃 또는 친척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만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7%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9.0%로 나타나, 교류가 없이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6>에서는 교양과 취미활동의 이용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성별, 연령, 거주지역, 그리고 취업여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교양과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중·고령자들의 여가활용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9.9%로 72.4%인 남성에 비해 7.5%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이용시간의 분포를 보면, 남성의 경우는 ‘1시간 미만’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8.5%로 가장 높고, 여성의 경우는 ‘1시간’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10-25〉 친구, 이웃, 친척과 만나는 횟수

(단위: %)

	전 체	남 자	여 자
거의 매일	40.2	37.0	43.0
일주일에 1회 이상	30.1	29.8	30.3
한 달에 1회 정도	17.5	20.6	14.8
6개월에 1회 정도	3.6	4.4	2.9
거의 만나지 않는다	8.7	8.2	9.0
전 체	100.0	100.0	100.0

〈표 10-26〉 교양과 취미활동의 이용시간

(단위: %)

	범 주	5시간 이상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1시간 미만	활동 안함	전체
전 체		1.1	0.7	2.9	5.8	6.8	6.3	76.4	100.0
성별	남 자	1.1	1.2	3.4	5.8	7.6	8.5	72.4	100.0
	여 자	1.0	0.4	2.5	5.7	6.1	4.4	79.9	100.0
연령	50~54세	0.8	0.3	2.0	5.3	9.5	8.6	73.5	100.0
	55~59세	0.9	0.5	1.6	6.6	8.0	7.3	75.1	100.0
	60세 이상	1.2	1.0	3.8	5.6	5.4	4.9	78.1	100.0
거주지역	서 울	1.0	0.5	3.7	7.3	8.4	5.6	73.5	100.0
	광역시	0.9	1.0	3.4	5.3	7.4	8.6	73.3	100.0
	도	1.2	0.6	2.2	5.3	5.7	5.1	79.9	100.0
취업여부	취업자	1.4	0.8	3.3	6.5	7.3	6.0	74.7	100.0
	미취업자	0.1	0.6	1.4	3.1	5.2	7.1	82.5	100.0

연령범주별로 구분하여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활동 안함’의 비율이 높아 60세 이상자의 78.1%가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고 이용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60세 미만의 연령집단에서는 ‘1시간’ 이용한다는 비율이 각각 9.5%와 8.0%로 높으나, 60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는 ‘2시간’이용한다는 비율이 5.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양이나 취미생활을 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중·장년층에 비해 낮으나, 이용한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거주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활동 안함’의 비율이 도지역 79.9%로, 서울

73.5%, 광역시 73.3%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자가 교양 및 취미활동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고령자들이 교양 및 취미활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도 지역보다는 대도시 지역이 보다 용이한 것에 따르는 차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여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가 교양 및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취업자의 경우는 전체 평균 비율보다 낮은 74.7%이고, 미취업자는 이보다 7.8%p 높은 82.5%였다. 또한 취업자는 이용시간이 '1시간'이라는 비율이 7.3%이나, 미취업자의 경우는 '1시간 미만'이 7.1%로 활동 안하는 비율을 제외한 이용시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중·고령자의 취미활동이 경제활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중·고령자의 교양 및 취미활동참여의 정도가 이와 같다면, 종교모임이나 친목모임 또는 동호회 등의 참여는 어느 정도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10-27>에서는 '참여 안함'부터 '주2회 이상'까지 7가지 척도로 측정된 모임의 참여횟수를 성별, 연령, 거주지역, 그리고 취업여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참여 안함'의 응답비율이 전체의 38.8%로 교양 및 취미활동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자들이 교양 및 취미활동을 하는 비율은 낮지만 종교 또는 친목모임에는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35.6%)보다는 여성(41.5%)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주2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여성(11.8%)이 남성(6.9%)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안함'의 비율이 높았는데, 50~54세는 24.2%에 불과하나 60세 이상에서는 47.7%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주1회 이상'이나 '주2회 이상' 참여한다는 비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과 이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처럼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에 가깝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60세 이상 고령자집단의 구성원이 이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취

업여부로 나누어 보면, 교양 및 취미활동 참여와는 달리 취업자의 경우가 ‘참여 안함’의 응답비율이 39.9%로 34.9%인 미취업자에 비해 5.0%p 가량 높았다. 그러나 ‘주2회 이상’ 이용한다는 비율에 있어서는 취업자가 10.6%로 6.0%인 미취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0-27> 종교모임, 친목모임, 동호회 등의 참여 횟수

(단위: %)

	범 주	주2회 이상	주1회 이상	월 2~3회	월 1회 정도	월 1회 미만	참여 안함	전 체
전 체		9.6	12.1	11.4	17.8	10.3	38.8	100.0
성 별	남 자	6.9	12.5	13.9	18.9	12.2	35.6	100.0
	여 자	11.8	11.8	9.4	16.8	8.7	41.5	100.0
연 령	50~54세	10.0	15.3	15.9	23.3	11.3	24.2	100.0
	55~59세	7.2	13.9	14.1	23.5	11.6	29.7	100.0
	60세 이상	10.2	10.3	8.7	13.6	9.5	47.7	100.0
거주지역	서 울	10.3	17.7	7.9	21.2	6.1	36.8	100.0
	광역시	7.8	11.5	12.8	20.5	12.4	35.0	100.0
	도	10.3	9.8	12.3	14.3	11.1	42.2	100.0
취업여부	취업자	10.6	12.3	10.6	17.1	9.5	39.9	100.0
	미취업자	6.0	11.5	14.3	20.0	13.3	34.9	100.0

<표 10-28>에서는 특정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특정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은 전체의 19.0%이고, 남성이 19.3%로 여성(18.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입한 단체는 종교단체(45.3%)와 친목단체(36.4%)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남성은 동호회나 향우회 등의 친목단체에 가입한 비율이 45.6%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종교단체에 가입한 비율이 절반을 넘는 58.5%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주된 가입단체가 서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0-28〉 특정 단체 활동여부 및 활동단체 종류

(단위: %)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100.0	100.0	100.0
활동 여부	활동 안한다	81.0	80.7	81.3
	활동한다	19.0	19.3	18.7
활동단체	시민단체	1.9	2.4	1.5
	종교단체	45.3	30.3	58.5
	정당 및 정치단체	0.6	1.0	0.3
	환경보호단체	0.1	0.1	-
	소비자단체	0.4	0.7	0.2
	인권보호단체	-	-	-
	동호인단체	4.3	6.9	2.0
	문화 및 예술단체	1.3	1.0	1.5
	운동단체	4.3	4.0	4.4
	친목단체(동창회, 향우회 등)	36.4	45.6	28.3
	기 타	5.4	8.0	3.3
전 체		100.0	100.0	100.0